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00-00

정책보고서 2018-

일본의 경제·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 대응정책 분석



【책임연구자】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의 부부의 시간배분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와타나베 유이치(渡邊雄一)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유카와 시호(湯川志保) 테이쿄 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이윤석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조성호·와타나베 유이치(渡邊雄一)·유카와 시호(湯川志保)·
이윤석·최인선

제출문 <<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일본의 경제·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 대응정책 분석」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1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4 |
| 제2장 일본의 인구구조 및 경제·고용지표 변화 | 17 |
| 제1절 인구구조 지표 변화 | 19 |
| 제2절 경제·고용지표 변화 | 33 |
| 제3절 소결 | 53 |
| 제3장 일본의 사회현상 분석 | 55 |
| 제1절 1990년대의 주요 사회현상 | 57 |
| 제2절 2000~2010년 경의 주요 사회현상 | 64 |
| 제3절 2010년 이후의 주요 사회현상 | 77 |
| 제4절 소결 | 85 |
| 제4장 일본의 경제·고용·복지정책 | 89 |
| 제1절 골태방침(骨太対策, 경제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 | 91 |
| 제2절 경제정책 | 115 |
| 제3절 고용정책 | 137 |
| 제4절 복지정책 | 154 |
| 제5절 소결 | 186 |

| | |
|----------------------------------|-----|
| 제5장 일본의 경기부양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 | 195 |
| 제1절 디스플레이션과 금융정책 | 198 |
| 제2절 고령자고용정책과 공적연금제도와의 관계 | 204 |
| 제3절 소결 | 209 |
| 제6장 결론 | 211 |
| 제1절 최근 경기회복 국면에 대한 내각부의 견해 | 213 |
| 제2절 최근 일본 경제·고용 상태에 대한 일본 전문가 자문 | 214 |
| 제3절 결론 | 216 |
| 참고문헌 | 223 |
| 부록 | 227 |

표 목차

| | |
|---|----|
| 〈표 2-1〉 한국과 일본 남성의 미혼율 추이: 1990~2015년 | 29 |
| 〈표 2-2〉 한국과 일본 여성의 미혼율 추이: 1990~2015년 | 29 |
| 〈표 2-3〉 한국과 일본의 초혼연령 추이: 1990~2016년 | 32 |
| 〈표 3-1〉 정부 및 연구기관의 프리터에 대한 정의 변천 | 62 |
| 〈표 3-2〉 '니트'의 주요 정의 일람 | 64 |
| 〈표 3-3〉 파견직 노동자수 추이: 2005~2014년 | 67 |
| 〈표 3-4〉 실제 남성의 연 수입과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연 수입 | 70 |
| 〈표 3-5〉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 71 |
| 〈표 3-6〉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건수 추이: 1인 가구, 2010~2015년 | 81 |

그림 목차

| | |
|---|----|
| [그림 2-1]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 20 |
| [그림 2-2] 한국과 일본의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 20 |
| [그림 2-3] 연령집단별 인구규모 추이(한국): 1960~2065년 | 22 |
| [그림 2-4] 연령집단별 인구규모 추이(일본): 1947~2065년 | 22 |
| [그림 2-5] 연령집단별 인구비율 추이(한국): 1960~2065년 | 24 |
| [그림 2-6] 연령집단별 인구비율 추이(일본): 1947~2065년 | 24 |
| [그림 2-7] 연령집단별 종속인구자수 추이(한국): 1960~2065년 | 26 |
| [그림 2-8] 연령집단별 종속인구자수 추이(일본): 1947~2065년 | 26 |
| [그림 2-9] 연령계급별 미혼인구 비율 추이(한국남성): 1990~2015년 | 30 |
| [그림 2-10] 연령계급별 미혼인구 비율 추이(일본남성): 1990~2015년 | 30 |
| [그림 2-11] 연령계급별 미혼인구 비율 추이(한국여성): 1990~2015년 | 31 |
| [그림 2-12] 연령계급별 미혼인구 비율 추이(일본여성): 1990~2015년 | 31 |
| [그림 2-13] 한국과 일본의 실질GDP 추이 | 34 |
| [그림 2-14] 경제활동인구비율(한국남성): 1990~2017년 | 36 |
| [그림 2-15] 경제활동인구비율(일본남성): 1990~2017년 | 36 |
| [그림 2-16] 경제활동인구비율(한국여성): 1990~2017년 | 37 |
| [그림 2-17] 경제활동인구비율(일본여성): 1990~2017년 | 37 |
| [그림 2-18] 실업률(한국남성): 1990~2017년 | 39 |
| [그림 2-19] 실업률(일본남성): 1990~2017년 | 39 |
| [그림 2-20] 실업률(한국여성): 1990~2017년 | 40 |
| [그림 2-21] 실업률(일본여성): 1990~2017년 | 40 |
| [그림 2-22] 비정규직 비율(한국남성): 2003~2017년 | 42 |
| [그림 2-23] 비정규직 비율(일본남성): 2002~2017년 | 42 |
| [그림 2-24] 비정규직 비율(한국여성): 2003~2017년 | 43 |
| [그림 2-25] 비정규직 비율(일본여성): 2002~2017년 | 43 |
| [그림 2-26] 일본의 경제활동인구와 신규·유효구인배율(계정조정치) 추이(월별): 1990년 1월~2018년 10월 | 45 |
| [그림 2-27] 일본의 유효구인배율과 신규 구인수 추이(연차별): 1963년~2017년 | 46 |
| [그림 2-28] 일본의 연령 계급별 유효구인배율 추이: 1990년~2017년 | 48 |
| [그림 2-29] 일본의 업종별 신규 구인수 추이: 1996년~2017년 | 48 |
| [그림 2-30] 연령 계급별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및 비율(한국남성): 1990~2017년 | 50 |

| | |
|---|----|
| [그림 2-31] 연령 계급별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및 비율(한국여성): 1990~2017년 | 50 |
| [그림 2-32] 연령 계급별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및 비율(일본남성): 1990년 1월~2018년 7월 | 52 |
| [그림 2-33] 연령 계급별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및 비율(일본여성): 1990년 1월~2018년 7월 | 52 |
| [그림 3-1] 비정규직 비율 추이: 1990~2018년 | 58 |
| [그림 3-2] 25~34세 비정규직 비율 추이: 1990~2018년 | 58 |
| [그림 3-3] 프리터 수의 추이: 1992~2016년 | 63 |
| [그림 3-4] 졸업자의 유효구인배율 추이: 1990~2019년 | 65 |
| [그림 3-5] 생활보호수급자수·수급세대수·수급율 추이: 1960~2016년 | 66 |
| [그림 3-6] 20·30대 청년의 생활보호수급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2002~2016년 | 67 |
| [그림 3-7] 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생애주기 | 70 |
| [그림 3-8]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 72 |
| [그림 3-9] 자택에서의 사망수(65세 이상의 1인 가구 사망자 중) | 81 |
| [그림 3-10] EPA로 일본에 온 간호사수 추이: 2008~2017년 | 84 |
| [그림 3-11] EPA로 일본에 온 간호사수 추이: 2008~2017년 | 85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일본 경제는 1990년 초반 거품이 꺼지면서 지난 20~30 여 년간 경제 침체를 경험해오고 있으며 이를 ‘잃어버린 10년·20년’ 등으로 표현
 - 경제뿐만 아니라 인구학적으로도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4년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1970년 고령화사회, 1995년 고령사회, 200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¹⁾, 현재의 고령인구 비율은 27.3%(2016년)를 기록(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8)
- 우리나라도 1997년 IMF, 200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고,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시작
 -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1.05로 최저 기록을 갱신
 -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추계(통계청, 2018)
- 우리나라에 비하여 일본은 최근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인구학적 지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
 - 합계출산율은 2010년 이후 1.4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구인비율²⁾은 1.62를 기록

1)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7%를 고령화사회, 14%를 고령사회, 20%이상을 초고령사회라 정의
2) (구인건수/구직자수)로 계산되며, 1보다 클 경우는 구직자보다 구인건수가 많은 구직자 우위의 노동시장상

- 최근 일본은 경제·고용·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
 - 경제정책으로는 3개의 화살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신 아베노믹스, 인구정책으로는 소자화사회대책 및 고령사회대책, 지방창생 등이 대표적
 - 1억총활약사회 만들기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경제, 인구, 사회보장이 결합된 정책 실현이 목표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성장반등, 출산안정, 고용여건 개선 등 변화가 단순한 인구구조상 변화인지 정책적 노력의 결과인지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참고할만한 전략 및 정책 패키지를 도출하기 위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지난 20~30년 간 일본의 경제적·인구학적 지표 검토
 - 경제적 지표(경황률, 실업률, 유효구인배율, GDP 성장률 등)와 인구학적 지표(합계출산율, 연령별 인구비율 등)를 동시에 검토하여 경향성 도출
 - 한국과 일본 경제·사회 및 변화흐름 등의 유사성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구조적 문제와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
- 일본의 사회적 현상 사례 분석
 -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사회적 현상(초식남, 프리터 등)부터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현상 사례(중년 히키코모리 등) 발굴 및 분석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검토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 분석

- 즉, 한국에서 이미 나타난 사회 현상은 일본에서 나타난 시기와 한국에서 나타난 시기의 경제적·인구학적 지표를 함께 분석하고, 시기의 차이를 검토

□ 일본의 고용·복지 대응정책의 흐름

- 골태방침(경제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
- 고용정책기본방침
- 1억총활약 사회 만들기
- 소자화사회대책 및 고령사회대책 대강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전략(지방창생)

□ 구조적 문제 및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패키지에 대한 검토

- 일본의 사회 현상과 정책 대응의 관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성 설정

2. 연구방법

□ 경제적·인구학적 지표 검토

- 경활률, 실업률, 유효구인배율, GDP 성장률, 합계출산율, 연령별 인구비율, 연령별 미혼인구비율 등

□ 문헌 연구

- 일본의 사회 현상 사례 및 정책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한국 및 일본의 인구 및 경제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제 2 장

일본의 인구구조 및 경제·고용 지표 변화

제1절 인구구조 지표 변화

제2절 경제·고용 지표 변화

제3절 소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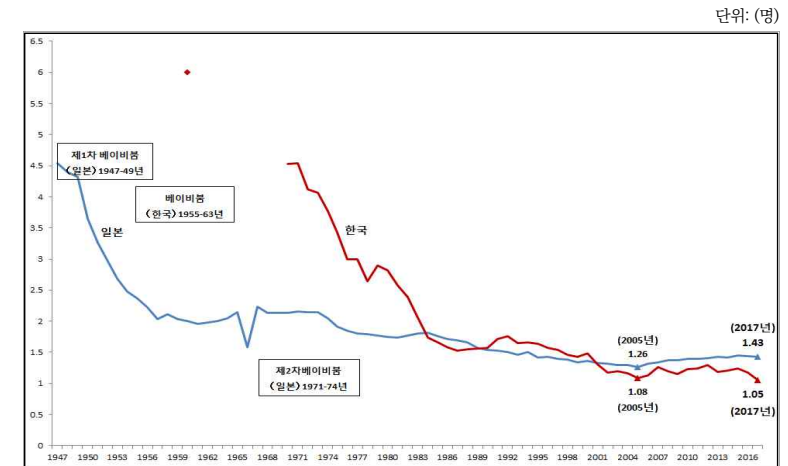
일본의 인구구조 및 경제·고용지표 변화

제1절 인구구조 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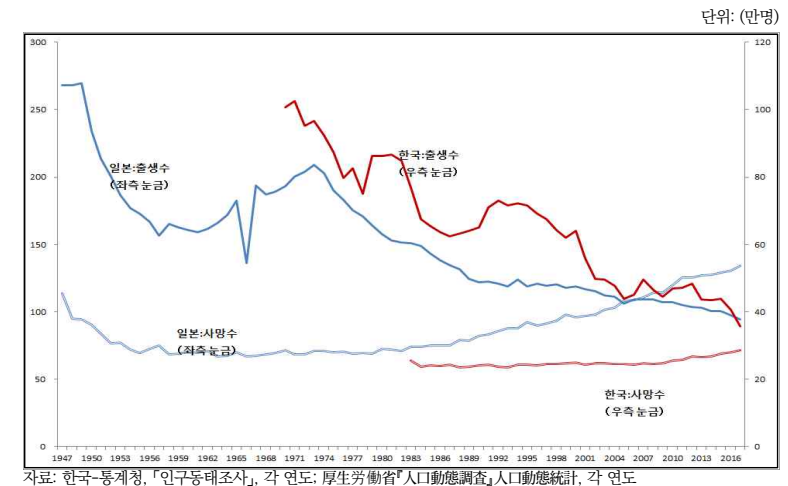
□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및 사망자수

- 합계 출산율은 1990년대에 걸쳐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1년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항상 낮게 유지되고 있음
 - 양국 모두 2005년에 최저점에 이르렀지만(한국: 1.08, 일본: 1.26), 일본은 2017년 1.43까지 증가함
 - 그러나 한국은 2005년 이후에도 증가하지 않고, 2013년경부터 양국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이후 한국은 2017년에 사상 최저치인 1.05를 기록함
- 출생 수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에 있었지만, 일본보다 한국의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7년 한국은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40만 명 밑으로 감소했고, 일본도 2016년부터 100만 명 밑으로 하락함
 - 1990년 대비 감소율은 일본이 22.6%인데 반해 한국은 44.9%임
 - 이는 한국에서 일본 이상으로 급격하게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의미함
- 사망자수는 일본이 전후 오랫동안 100만 명을 크게 밑도는 70만 명 정도로 안정적으로 변동해 왔지만, 198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 보임
 - 사망자수는 2003년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선 외에 2005년경에는 출생아수를 웃돌아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은 아직 출생아수를 넘어설 정도의 사망자수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 서서히 증가 경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1]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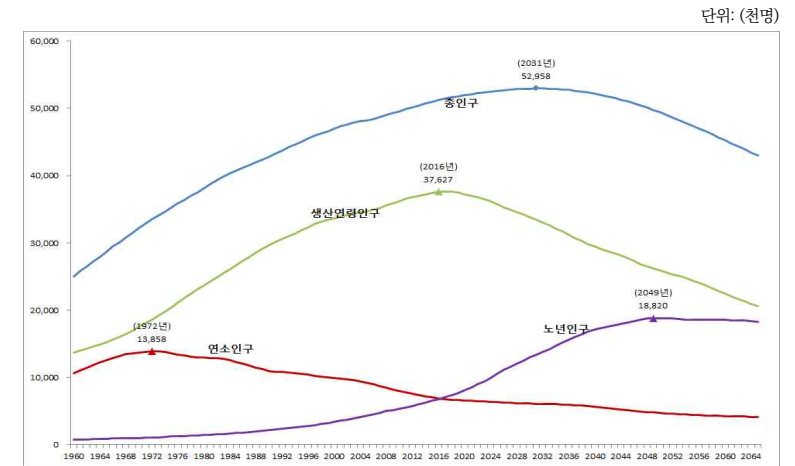
[그림 2-2] 한국과 일본의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 연령집단별 인구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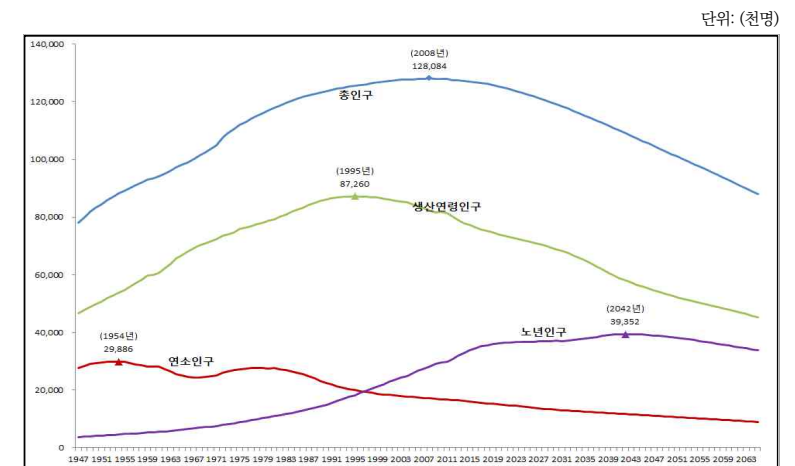
- 한국의 총인구는 중위 추계로 2031년에 피크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2008년에 정점을 맞이하여 인구 감소 사회에 돌입했으므로, 그 시차는 23년임
 - 또한,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정점은 한국이 2016년이므로, 일본의 1995년과는 21년 차이가 남
- 일본에서는 두 번의 베이비붐이 있었기 때문에(제1차: 1947~49년, 제2차: 1971~74년), 연소 인구(0~14세)가 두 번 정점에 달했다는 특징이 있음
 - 한편, 한국의 베이비붐은 한 번뿐이었기 때문에(1955~63년) 연소 인구의 정점도 한 번밖에 없음
- 노년 인구(65세 이상)의 정점은 향후 양국 모두 2040년대(일본: 2042년, 한국: 2049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에서는 2050년대 이후 노년 인구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노년 인구가 연소 인구를 웃도는 시기는 일본이 1996~1997년, 한국이 2016~2017년으로 정확히 20년의 시차가 있음

[그림 2-3] 연령집단별 인구규모 추이(한국): 1960~2065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2-4] 연령집단별 인구규모 추이(일본): 1947~20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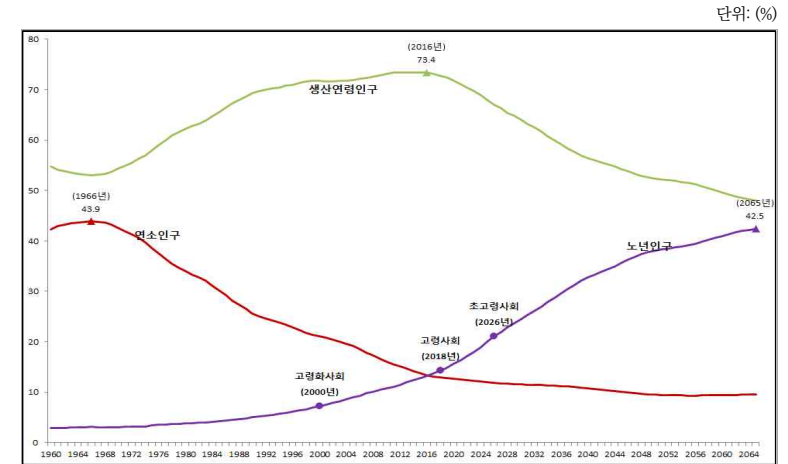


자료: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9年推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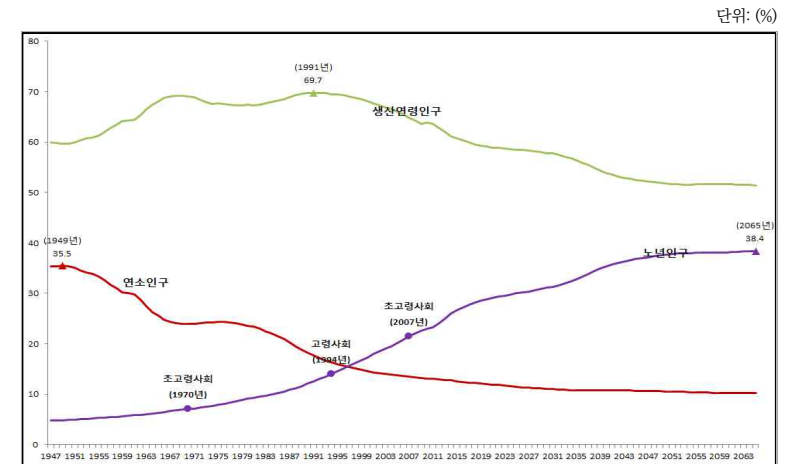
□ 연령집단별 인구비율

-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의 정점은 한국의 경우, 규모와 마찬가지로 2016년이지만, 일본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1991년이 가장 높았으며(25년의 시차),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이 감소 국면에 들어선지 이미 30년이 경과함
 -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두 번의 베이비붐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 비율도 두 번 정점에 달했음
 - 한국에서는 2060년대에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이 50%를 밑도는 수준까지 단기간에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은 2050년대부터 50%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임
- 연소 인구 비율의 감소와 노년 인구 비율의 상승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짧은 기간에 급격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노년 인구 비율에서 나타나는 고령화 비율을 봐도, 고령화 사회(고령화 비율7%)→고령 사회(14%)→초고령사회(20%)로의 이행에 소요되는 연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짧음
 - 그리고 2040년대 후반에 한국의 고령화 비율은 일본을 웃돌며, 그 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한편, 일본은 2050년대 이후에 40%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임
- 요약하면, 한국과 일본의 유소년인구(15세 미만) 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자(65세 이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비율은 일본이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연령집단별 인구비율 추이(한국): 1960~20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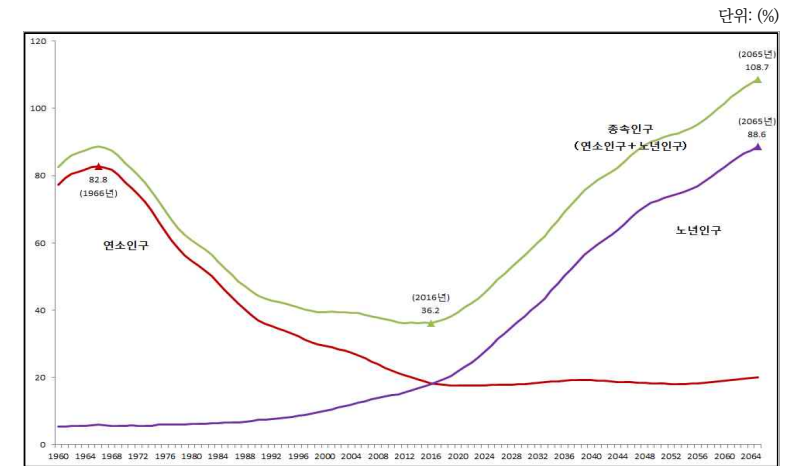
[그림 2-6] 연령집단별 인구비율 추이(일본): 1947~2065년



□ 종속인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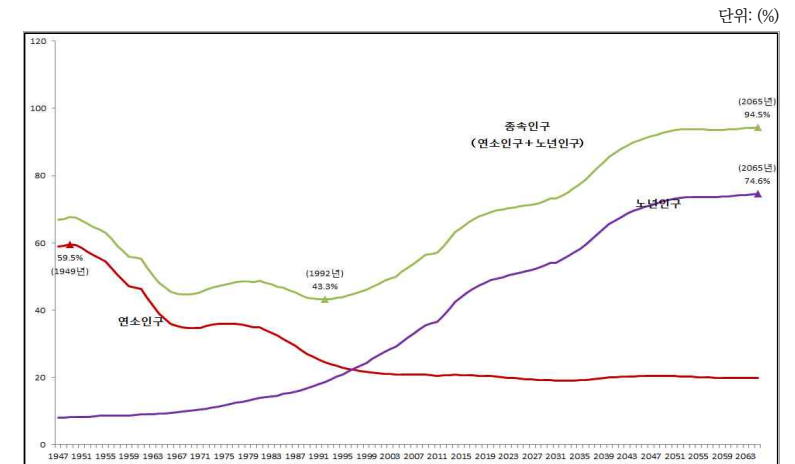
- 종속인구 지수에서 보면, 가장 저위 연도는 한국이 2016년(36.2%), 일본이 1992년(43.3%)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24년간의 시차가 음
 - 다만, 한국은 향후 일본을 웃도는 속도로 단기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노년 인구 지수의 증가가 현저하며, 이것이 전체 종속 인구 지수의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
 - 일본은 2050년대 이후 종속 인구 지수가 95%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하겠지만, 한국은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2060년 이후에는 100%를 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생산 연령 인구를 웃도는 규모의 종속인구를 사회 전체가 지탱해야 한다는 뜻임

[그림 2-7] 연령집단별 종속인구지수 추이(한국): 1960~2065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2-8] 연령집단별 종속인구지수 추이(일본): 1947~2065년



자료: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9年推計)』

□ 미혼율

- 연령 계급별(5세 간격) 미혼 인구 비율의 추이를 보면, 미혼율은 한국과 일본 모두 대부분의 연령 계급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20대 초반은 일관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높고, 20대 후반도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짐
 - 30대 초반에서는 2010년 이후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게 되면서 젊은 한국 남성의 미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단, 30대 후반 이후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아 일본에서는 미혼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여성의 경우, 20대 전반은 1990년대까지 일본의 미혼율이 더 높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계속 한국이 일본보다 높음. 20대 후반도 201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역전하여 웃돌고 있음. 30대 전반도 2015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웃돌아 남성과 마찬가지로 젊은 한국 여성의 미혼화가 최근 진행됨. 다만, 30대 후반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미혼율이 더 높으며, 일본에서는 여성도 미혼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는 2010년경부터 20대 후반~40대 전반 남녀 모두 미혼율의 신장이 완만해지고 있음. 30대 일본 남성의 경우에는 2015년에 미혼율이 제자리걸음 또는 약간의 감소를 보임. 이는 일본 젊은 세대의 미혼율이 더 이상 높아질 여지가 적다는 점을 시사함
- 한국과 일본의 차이 중에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미혼율 증가의 한계점임
 - 일본 남성 20대 후반의 미혼율은 2005년 71%에 도달한 이후 약간의 증가를 하지만 71~72% 부근에서 변동을 하고 있고, 30대 초반도 2005년에 47%에 도달한 이후 2015년까지 47% 선에서 변동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한국 남성의 20대 후반은 2000년에 일본의 미혼율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90.0%로 나타나 일본과의 차이는 19%로 나타나고, 30대 초반은 2010년에 일본보다 높아진 이후 2015년에는 한국이

55.8%로 일본과의 차이가 8.5%로 벌어지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일본 20대 후반 여성은 2005년 이후 59~61%에서 변동하고, 30대 초반은 2010년 34%대에서 변동하고 있음
- 20대 후반 여성의 한일 간 차이는 2015년에 15.6%, 30대 초반은 2.6%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20년 인구조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30대 후반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다시 말하면, 일본의 미혼율은 어느 한계점에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미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1〉 한국과 일본 남성의 미혼율 추이: 1990~2015년

(단위: %)

| 연령 | 한국 | | | | | | 일본 | | | | | |
|-------|------|------|------|------|------|------|------|------|------|------|------|------|
|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 20~24 | 96.4 | 96.3 | 97.5 | 98.2 | 98.8 | 98.8 | 93.6 | 93.3 | 92.9 | 93.5 | 94.0 | 95.1 |
| 25~29 | 57.3 | 64.4 | 71.0 | 81.8 | 85.4 | 90.0 | 65.1 | 67.4 | 69.4 | 71.4 | 71.8 | 72.8 |
| 30~34 | 13.9 | 19.4 | 28.1 | 41.3 | 50.2 | 55.8 | 32.8 | 37.5 | 42.9 | 47.1 | 47.3 | 47.3 |
| 35~39 | 3.8 | 6.6 | 10.6 | 18.4 | 26.7 | 33.0 | 19.1 | 22.7 | 26.2 | 31.2 | 35.6 | 35.2 |
| 40~44 | 1.5 | 2.7 | 4.9 | 8.5 | 14.4 | 22.5 | 11.8 | 16.5 | 18.7 | 22.7 | 28.6 | 30.0 |
| 45~49 | 0.8 | 1.3 | 2.4 | 4.5 | 7.5 | 13.9 | 6.8 | 11.3 | 14.8 | 17.6 | 22.5 | 25.9 |

자료: 한국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2018」

〈표 2-2〉 한국과 일본 여성의 미혼율 추이: 199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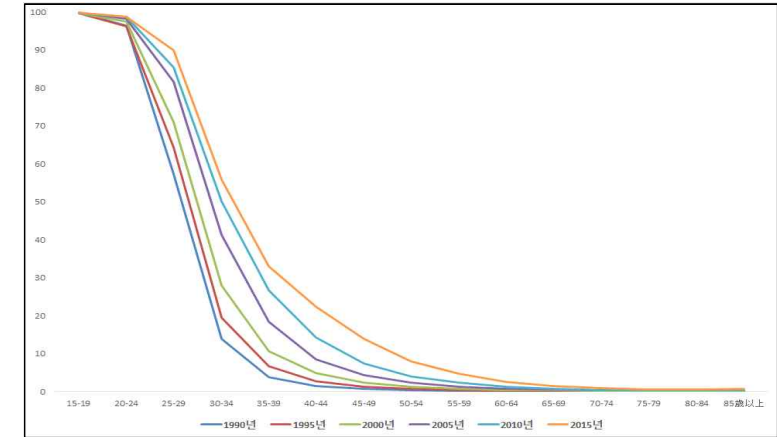
(단위: %)

| 연령 | 한국 | | | | | | 일본 | | | | | |
|-------|------|------|------|------|------|------|------|------|------|------|------|------|
|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 20~24 | 80.5 | 83.3 | 89.1 | 93.7 | 96.0 | 96.8 | 86.0 | 86.8 | 88.0 | 88.7 | 89.6 | 91.5 |
| 25~29 | 22.1 | 29.6 | 40.1 | 59.1 | 69.3 | 77.3 | 40.4 | 48.2 | 54.0 | 59.1 | 60.3 | 61.7 |
| 30~34 | 5.3 | 6.7 | 10.7 | 19.0 | 29.1 | 37.5 | 13.9 | 19.7 | 26.6 | 32.0 | 34.5 | 34.9 |
| 35~39 | 2.4 | 3.3 | 4.3 | 7.6 | 12.6 | 19.2 | 7.5 | 10.1 | 13.9 | 18.7 | 23.1 | 24.0 |
| 40~44 | 1.1 | 1.9 | 2.6 | 3.6 | 6.2 | 11.3 | 5.8 | 6.8 | 8.6 | 12.2 | 17.4 | 19.4 |
| 45~49 | 0.6 | 1.0 | 1.7 | 2.4 | 3.3 | 6.4 | 4.6 | 5.6 | 6.3 | 8.3 | 12.6 | 16.2 |

자료: 한국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2018」

[그림 2-9] 연령계급별 미혼인구 비율 추이(한국남성): 199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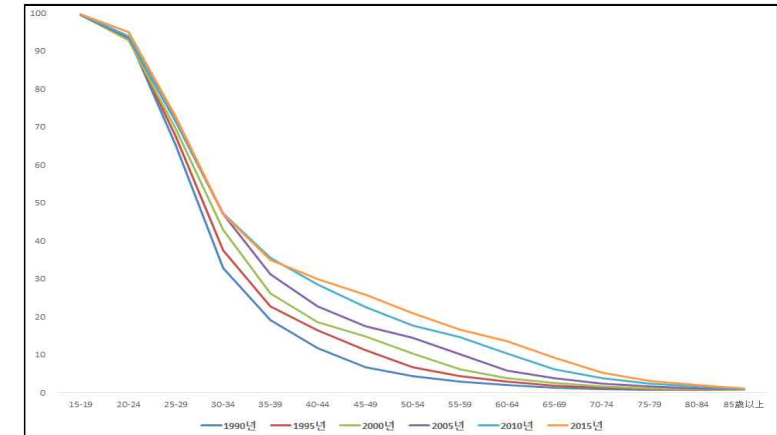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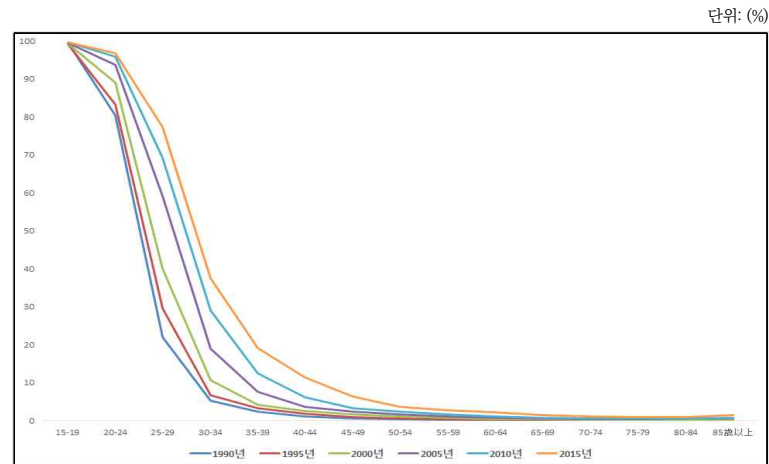
[그림 2-10] 연령계급별 미혼인구 비율 추이(일본남성): 1990~201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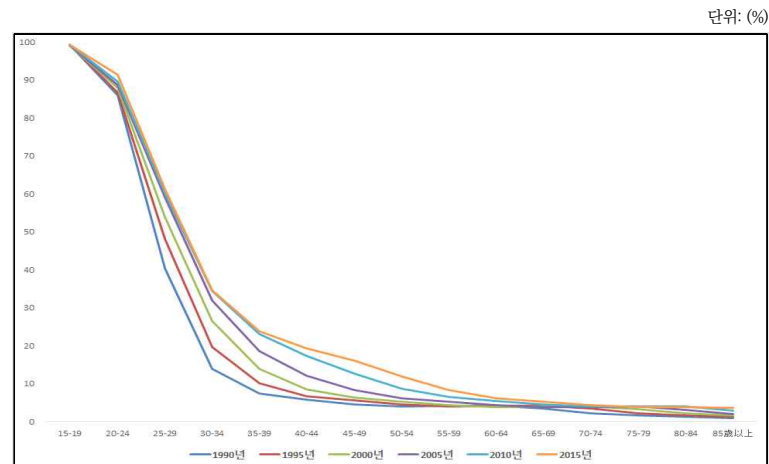


자료: 総務省統計局, 「国勢調査報告」

[그림 2-11] 연령계급별 미혼인구 비율 추이(한국여성): 1990~2015년



[그림 2-12] 연령계급별 미혼인구 비율 추이(일본여성): 1990~2015년



□ 초혼연령

- 1990년 당시의 한국 남성 초혼연령이 27.8세, 여성이 24.8세, 일본 남성이 28.4세, 여성이 25.9세로 한국보다 일본이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았음
- 1990년 당시에는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의 초혼연령의 차이가 10년 정도이고, 여성은 15~6년 차이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거듭하여 남성은 1997년(한국: 28.6세, 일본: 28.5세), 여성은 2010년(한국: 28.9세, 일본: 28.8세)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음
- 이것은 곧 한국 남성의 만혼화 속도가 여성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초혼연령 경향에서도 미혼율에서 나타났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남성은 2014년부터 31.1세로 초혼연령이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또한 29.4세에서 멈춰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반면, 한국 남성은 같은 기간 32.4세에서 32.8세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29.8세에서 30.1세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한일 간의 초혼연령 차이는 남성이 1.7세, 여성이 0.7세로 한국이 높은 상황임

〈표 2-3〉 한국과 일본의 초혼연령 추이: 1990~2016년

(단위: 세)

| 연도 | 한국 | | 일본 | |
|------|------|------|------|------|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1990 | 27.8 | 24.8 | 28.4 | 25.9 |
| 2000 | 29.3 | 26.5 | 28.8 | 27.0 |
| 2005 | 30.9 | 27.7 | 29.8 | 28.0 |
| 2010 | 31.8 | 28.9 | 30.5 | 28.8 |
| 2011 | 31.9 | 29.1 | 30.7 | 29.0 |
| 2012 | 32.1 | 29.4 | 30.8 | 29.2 |
| 2013 | 32.2 | 29.6 | 30.9 | 29.3 |
| 2014 | 32.4 | 29.8 | 31.1 | 29.4 |
| 2015 | 32.6 | 30.0 | 31.1 | 29.4 |
| 2016 | 32.8 | 30.1 | 31.1 | 2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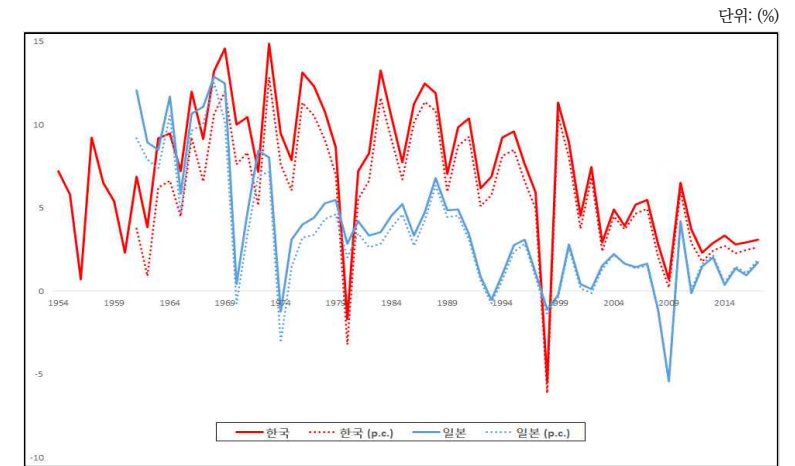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 「혼인통계」 각 연도,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2018」

제2절 경제·고용지표 변화

□ 경제성장률

- 한국은 1980년대 이후 평균성장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2010년대는 3%대로 위축되고 있음
 - 또한, 과거 두 번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음(1980년: 제2차 오일쇼크, 1998년: 아시아 통화 위기)
- 일본도 1970년대 이후의 평균성장률이 둔화하는 경향에 있으며, 과거 수차례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음(오일쇼크와 거품 경제의 붕괴, 아시아 통화 위기, 리먼쇼크, 동일본대재해 등의 영향)
 - 단, 2010년대에 들어서 연대별 평균성장률은 1.5% 정도까지 회복됐으며 (2000년대의 평균성장률은 0.5%), 한국과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
- 1인당 경제성장률은 한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보다 낮게 변동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가 본격화한 2010년대부터 1인당 경제성장률이 약간 더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그 경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됨

[그림 2-13] 한국과 일본의 실질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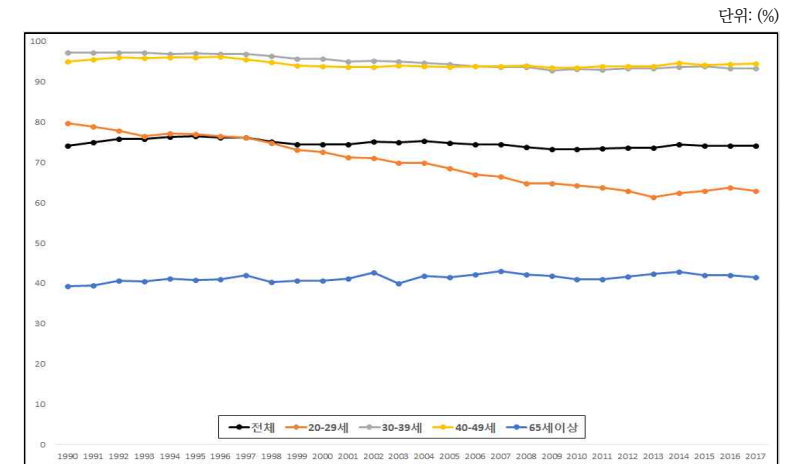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8.12.1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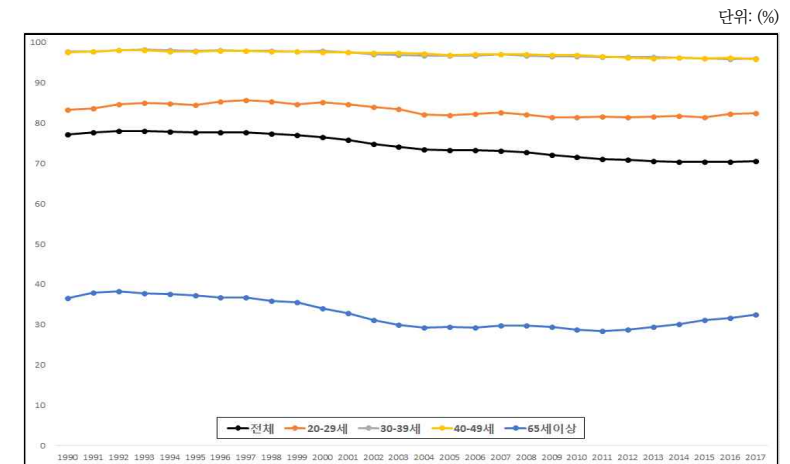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이하, 경활인구)는 남성 전체에서는 1990년대에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게 분포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2017년 현재 한국: 74.1%, 일본: 70.5%)
 - 한국에서는 20대의 감소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동시에, 30~40대에서도 약간의 감소 경향을 볼 수 있음
 - 특히 20대의 감소 경향은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재학 기간의 연장(신규 대졸업자의 취직 지연)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 65세 이상의 경활인구 비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는 점이 특징이며, 일본의 65세 이상 경활인구 비율 추이는 1990년대에는 약간의 감소 경향, 2000년대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2010년대에 들어서 상승 경향에 있음
- 여성의 경활인구 비율은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50%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2017년 한국: 52.7%, 일본: 51.1%)
 - 20~40대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 경향에 있으며,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게 분포해 왔음
 - 특히 일본의 30대 여성 경활인구 비율이 2000년대 이후에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65세 이상 경활인구 비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게 분포해 왔지만, 일본에서는 2010년대에 들어서는 증가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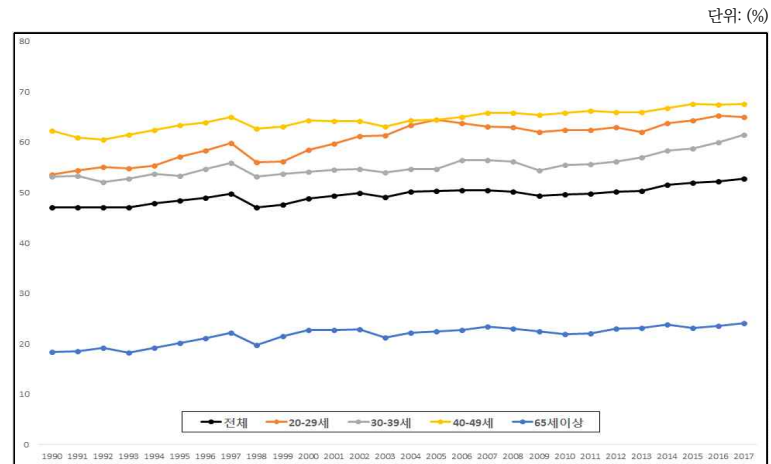
[그림 2-14] 경제활동인구비율(한국남성): 199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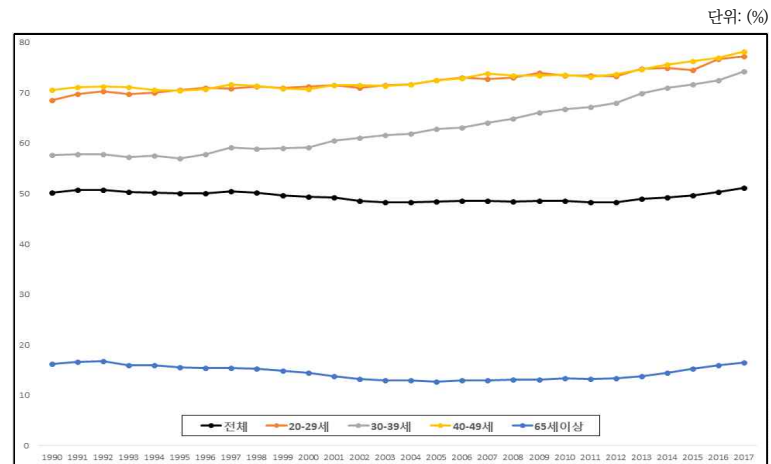
[그림 2-15] 경제활동인구비율(일본남성): 1990~2017년



[그림 2-16] 경제활동인구비율(한국여성): 199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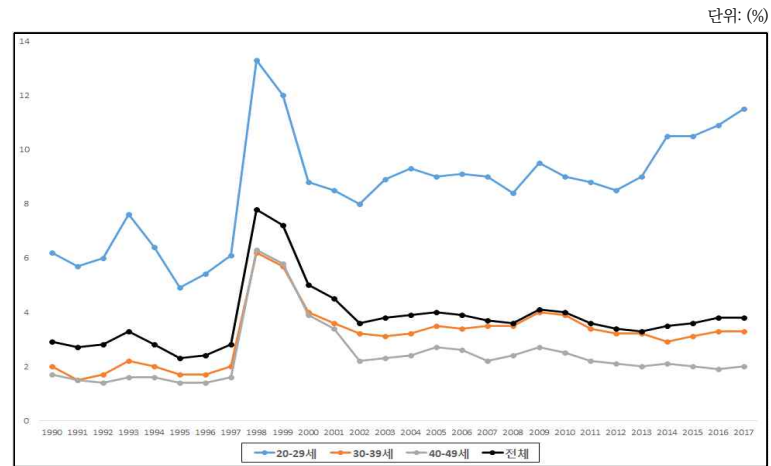
[그림 2-17] 경제활동인구비율(일본여성): 1990~2017년

□ 실업률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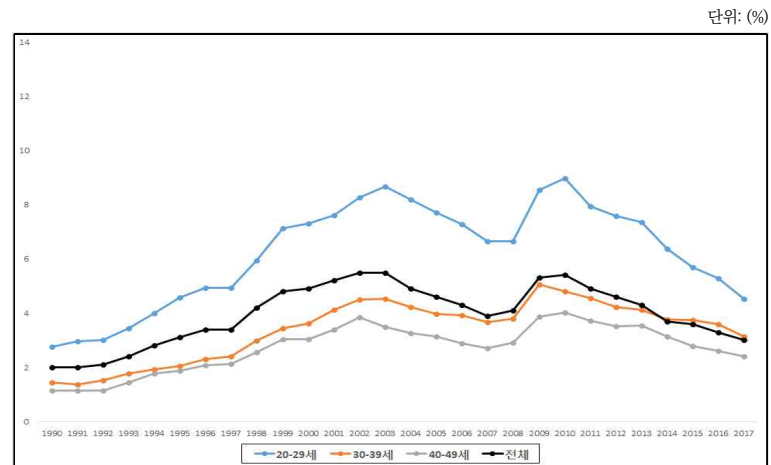
- 한국에서는 남녀 모두 IMF 위기 후에 전체적으로 상승했으나,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았음
 - 일본은 1990년대에 걸쳐 남녀 모두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계속 상승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 일시적으로 하락
 - 2008년 금융 위기 시에는 다시 전체 실업률이 상승했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에 있지만, 거품경제붕괴기의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았음
- 30~40대에서는 한일 남녀 모두 전체 실업률과 유사한 경향과 수준으로 변동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 한국 20대의 실업률은 상승 경향에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고용 상황의 개선을 반영하여 감소하고 있는 점이 대조적임

3) 실업률은 한국과 일본 간에 실업자의 구직 활동이나 그 준비 기간의 차이에 따라 산출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가 어렵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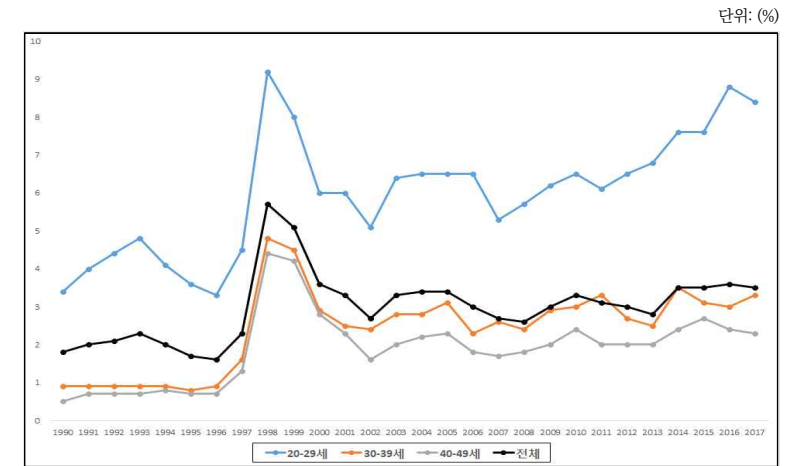
[그림 2-18] 실업률(한국남성): 199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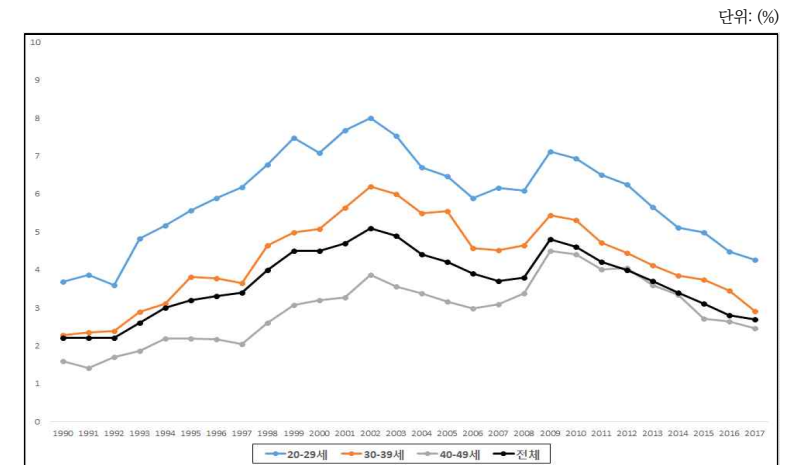
[그림 2-19] 실업률(일본남성): 1990~2017년



[그림 2-20] 실업률(한국여성): 199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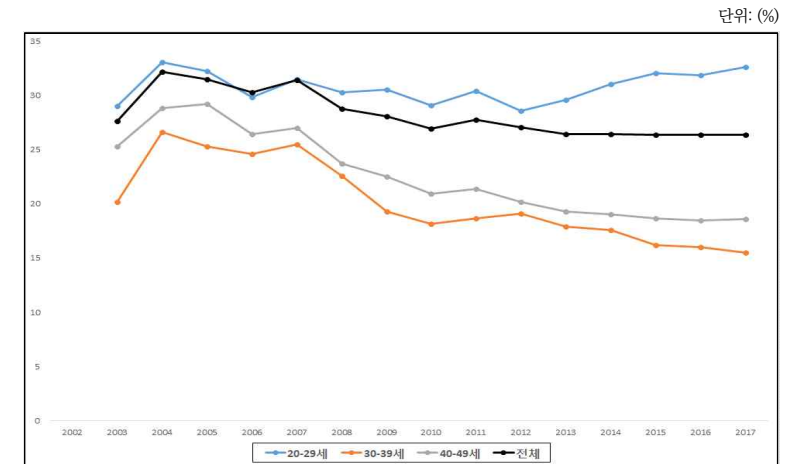
[그림 2-21] 실업률(한국여성): 199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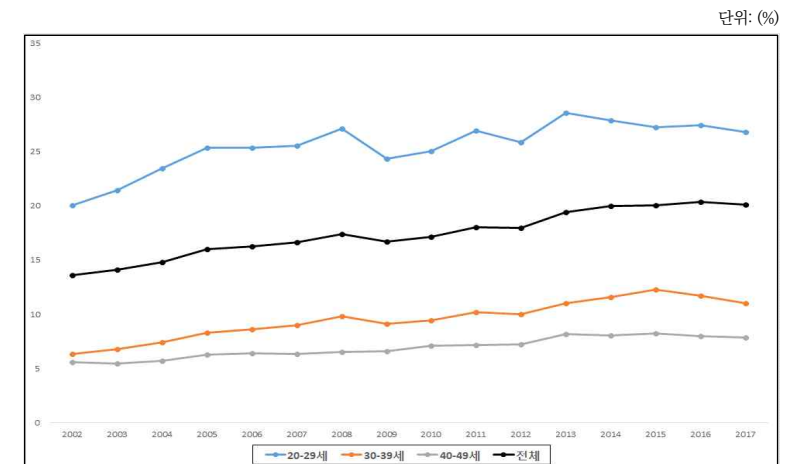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 전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게 분포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에서는 20대를 제외하고 2000년대 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미약하게 증가 경향에 있으며, 청년층을 포함하여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의 20대 남성도 2010년대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상승함
- 여성 전체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30~40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크며, 최근에는 약간 감소하거나 정체 경향에 있음
 - 그리고 30~40대 일본 여성의 경찰인구 비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여성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으나,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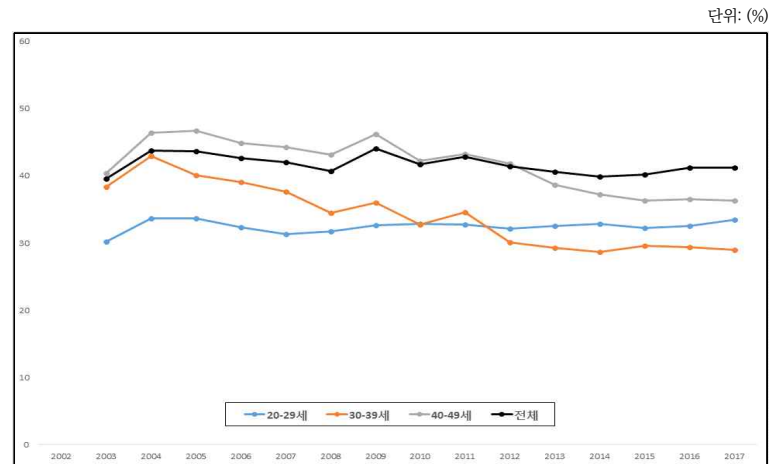
[그림 2-22] 비정규직 비율(한국남성): 200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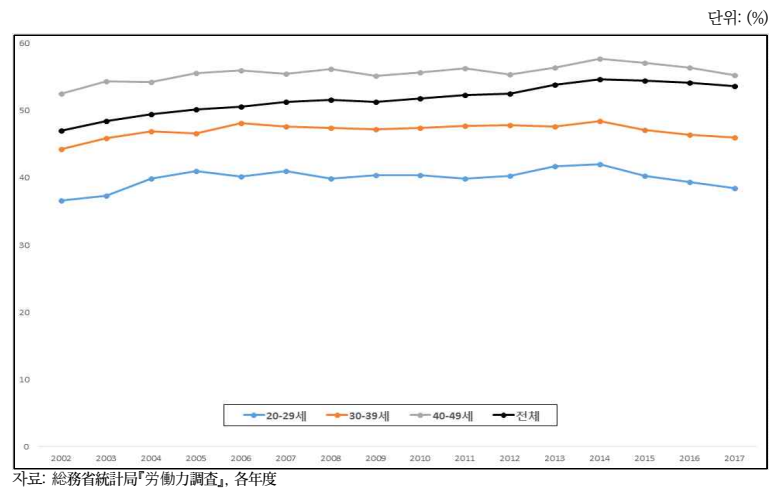
[그림 2-23] 비정규직 비율(일본남성): 2002~2017년



[그림 2-24] 비정규직 비율(한국여성): 200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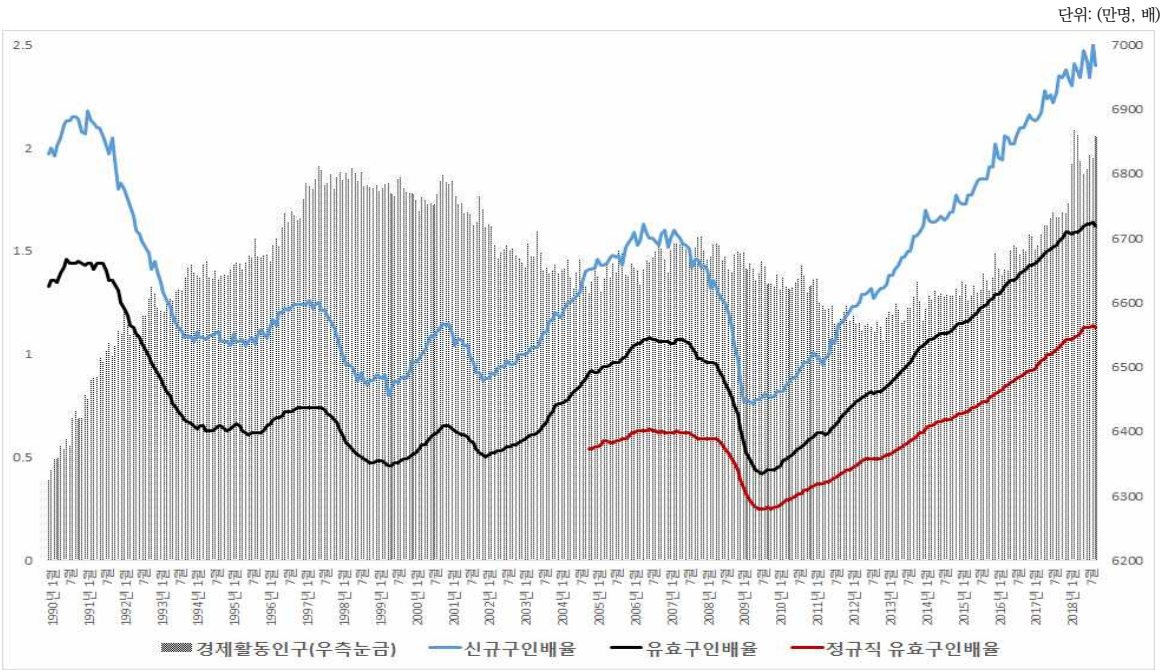
[그림 2-25] 비정규직 비율(일본여성): 2002~2017년



□ 일본의 유효구인배율 및 신규구인배율

- 1990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신규구인배율 및 유효구인배율(양쪽 모두 계절 조정치) 추이를 보면, 일단 버블경제붕괴기에 큰 정점을 맞이한 후에 급격한 감소와 침체가 계속됨
 - 단, 2002년부터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2006~2007년에 걸쳐 다시 정점을 맞이함
 -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의 2009년 중반까지 유효·신규구인배율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나, 이 시기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블경제붕괴기의 수준을 넘어섰음
 - 또한, 작년부터는 정규직에 한정된 유효구인배율도 1을 넘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도 동시에 살펴보면, 아시아 통화 위기가 일어난 1990년대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장기 불황과 함께 감소와 계속됨
 -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12월을 저점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18년 전반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남
- 구인배율의 연차 데이터로서 196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유효구인배율 및 신규구인배율 등의 추이를 보면, 여기에서도 최근 두 지표의 상승세가 과거 최정점에 육박하거나 혹은 능가할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경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신규 구인 수도 과거 최대 규모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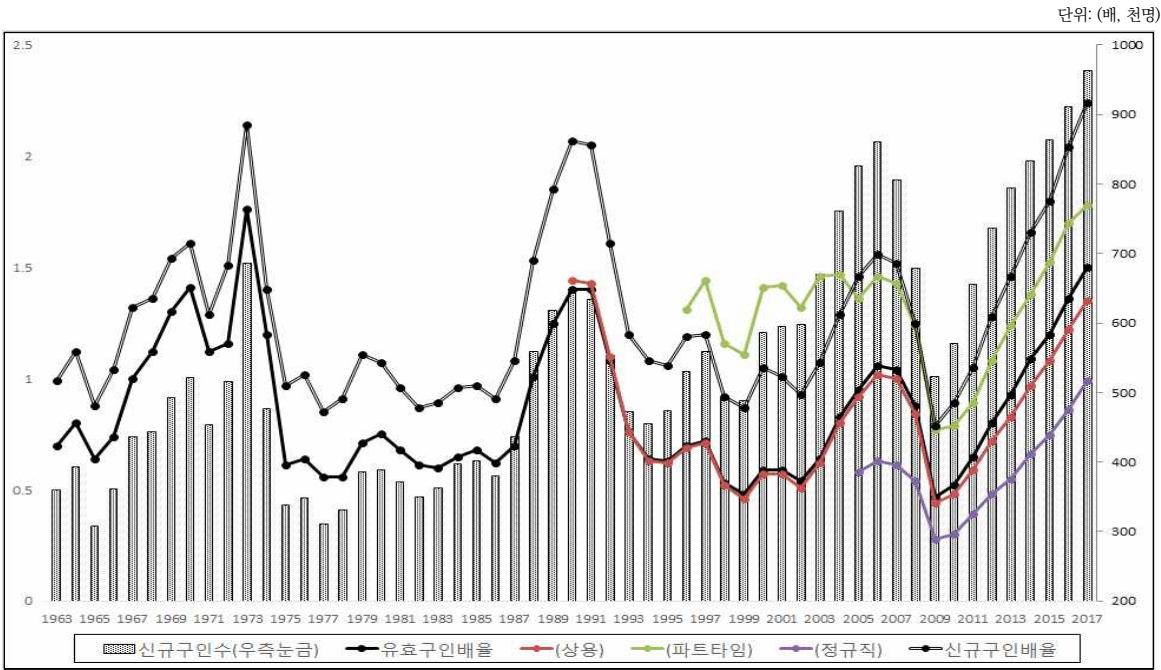
[그림 2-26] 일본의 경제활동인구와 신규·유효구인배율(계정조정치) 추이(월별): 1990년 1월-2018년 10월



자료: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

46 일본의 경제·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 대응정책 분석

[그림 2-27] 일본의 유효구인배율과 신규 구인수 추이(연차별): 1963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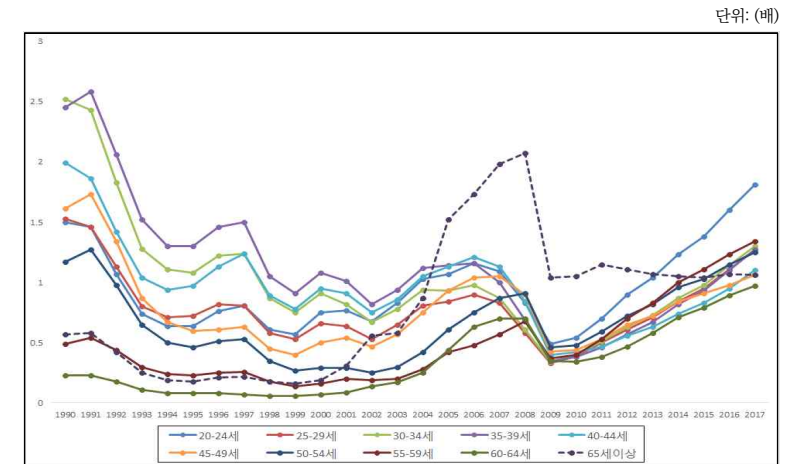


자료: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

□ 일본의 연령 계급별 유효구인배율 및 업종별 신규 구인 수

- 연령 계급별 유효구인배율 추이를 보면, 버블경제붕괴기의 높은 유효구인배율은 20대보다 주로 30~40대가 견인한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유효구인배율의 증가는 2010년대에 들어서 65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 계급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20대 전반의 급격한 상승이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점이 확인됨
 - 한편, 65세 이상을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 일시적으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 후에는 급감하고, 이후 정체되고 있음
 - 65세 이상의 유효구인배율이 2000년대에 급상승한 배경에는 2000년도부터 도입된 개호보험제도에 의해 개호노동자 수요가 65세 이상에서 특별히 높아졌던 점이 한 요인일 수도 있음
- 업종별 신규 구인 수 추이를 보면, 2010년대에 들어서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신규 구인 수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최근에는 의료·복지(개호를 포함) 분야에서의 신규 구인 수 증가가 현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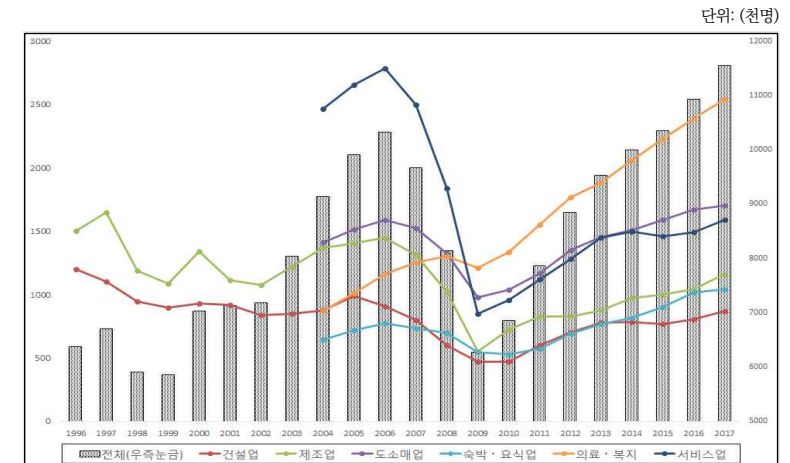
[그림 2-28] 일본의 연령 계급별 유효구인배율 추이: 1990년~2017년



자료: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

주: 파트타임을 포함한 상용, 구인수균등배분방식

[그림 2-29] 일본의 업종별 신규 구인수 추이: 1996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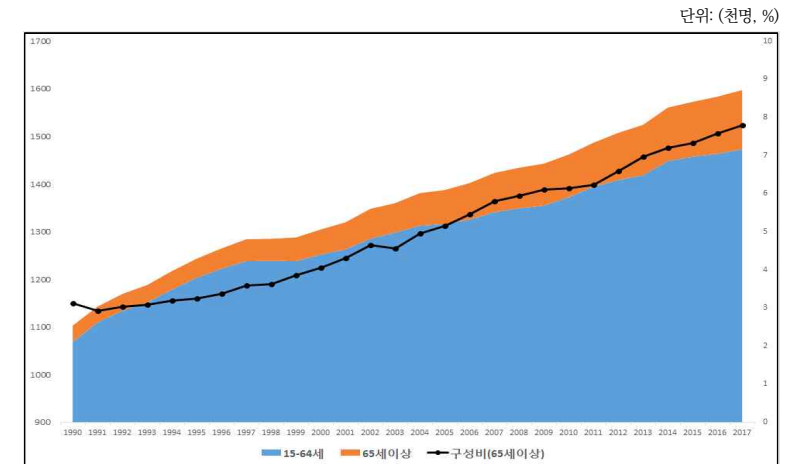
자료: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

주: 파트타임을 포함하며, 서비스 부문은 2003년에 분류방식이 변경되어 그 이전은 제외되었음.

□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구성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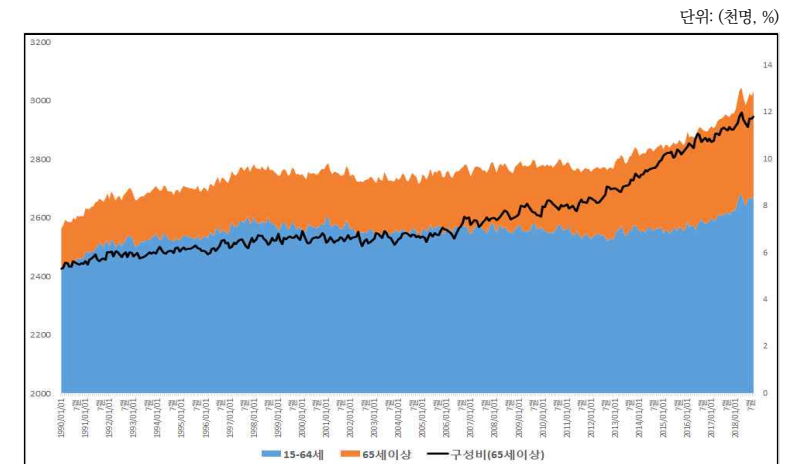
-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노동인구의 변화를 연령 집단별 및 남녀 별로 분해해 보면(연차 데이터 기준), 한국은 남녀 모두 일관되게 경활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음
 - 또한,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65세 이상 경활인구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65세 이상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8% 전후로 일본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과는 달리 여성 쪽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 계급별 경활인구비율에서는 65세 이상 남녀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 65세 이상 경활인구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30] 연령 계급별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및 비율(한국남성): 1990~2017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31] 연령 계급별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및 비율(한국여성): 199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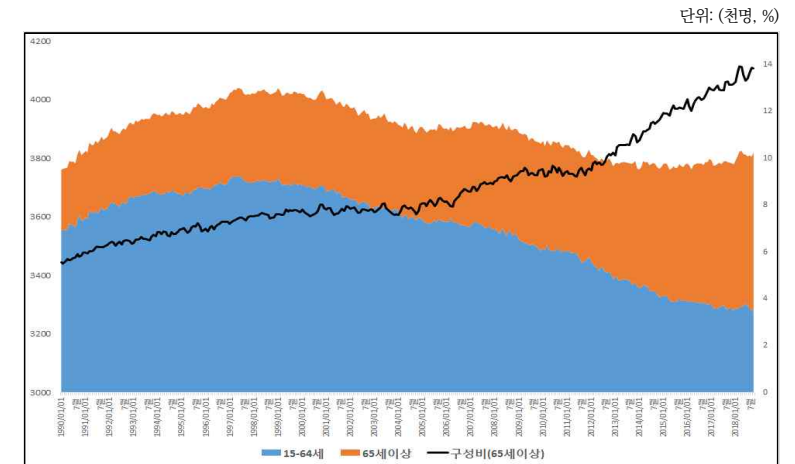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일본의 경제활동인구 구성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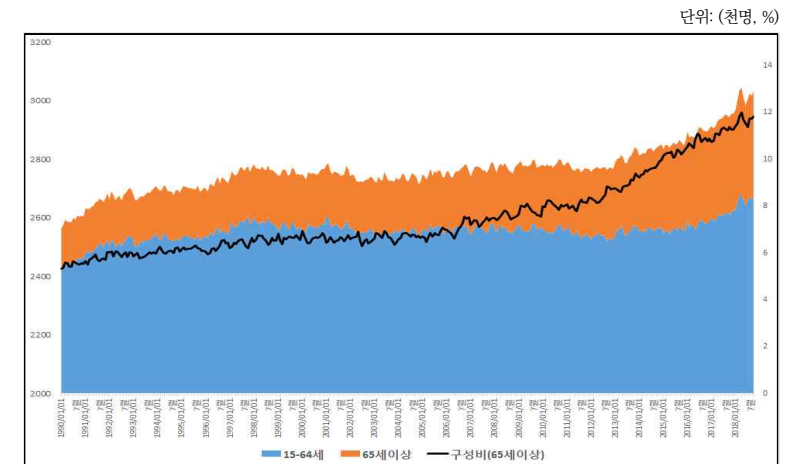
- 앞서 살펴봤던 일본 경활인구의 변화를 연령 집단별 및 남녀 별로 분해해 보면, 일본은 남성의 15~64세의 경활인구가 1990년대 말부터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앞서 언급한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제1차 베이비붐인 전후 세대의 은퇴 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반하여 65세 이상 노동인구는 2010년대에 들어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의 남성 전체 경활인구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 여기에는 전후 세대가 65세 이상 경활인구로 유입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일본의 여성 경활인구는 2013년경부터 최근에 걸쳐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
 - 그 중 15~64세 노동인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여성 경활 인구가 증가가 크게 견인하고 있음
 - 65세 이상 경활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 추이를 보면, 남성이 14% 정도, 여성이 12% 정도 수준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음

[그림 2-32] 연령 계급별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및 비율(일본남성): 1990년 1월-2018년 7월



자료: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

[그림 2-33] 연령 계급별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및 비율(일본여성): 1990년 1월-2018년 7월



자료: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

제3절 소결

1. 인구구조 변화

- 한국과 일본의 유소년인구(15세 미만) 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자(65세 이상)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비율은 일본이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부터 일본보다 낮아지게 되고(한국: 1.30, 일본: 1.33),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18, 일본이 1.44로 0.26 차이가 나고 있음
 - 또한, 한국의 출생아수 감소 속도가 일본보다 더욱 크게 나타남
- 최근 들어 한국의 미혼율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연령대에 서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한국과 일본의 차이 중에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미혼율 증가의 한계점으로 일본의 미혼율은 어느 한계점에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미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과 일본 남성의 초혼연령 차이가 약 10년, 여성은 약 15~6년 차이
 - 그러나 한국의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거듭하여 남성은 1997년, 여성은 2010년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으며, 이것은 곧 한국 남성의 만혼화 속도가 여성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
 - 또한, 초혼연령에서도 미혼율에서 나타났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최근 일본 합계출산율이 1.4에서 안정적인 것은 미혼율 및 초혼연령 증가율의 둔화에 따라 출산이 지연되는 효과가 적어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경제지표 변화

- 버블 경제가 붕괴되기 직전까지 일본 경제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199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후반의 금융위기 때에는 사상 최저의 성장률을 보임
- 한국의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직 IMF 수준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은 최근 감소경향에 있긴 하나 아직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
 - 양국의 큰 차이점은 20대 실업률로서 한국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일본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6,700만 명을 밑도는 수준이었고 2012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즉, 생산연령인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 유효구인배율은 버블경제붕괴기에 큰 정점을 맞이한 후에 급격한 감소와 침체가 계속되었고,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중후반까지 급격하게 감소한 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부터는 65세 이상의 유효구인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함
 - 반면, 20대 초반의 유효구인배율이 급격히 증가
 - 서비스업이 2000년 중반까지 신규 구인수를 전인하고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이후 의료·복지의 신규 구인수가 급격하게 증가함
 -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 3 장

일본의 사회현상 분석

제1절 1990년대의 주요 사회현상

제2절 2000~2010년 경의 주요 사회현상

제3절 2010년 이후의 주요 사회현상

제4절 소결

3

일본의 사회현상 분석

- 제2장에서는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지표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제3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회현상을 크게 1990년대, 2000~2010년 경, 2010년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함

제1절 1990년대의 주요 사회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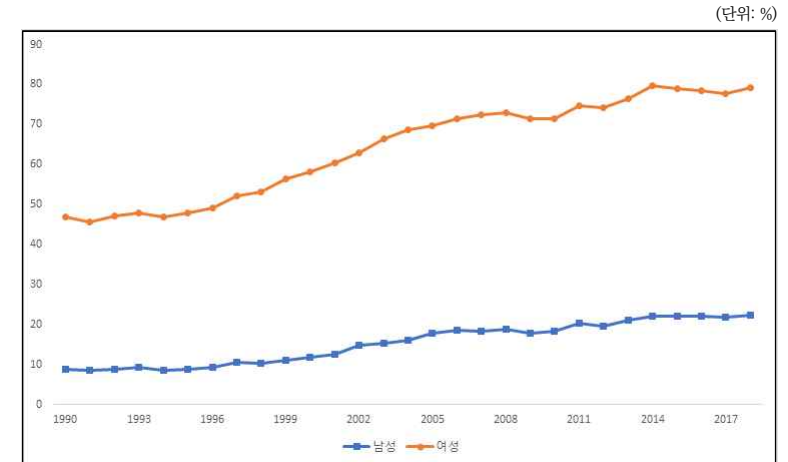
- 무엇보다 1990년대 초반의 버블경제 붕괴로 인하여 가장 타격을 받은 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앞둔 청년들임.
- 즉, 이들은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 붕괴로 인하여 고용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1990년대에는 청년 고용과 관련된 현상이 주를 이루며, 본 절에서는 일본의 청년 고용 문제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거론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볼 것임

1. 청년층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⁴⁾

- 거품경제 붕괴 후의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였고(그림 3-1), 1990년대 후반에 걸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도 증가함
- 1988년 2월에 25세부터 34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남성이 3.6%, 여성이 25.9%였는데, 1999년 2월에는 남성이 6.2%, 여성이 31.6%로 증가함(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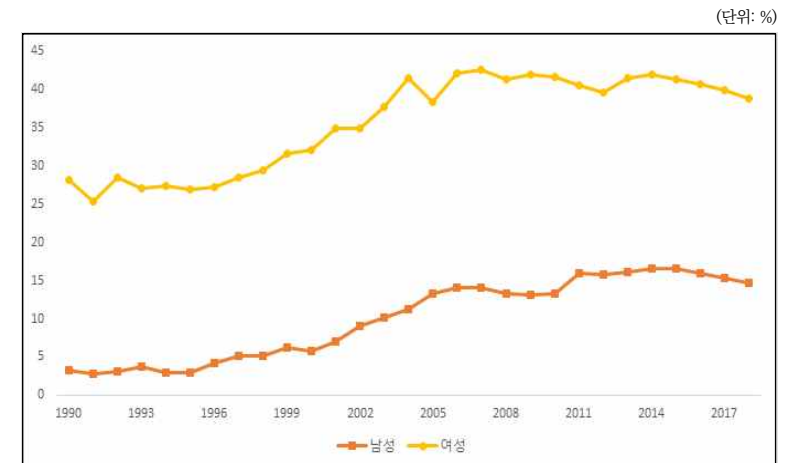
4) 본 소절의 내용은 阿部(2010)의 내용을 추가 및 정리한 것임.

[그림 3-1] 비정규직 비율 추이: 1990~2018년



주: 1990~2001년까지는 2월, 2002~2018년까지는 1~3월 평균임
자료: 総務省, 「労働力調査」, 各年度

[그림 3-2] 25~34세 비정규직 비율 추이: 1990~2018년



주: 1990~2001년까지는 2월, 2002~2018년까지는 1~3월 평균임
자료: 総務省, 「労働力調査」, 各年度

□ 90년대 후반 비정규직 청년 남성 노동자가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으며, 청년층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높게 상승한 것을 지적

○ 또한, 청년층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근로 방법의 문제’, ‘분업의 문제’, ‘고용 관행의 문제’, ‘일본 노동시장의 기능의 문제’ 등 네 가지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음

- (근로 방법의 문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편으로서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일하는 여성이 존재하는 반면⁵⁾, 장기 불황으로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한 결과, 정규직을 희망하면서도 부득이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는 청년층이 증가함. 즉, 자발적인 비정규직과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 (분업의 문제) 1990년대 후반의 경제 글로벌화로 인하여, 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 조정이 용이하며, 인건비도 정규직보다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하려고 한 점.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ICT화가 진행되어 정규직 업무의 일부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된 점이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인 요인으로 추측됨

- (고용 관행의 문제) 1990년대까지의 일본 기업은 장기 근속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했는데, 일본의 경기가 악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동시에 신규 취업자의 고용을 억제한 결과, 청년층이 장기적인 취직난에 빠짐

- (일본 노동시장의 기능의 문제) 2000년의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 소개 사업이 민간에게 개방된 결과로서, 기업과 매칭이 잘 되는 우수한 인재와 그렇지 않은 인재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점과 1999년의 ‘파견노동자법’ 개정으로 거의 모든 업무에서 파견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비정규직 증가를 촉진

5) 유연한 근로 방식과 노동시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임.

2. 취업 빙하기 세대

□ 일본에서는 신규 취업자를 일괄 채용⁶⁾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대학 졸업 시의 경기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임

○ 1990년대의 경제가 불황이었을 때,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은 취업에 고전을 면치 못하여 취업 재수생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취업하는 이들이 출현함

○ 이러한 90년대의 불황기가 취직 시기에 해당하는 세대를 취직 빙하기 세대라 함

- 또한, 대학 졸업 시의 경기가 청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연구도 존재함

- 예를 들어, Kondo(2007)는 대학 졸업 시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지 여부가 그 후의 고용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Genda et. al.(2010)는 대학 졸업 시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저학력의 남성일 경우 장기적으로 임금이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함

- 이는 취직 빙하기 세대가 장기에 걸쳐 불황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3. 프리터·니트의 출현

□ 1990년대의 불황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취직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프리터로 일하는 취직 빙하기 세대의 청년층이 나타남

□ 프리터에 대한 정의

○ 厚生労働省(1991)의 정의는 장기간 일하는 사람, 여성의 경우는 미혼으로 한

6) “신규 취업자 일괄채용이란, 기업이 졸업 예정 학생(주로 20대 전후의 신규 졸업자)을 대상으로 매년 일괄 구인을 진행하여, 재학 중 채용시험을 통해 내정을 하고, 졸업 후 바로 근무를 하는 일본의 독특한 고용관행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이러한 고용관행이 뿌리를 내린 이유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재건과 고도 경제성장기의 인력난으로 기업이 노동력을 대량으로 확보해야 했기 때문으로, 이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현재 일본의 일반적인 고용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력이 전문한 신규 졸업자가 일괄적으로 채용되면 대부분의 경우 ‘종합직’으로 기업 내 다양한 부서와 직무를 로테이션하며 승진하게 된다.” (조성호 외, 2017, 70p에서 발췌)

정하여 기혼의 파트 타임을 제외하였고, 무직이라도 ‘아르바이트·파트’를 희망하는 이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니트를 파악하려 하였음

- 2000년 후생노동성의 정의는 남성의 노동연수가 1년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의 경우는 ‘일을 주로 하는 자’가 추가되어 이전보다 일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였음
- 内閣府(2002)의 정의는 파견노동자 등이 프리터 정의에 포함되도록 했기 때문에 2000년 후생노동성의 정의보다 정규직 이외의 고용형태를 넓게 포함함
 - 太田(2010a)는 이러한 정의로 변경된 배경으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정규직에 취업하기 힘든 청년들이 급증한 것에서 찾고 있음
 - 즉, 정규직에 취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함으로써 파트·아르바이트 이외의 비정규직 및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포함함
- 厚生労働省(2003)의 정의는 이전 2000년의 정의와 비교하여, 남성의 노동연수와 여성의 ‘일을 주로 하고 있는 자’라는 조건이 제외됨
 - 이런 정의는 오랜 기간 비자발적으로 파트·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던 남성, 집안일을 하면서 파트·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이 포함되게 되었음
- 厚生労働省(2010)의 정의에서는 연령 제한을 제외하였으나, 厚生労働省(2014)에서는 연령제한이 다시 포함됨
 - 2010년의 정의에서 연령제한이 제외된 이유는 35~44세의 프리터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음(太田, 2010a)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5)의 정의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이 어려운 이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1〉 정부 및 연구기관의 프리터에 대한 정의 변천

| 기관 | 연도 | 명칭 | 정의 |
|-------------|-------|---------------|---|
| 후생노동성(구노동성) | 1991 | 프리 아르바이터(프리터) | 15~34세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로 고용된 자이며, 남성의 경우, 노동연수가 5년 미만인 자, 여성인 경우에는 미혼을 지칭함.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고 ‘파트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자를 의미함. |
| 후생노동성(구노동성) | 2000 | 프리터 | 15~34세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로 고용된 자이며, 남성의 경우, 노동연수가 5년 미만인 자, 여성인 경우에는 미혼 이면서 일을 주로 하고 있는 자를 지칭함.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고 ‘파트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자를 의미함. |
| 후생노동성 | 2003 | 프리터 | 15~34세의 졸업자로 여성의 경우는 미혼인 것을 전제로, 현재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로 고용된 자이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고 ‘파트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자를 의미함. |
| 후생노동성 | 2010 | 파트·아르바이트 | 남성은 졸업자, 여성은 졸업자이며 미혼인 것을 전제로, ‘파트 아르바이트’ 고용자, 완전실업자들 중 찾고 있는 일의 형태가 ‘파트 아르바이트’인 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사 통학을 하지 않는 자들 중 취직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취직을 희망하는 자를 의미함. |
| | | 비정규직 | 상기 정의에서 ‘파트 아르바이트’를 ‘비정규 직원 종업원’으로 대체한 것임 |
| 후생노동성 | 2014 | 프리터 | 15~34세로 남성은 졸업자, 여성은 졸업자이며 미혼인 것을 전제로 이하의 자들을 포함 ①고용노동자 중 ‘파트·아르바이트’, ②완전실업자 중 찾고 있는 일의 종류가 ‘파트·아르바이트’, ③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는 ‘기타’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취업 내정을 받지 않고, 희망하는 일의 형태가 ‘파트·아르바이트’인 경우 |
| 내각부 | 2002 | 프리터 | 15~34세 청년(단, 학생과 주부는 제외) 중 ‘파트 아르바이트(파견포함)’ 및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무직자 |
| 노동정책기구·연수기구 | 2005b | 주변 프리터 | 학생 및 기혼 여성이 아닌 파트 아르바이트 고용자로 연간 노동일수가 99일 이하 또는 주 노동시간이 21시간 이하인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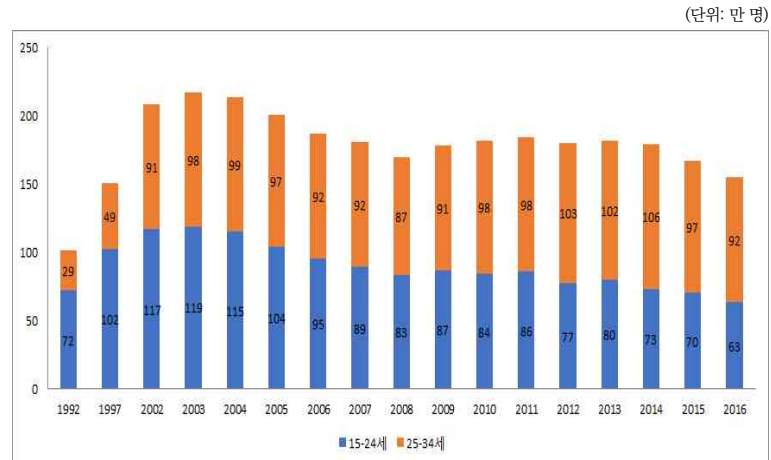
출처: 太田(2010a, 29p)의 표와 厚生労働省 (2014) 『平成26年版労働経済白書』를 바탕으로 수정 및 추가한 것임.

□ 프리터의 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 경향에 있으며, 2003년에는 217만 명까지 증가함

- 太田(2010b)도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프리터는 정사원에 비해 노동 시간이 짧고 비교적 융통성이 있는 근로 형태인 한편, 수입도 낮고, 고용도 안정적이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리터로 근무하는 청년층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음

[그림 3-3] 프리터 수의 추이: 1992~2016년



주: 1997년까지는 <표 3-1>의 2000년 노동성 정의, 2002년 이후는 2003년 후생노동성의 정의를 차용함. 2010년 이후는 2014년의 후생노동성 정의를 차용함

출처: 太田(2010a)의 30p와 厚生労働省 (2017) 「平成29年度労働経済白書」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또한, 이 시기에는 니트(NEET)라 불리는 청년층의 존재도 표면화되었음

- NEET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임
- (니트의 정의) 太田(2010a)는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친 니트의 증가는 불황에 의한 취직난과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한 결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유나 희망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니트가 되는 이들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함

<표 3-2> '니트'의 주요 정의 일람

| 기관 | 연도 | 명칭 | 정의 |
|-------|------|-------|---|
| 후생노동성 | 2004 | 청년무업자 | 15~34세로 비경활인구 중 졸업자 및 미혼이며, 학업이나 가사를 하고 있지 않은 자 |
| 후생노동성 | 2005 | 청년무업자 | 15~34세로 비경활인구 중 가사도 학업도 하고 있지 않은 자 |
| 내각부 | 2005 | 무업자 | 고교 및 대학에 다니고 있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평소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15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입시학원이나 전문학원 등을 다니고 있는 경우 제외) |
| | | 구직형 | 상기 무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 | | 비구직형 | 상기 무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은 안 하고 있는 자 |
| | | 비희망형 | 상기 무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자 |

주: 内閣府(2005)는 무직자 분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니트'에 상당하는 것은 '비구직형'과 '비희망형'임.
출처: 太田(2010a) p36에서 발췌.

제2절 2000~2010년 경의 주요 사회현상

- 2000년 이후는 1990년대 청년층의 취업난과 프리터 및 니트의 출현 등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 세대보다 경제력이 감소하여 나타난 현상과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현상도 존재함
- 본 절에서는 청년들이 빈곤해지며 고용 상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과 이 시기에 크게 붐을 일으킨 결혼 관련 활동, 초식남, 유토리·사토리 세대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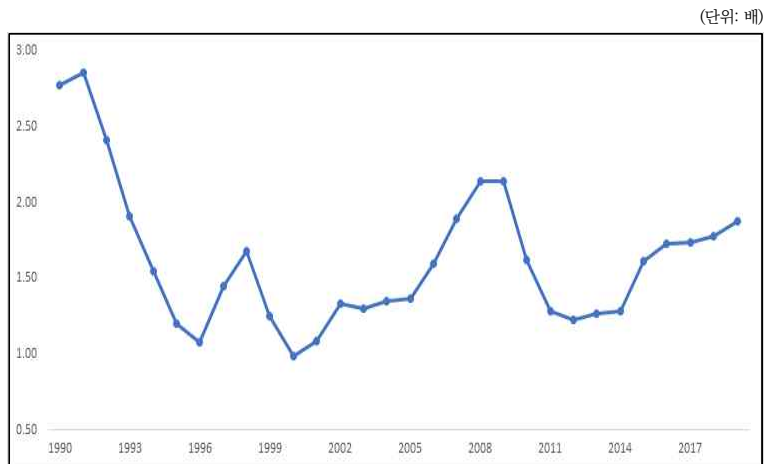
1. 청년층의 빈곤과 고용 불안정성 확대

□ 청년층의 빈곤 확대

- 앞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기는 2002년경부터 회복 경향을 보이다가 2008년의 금융위기에 의해 다시 심각한 경제 불황에 직면함
- 2008년 3월 졸업자의 유효구인배율은 2.14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의 2011년은 1.28, 2012년은 1.23까지 하락하였고(그림 3-4), 이러한 불황으로 인해 생활보호 급여를 수급하는 이들이 증가함(그림 3-3)

- 생활보호 대상자 수 및 세대수는 버블경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85년(플라자 합의)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버블경제가 붕괴된 1990년 초반 이후 증가함
- 특히, 200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을 전후하여 또 다시 급격히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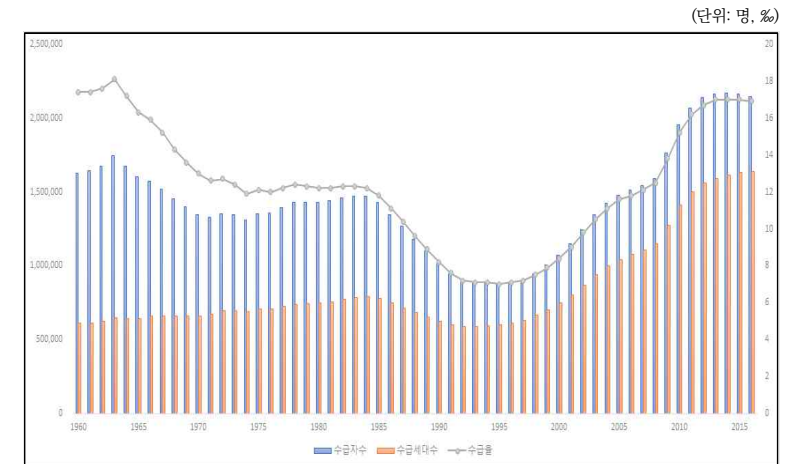
[그림 3-4] 졸업자의 유효구인배율 추이: 1990~2019년



주: 매년 3월 졸업자의 유효구인배율을 표시

출처: 리크루트ワーク스研究所「大卒求人倍率調査」, 各年度

[그림 3-5] 생활보호수급자수·수급세대수·수급율 추이: 196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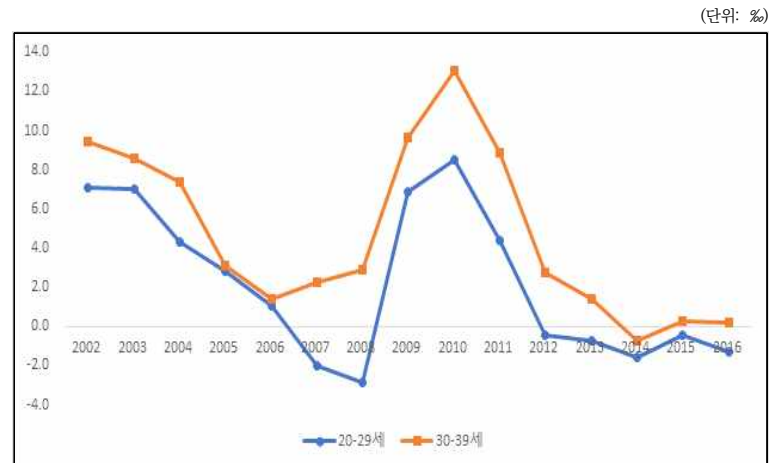
출처: 厚生労働省, 「被保護者調査」, 各年度

○ 그 중에서도 20·30대 청년들의 생활보호수급 전년대비 증가율도 높아짐(그림 3-6)

- 특히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함
- 생활보호수급자가 증가한 이유로 금융위기 후 20·30대의 실업이 증가하여,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도 감소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⁷⁾
- 또한, 금융위기로 촉발된 불황으로 인해 빈곤해진 청년 생활보호수급자도 증가한 것으로 생각됨

7) 厚生労働省「被保護者調査(保護開始世帯数, 世帯主の年齢階級×保護開始の理由別)」, 各年度 참조

[그림 3-6] 20·30대 청년의 생활보호수급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2002~2016년



출처: 厚生労働省, 「福祉行政報告例」, 各年度

□ 고용 불안정성 확대

-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일본의 고용 불안정성을 확대시킴
- (파견직의 대규모 해고 사태)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으로 인하여 파견직의 경우, 파견처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는 등의 파견직의 대규모 해고 사태를 촉발하였음
 - 파견직 노동자 수는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에 정점을 기록한 뒤, 이후 급격히 감소함(표3-3)

〈표 3-3〉 파견직 노동자수 추이: 2005~2014년

(단위: 천 명)

| 년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노동자수 | 2,547 | 3,210 | 3,812 | 3,989 | 3,020 | 2,714 | 2,615 | 2,451 | 2,515 | 2,630 |

- (워킹푸어) 워킹푸어란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이 생활보호제도에 정해진 최저소득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빈곤의 대리변수로 생각할 수 있음(駒村, 2007)
 - 워킹푸어는 90년대의 불황과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로 의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됨
 - 워킹푸어는 1999년에 5.5%로 이는 1984년보다 2배 증가한 수치이며, 이렇게 워킹푸어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니트의 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지적하였음(駒村, 2007)
 - 또한, 樋口他(2011)는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빈곤자 비율이 2003년부터 2009년에 걸쳐 약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증가 경향에 있다는 점과 비정규직 노동자인 세대주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취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빠져 있는 워킹푸어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음

□ 넷카페 난민

- 주거를 상실한 상태에서 인터넷카페를 숙소로 삼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넷카페 난민이라고 함
 - 야간에 인터넷카페를 이용하고 있는 자 가운데 주거 상실을 이유로 인터넷 카페에 숙박하고 있는 자는 7.8%이며, 주거 상실자의 취업 형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35세 미만 청년층은 약 46%로 절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고함(厚生労働省, 2007)
 - 이러한 점에서 불안정한 취업 형태의 청년층이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 빈곤에 빠져 인터넷카페의 난민이 된 것으로 보임

2. 결혼 활동(혼합)

가. 결혼 활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 일본의 사회학자인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와 시라카와 모모코(白河桃子)의 저

서 '혼활시대(婚活時代)'에서 처음 쓰인 용어로 '혼활'이라는 것은 결혼 활동의 약어임(山田·白河, 2008)⁸⁾

-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축약하여 '취활'로 부르는 것에 비유하여,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도 취업과 같은 활동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에서 혼활을 강조하고 있음'(조성호 외, 2017, 212p에서 발췌)

□ 경제적인 환경 변화

- 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이전처럼 누구나 정규직으로서 안정된 수입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짐
- 酒井·樋口(2005)는 대학 졸업 후에 프리터를 경험한 자는 정규직을 경험한 이들에 비해 연수입이 유의하게 낮다는 점, 결혼 연령의 지연이 관찰된다는 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가 결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 또한, 내각부의 조사에서 성별 역할 분업을 지지하는 비율이 41.1%로 과반수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内閣府, 2002), 여성이 출산 후에 노동 시장을 떠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출생 동향 기본 조사'에 따르면,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 퇴직하는 여성은 현재에도 30%~40% 정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실에서도 가계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남성은 결혼이 어려움⁹⁾
 - 나이가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라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축소되고, 경제력이 있는 여성도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높아지고 있음
 - 남성의 실제 연 수입과 여성이 기대하는 남성의 연 수입을 살펴보면(표 3-4), 대부분의 남성의 연 수입이 400만 엔 이하임에도(약 80%), 여성들이 원하는 연 수입은 대부분 400만 엔 이상으로 나타남(약 65%)

8) 일본에서는 매년 관심을 많이 받거나 봄이 형성된 키워드를 정하여 연말에 상을 수여하는데, 이 혼활이라는 단어는 2009년 연말에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로 인하여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9)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出生動向基本調査」, 各年度

- 즉, 실제 연 수입과 기대 연 수입 간에 미스 매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4〉 실제 남성의 연 수입과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연 수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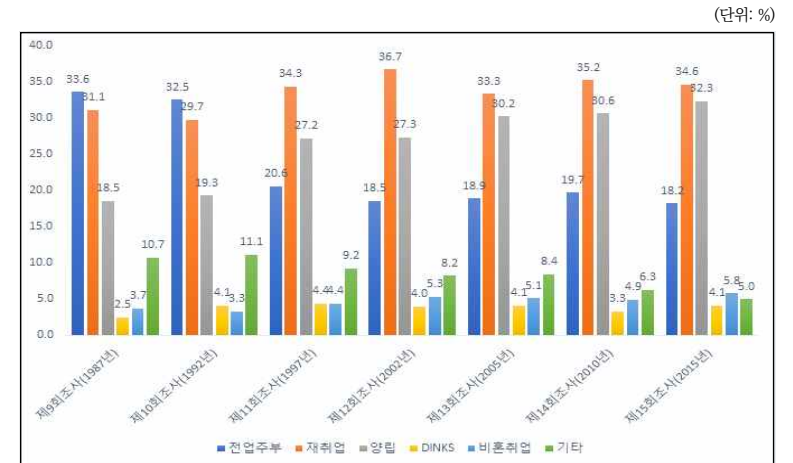
| 연수입 | 200만 엔이하 | 200~400만 엔 | 400~600만 엔 | 600만 엔이상 |
|------------|----------|------------|------------|----------|
| 실제 남성의 연수입 | 33.8 | 43.2 | 19.5 | 3.5 |
| 여성의 기대 연수입 | 29.7 | 4.3 | 26.8 | 39.2 |

出所: 山田昌弘・白河桃子 (2010) 『婚活時代』, p26.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 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변화가 관찰됨
 - 전업 주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희망하는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그림 3-7)

[그림 3-7] 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생애주기



출처: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第15回出生動向基本調査」, 各年度

□ 가치관의 변화

○ 최근 미혼자 가운데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다’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남성은 1/3 이상, 여성은 일시적으로 반수 이상일 정도로 높은 편(표 3-5)

- 또한, ‘독신 생활을 계속해도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남성은 1997년 37.5%에서 2015년 48.4%, 여성은 1997년 30.0%에서 2015년 36.2%로 증가(그림 3-8))
- 이러한 배경으로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약해진 점과 편리한 가전제품의 보급 및 외식산업의 발전,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인해 혼자 살아도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점을 생각해볼 수 있음

〈표 3-5〉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단위: %)

| 성별 | 제10회조사 (1992년) | 제11회조사 (1997년) | 제12회조사 (2002년) | 제13회조사 (2005년) | 제14회조사 (2010년) | 제15회조사 (2015년) |
|----|-------------------|-------------------|-------------------|-------------------|-------------------|-------------------|
| 남성 | 34.7 | 42.3 | 39.1 | 36.0 | 36.0 | 35.3 |
| 여성 | 42.4 | 50.9 | 47.0 | 44.0 | 42.9 | 41.8 |

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임」, 기타를 포함.
출처: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第15回出生動向基本調査」, 各年度

[그림 3-8]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단위: %)



주: 「그렇게 생각함」과 「그렇게 생각하는 편임」을 포함.

출처: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第15回出生動向基本調査」, 各年度

나. 1980년대 전후의 환경 변화

□ 1980년 이전

○ 당시의 결혼 시장은 다양한 면에서 규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주장함

- ①직장이나 맞선 등 만남의 장이 한정, ②만날 수 있는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만난 이성에게 호의를 느끼기 쉬웠음, ③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결혼 후 남녀의 역할이 명확했었기 때문에 결혼 후 생활을 예측할 수 있어 모두 결혼을 결정하기 쉬운 환경

□ 1980년 이후

○ 경제적으로 규제 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결혼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모함

- ①많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만남의 기회의

격차가 확대, ②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기혼의 기준도 높아졌음

- 즉, 1980년대 이후부터는 결혼을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환경이 되어 가소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 이외에 출산 후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증가 등과 같은 결혼 후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혼을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출생 동향 기본 조사'에 따르면, 미혼자의 결혼 의사가 1987년의 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약 92%였고, 2015년 조사에서는 85% 이상으로 결혼 의향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생애미혼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결국 이것은 山田(2010)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미혼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함

3. 초식남

- (초식남의 정의)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면서 연애에도 섹스에도 '적극적'이지 않게 여성을 대하는 '초식남자'라 정의할 수 있음(深澤真紀, 2007)
- 최근 미혼자의 이성 교제 비율은 감소 경향에 있으며, 교제하고 있지 않은 미혼자 중에서 교제를 희망하고 있지 않는 자의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음
 - 남성의 경우, 1992년 26.3%에서 2015년 21.3%, 여성의 경우, 1992년 35.5%에서 30.2%로 감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7)
- 또한, 결혼할 의사가 없는 남성들 중에서 혼자 사는 생활이 외롭지 않다는 비율이 75%로 높은 한편(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7), 취미나 라이프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약 절반 정도
 - 즉, 이성 교제를 하지 않아도 즐겁게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남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결혼 의사가 없는 남성들 중에서 갖고 싶은 것을 살 돈이 없는 남성

이 절반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부모와 동거 중인 미혼 남성의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초식화하는 남성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초식화하는 남성이 존재할 가능성 존재

- 요컨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미혼 남성이 초식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4. 유토리 세대와 사토리 세대

□ 유토리 세대란 간단하게 유토리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고 할 수 있음¹⁰⁾

○ 일반적으로 1987년 4월 2일~2004년 4월 1일생의 세대를 지칭함

- 주로 지식을 주입하는 그 동안의 방식이 문제시되어, 수업시간과 내용을 줄여 경험중시형의 여유가 있는 학교생활을 목표로 2002년도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었음¹¹⁾
- 그 후 약 9년간에 걸쳐 실시된 교육 커리큘럼을 유토리 교육이라 함
- 2011~2012년에 학습지도요령이 재개정되었는데¹²⁾, 이 때 이후의 교육을 탈유토리교육이라 칭함

○ 原田(2013)에 따르면, 유토리 세대는 그들이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진 세대인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유토리 세대는 종종 사회 및 그 윗세대로부터 부정적인 의미로 야유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유토리 세대로 불리는 것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유토리 세대보다 사토리 세대가 그들의 세대적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고 있음

10) '유토리(ゆとり)'란 한국어로 '여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동안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내용을 암기시키는 주입식 교육에서 교과 과정을 개혁하여 이전보다 여유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11) 고등학교는 2003년에 개정됨.

12) 고등학교는 2013년에 재개정됨.

- 사토리 세대란 사토리(깨달음, 듣도)한, 즉 모든 것을 깨닫고 득도한 세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하나는 유토리 세대의 다음 세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 또 하나는 유토리 세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임
- 原田(2013) 및 阪本・原田(2015)는 후자의 설을 지지하고 있음
- 사토리 세대라는 말은 2010년 1월 니찬네루(2ちゃんねる)라는 홈페이지에서 고 야마오카 타쿠씨(전 일본경제신문기자)의 저작 ‘욕심없는 젊은이들(ほしいがない若者たち)’을 주제로 한 게시판에서 나옴
- 阪本・原田(2015)는 사토리 세대를 1983년~1994년생의 세대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세대의 특징으로서 ‘물욕이 없음’, ‘여행을 하지 않음’, ‘음주를 하지 않음’, ‘연애에 관심이 없음’ 등, ‘결과를 깨닫고(사토리), 희망을 갖지 않으며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原田(2013)에서는 사토리 세대를 불경기 및 디플레이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욕심 없는 젊은이들’로 정의함
- 이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기대를 하여 후에 실망하는 것보다 일종의 처세술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깨달은 것과 같이 침착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고 지적함
- 유토리 세대와 사토리 세대의 공통된 시대적 배경¹³⁾
- 저출산으로 인하여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가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 ‘1.57 쇼크’가 있었던 1990년생 인구는 약 120만 명이었으나, 그 윗세대인 단카이 주니어(1971~1974년생)는 매년 200만 명 이상 태어났음
 - 세대 인구 감소 및 대학수의 증가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대학 진학률도

13) 阪本・原田(2015)의 내용을 정리함.

증가함

- 버블경제 붕괴 이후의 ‘잃어버린 20년’의 시기에 유소년기 및 사춘기를 지내고 어렸을 때부터 불경기 및 디플레이션 경제, 격차사회를 경험한 세대임
- 역으로 버블경제 및 경제가 성장하는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으며, 1988~1992년에 태어난 세대는 제 2의 취업빙하기(2010~2013년줄)의 영향을 받은 세대임
- 휴대전화 및 인터넷, 소셜 미디어(SNS)가 급속히 보급된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 형성 및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사토리 세대 중 후반 세대(1987~1994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임

□ 사토리 세대의 특징¹⁴⁾

-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온 심적 내성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큼에도 생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음
- 원래부터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 유지 및 약간의 기쁨에도 민감함
 -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유복한 생활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자라온 경위가 있음
 - 또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크고, 사토리 세대의 여성 간에는 전업주부를 지향하는 이들의 비율도 큼
- 휴대전화(스마트폰) 및 SNS의 보급에 따라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게 된 결과, 주위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강한 동조 의식이 생겨남
- 동세대간의 수평적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위기를 살피고’, 주위 사람과 잘 동화되는 것을 좋은 것이라 생각함

14) 原田(2013) 및 阪本・原田(2015)의 내용을 정리함.

- 역으로 회사 등의 상명하달식 수직적 인간관계에 적응하기 힘들어 함
- 디스플레이션 경제 상황에서 코스트 퍼포먼스를 중시하고, 고가의 물건(자동차, 술, 해외여행, 명품 등)을 소비하려는 의향이 적음
- 반면, 적은 금액을 조금씩 소비하거나 친구들끼리 나눠 내는 소비, SNS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한 ‘좋아요’ 소비 등이 늘어나 소비 스타일이 다양해짐

제3절 2010년 이후의 주요 사회현상

1. 고독 관련 현상¹⁵⁾

- 최근 일본에서는 ‘고독’이라는 것은 곧 ‘병’이라 할 수 있고, 그 중 ‘고독사’는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예를 들어, 30대 독신 남성이 부모에게도 병을 알리지 않고 고독사를 맞이한 케이스나 은둔형 외톨이 경향이 있는 50대 독신 남성이 심장 질환으로 고독사한 케이스 등이 있음
- 이러한 ‘고독사’의 70% 이상이 본인의 컨디션 관리나 생활에 무관심한 결과,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악화시키는 ‘자기 무시(Self-neglect)’라 불리는 행태와 관련이 있음

가. 고독사 확률을 높이는 요인

- 생애 미혼율의 상승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 미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경제적인 요인 등이 관련되어 있음
-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가?’나 ‘보람 있는 취미나 일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 혹은 ‘그런 편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남녀 모두 매년 증가

15) 본 소절의 내용은 東洋經濟 (2018) 를 참조함

하는 경향이 있음¹⁶⁾

- 한편, ‘부담 없이 함께 놀 수 있는 친구가 많은가?’에 대해 ‘그렇다’ 혹은 ‘그런 편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감소 경향에 있음
- 이러한 결과로부터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친구는 많지 않지만, 의미 있는 취미 생활과 일 덕분에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은 채 중년 및 노년을 맞는 사람도 일정 수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 이혼

- 이혼 건수 및 이혼자 비율은 40대 이후에서 크게 나타남
- 2015년 인구센서스의 연령별 이혼자 비율을 보면, 남성 40~44세는 약 4%, 45세~49세는 약 6%, 50대는 약 7%이며, 여성의 40세~44세는 약 8%, 45세~49세 및 50대는 약 10%에 이르고 있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9)
- 이혼 이후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함
- 이처럼 중년층에서는 이혼으로 인해 고독을 느끼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이혼으로 자녀와 떨어져 고독을 느끼는 경우의 사례도 존재함

□ 유대감의 결핍

- 고독을 느끼게 되는 요인의 하나로서, ‘커뮤니티의 약화’를 들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혈연간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음
- 내각부의 ‘2016년 고령자의 경제·생활 환경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 활동(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고령자는 약 70%이며, 내각부의 ‘2015년도 사회의식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는 지역 내 교류에 대해 ‘교류가 별로 없다’ 혹은 ‘교류가 전혀 없다’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약 30% 존재

16)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出生動向基本調査』, 各年度

- 또한, 20대는 약 60%, 30대는 약 절반, 40대는 약 40%가 '교류가 별로 없다' 혹은 '교류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년 세대에서도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약하다는 사실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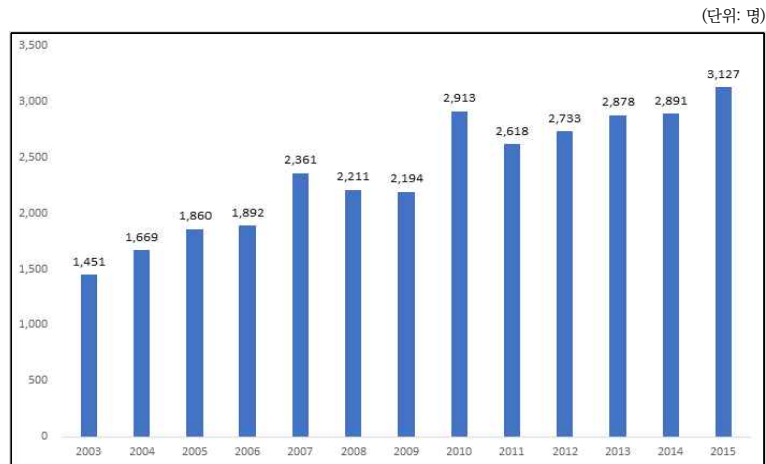
나. 중년 히키코모리 및 8050 문제

- 2009년의 내각부 조사에서 추계된 히키코모리 수는 약 70만 명으로, 35세~39세에서 2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세~34세로 나타나 연령층이 높은 이들 중에서 히키코모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함(内閣府, 2009b)
- 이후 2015년의 내각부 조사에서 추계된 히키코모리 수는 54만 명, 35~39세, 30~34세가 20.4%로 동일하게 분포함
 - 상기 두 조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히키코모리의 수가 6년 동안 16만 명이 감소한 것
 - 그러나 상기 조사의 대상이 15~39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9년 조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35~39세의 히키코모리들이 이후 조사에서 제외되어 감소된 것뿐이라는 비판을 받음
 - 이러한 이유로 일본 내각부는 2018년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함
- 히키코모리가 된 계기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질병'과 '직장에서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음'임
 - 다른 이유로 '취업이 잘 안됐음'이 있는데, 이것과 상기 '직장에서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음'을 포함하면 44%로 나타나, 직장 관련 이유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기 조사에서 30대 연령층에는 90년대의 불황에 의해 취직이 어려웠던 취업 빙하기 세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결과로 히키코모리가 된 이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최근 히키코모리가 된 중년의 자녀를 고령의 부모가 돌보는 '8050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¹⁷⁾
- 히키코모리가 된 중년의 자녀 중에는 생활을 지원해 주던 고령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고립되어 고독사할 가능성이 있음
 - 65세 이상 도쿄의 23구내에 거주하는 독거 고령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건수는 2003년 1,451건에서 2015년 3,12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그림 3-9)
- 1인 가구로서 사망 후 상당 기간 경과한 후에 발견된 건수는 2012년을 제외하면 약 130건에서 정도임(도표 24)
 - 모든 히키코모리의 부모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로부터도 고독사하는 고령자 일정 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7) '8050'이란 80대의 부모가 50대의 자녀를 부양한다는 의미로, 이전에는 '7040문제'라고 하였음.

[그림 3-9] 자택에서의 사망수(65세 이상의 1인 가구 사망자 중)



資料：東京都監察医務院統計データベース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ansatsu/database/>) 各年度版

〈표 3-6〉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건수 추이: 1인 가구, 2010~2015년

(단위: 명)

| 연령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65세이상 | 132 | 131 | 157 | 129 | 140 | 136 |
| 65세미만 | 52 | 69 | 63 | 65 | 46 | 43 |

출처: 厚生労働省(2017)「平成29年版高齢社会白書」

2. 노노개호

□ 고령화를 일찍부터 경험해온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본인이 배우자를 부양(개호)하는 경우와 고령자인 자녀가 초고령자인 부모를 부양(개호)하는 ‘노노개호’가 증가하고 있음

○ 요개호자를 개호하는 이들은 주로 요개호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58.6%), 이들의 구성을 보면, 배우자가 25.2%, 자녀는 21.8%(厚生労働省, 2016)

- 또한, 동거 중인 개호자의 연령 구성 비율은 남녀 모두 60~69세가 가장 높으며, 남성이 28.5%, 여성이 33.1%임. 이어서 70~79세의 비율이 높으며, 남성이 16.9%, 여성이 25.1%(厚生労働省, 2016)

○ 이러한 사실로부터 동거하며 고령의 남편(아내)을 개호하는 고령의 아내(남편)나 고령의 부모를 개호하는 고령의 자녀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노노개호’가 증가하는 배경

○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 개호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충분한 소득이나 저축이 없는 고령자가 존재한다는 점

- 고령자의 평균소득은 308만이고, 저축이 없는 고령자도 15% 존재(厚生労働省, 2016)

- 평균수명은 해마다 상승 경향에 있고, 고령의 부모를 개호하는 동안 개호자인 자녀가 고령이 되는 경우도 배경으로 들 수 있음

- 고령의 부모를 개호하는 고령의 자녀 중에는 부모의 개호와 일을 양립하기가 어려워져 경제적인 면에서 괴로움을 겪는 이들도 존재함

3.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에 대해서 일본 사회는 그동안 고령자나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그 부족분을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왔음

○ 그러나 최근 일손부족이 심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증가 경향에 있음

- 후생노동성 통계에 의하면, 2018년 10월 시점에서 약 146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서 취업하고 있음¹⁸⁾

18) 法務省「在留外国人統計」

(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 외국인 노동자는 해마다 증가 경향에 있어 2016년에는 전년대비 증감비가 18%인 한편,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소 수도 증가하고 있음¹⁹⁾

□ 또한, 최근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재류자격 신설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입국관리법에서는 새로운 재류 자격으로서 '특정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확대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새로운 재류 자격인 '특정 기능'은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호와 '숙련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호로 구분됨

- 제1호의 경우, 재류 기간은 통산 5년이며, 원칙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없으나,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의 동반을 인정하고, 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 시 심사를 통과하면 갱신 회수에 제한이 없음

-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일본에서 중요한 노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일본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약 27%이고, 그 다음이 베트남 약 22%, 필리핀이 약 11%²⁰⁾

-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이 약 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타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업 약 16%, 도·소매업과 숙박·음식 서비스업이 각각 약 13%이며,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육체 노동이나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²¹⁾

□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어 간호나 간호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2008년에 EPA(경제연계협정)에 의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에서 간호사 혹은 개호복지사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오고 있음

○ 이들의 국가 자격시험의 합격률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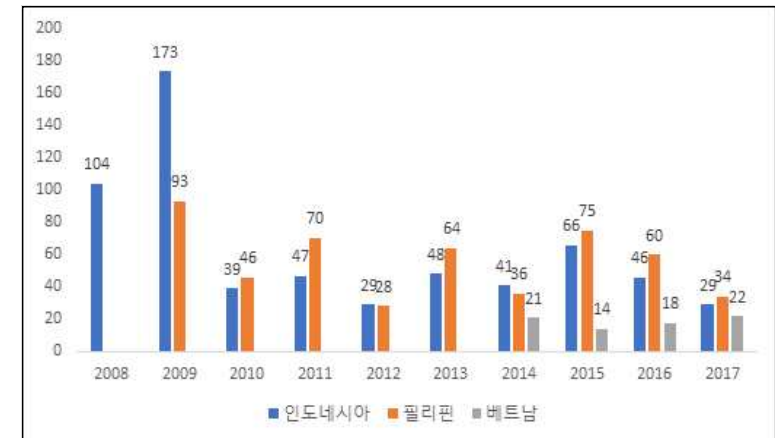
- 개호 복지사의 합격률은 약 50%가 합격하고 있는데 반해 간호사의 합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험자의 10% 정도만이 합격하고 있음²²⁾

○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는 간호사나 개호복지사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외국인의 활약이 기대됨

- 이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시험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거나, 한자에 일본식 가나읽기를 첨부하거나,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최근의 합격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그림 3-10] EPA로 일본에 온 간호사수 추이: 2008~2017년

(단위: 명)



자료: 厚生労働省「経済連携協定(EPA)に基づく外国人看護師・介護福祉士候補者の受入れ概要」、各年度

19) 주16)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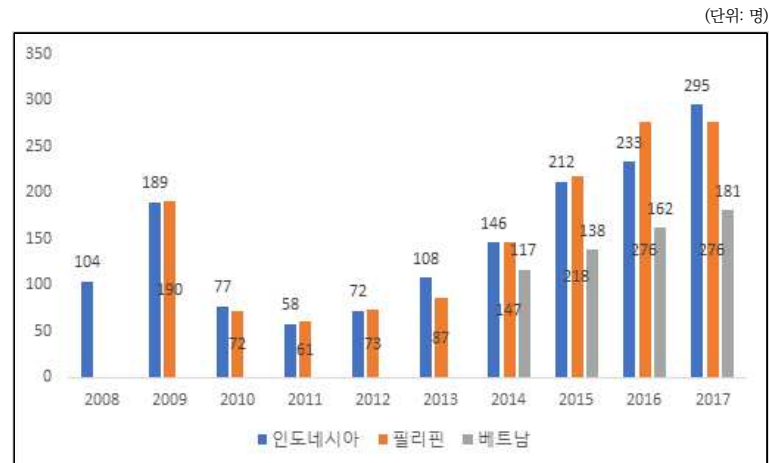
20) 厚生労働省「『外国人雇用状況』の届出状況まとめ(平成30年10月末現在)」

(https://www.mhlw.go.jp/stf/newpage_03337.html)

21) 주18)과 동일

22) 厚生労働省「経済連携協定(EPA)に基づく外国人看護師・介護福祉士候補者の受入れ概要」를 참조.

[그림 3-11] EPA로 일본에 온 간호사수 추이: 2008~2017년



자료: 厚生労働省「経済連携協定(EPA)に基づく外国人看護師・介護福祉士候補者の受入れ概要」, 各年度

제4절 소결

- 제3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보이기 시작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세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90년대에서의 사회 현상은 주로 버블경제 붕괴라는 사건으로 시작되어 경제 전반에 파급된 영향이 주를 이루게 됨
 - 버블경제 붕괴 후의 장기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취업 재수생 및 비정규직 노동자(프리터 포함)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시기에 취업 및 취업 준비를 한 이들을 취업 빙하기 세대라 정의
- 2000년대는 90년대의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전 세대보다 경제력이 감소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현상도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2000년 중반 고용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으나, 2008년의 금융위기로

또 다시 경기는 하강하여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이들의 빈곤 증가

- 특히 2008년을 기점으로 20, 30대의 생활보호수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고용의 불안정성도 증가
- 이 시기에 나타난 것이 워킹푸어 및 넷카페 난민이라고 할 수 있음
- 청년들의 경제력 약화는 이들의 결혼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혼도 취업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혼활'이 널리 쓰이게 됨
 - 무엇보다도 여성이 결혼상태로 생각하는 남성의 기대 연 수입과 실제 미혼 남성들의 수입과의 괴리가 발생하여 미스 매칭이 일어남
 - 또한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및 가치관이 변화하여 결혼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함
- 결혼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이들을 초식남이라고 정의
- 버블경제 붕괴 이후의 '잃어버린 20년'의 시기에 유소년기 및 사춘기를 지내고 어렸을 때부터 불경기 및 디플레이션 경제, 격차사회를 경험한 세대를 유토리·사토리 세대로 정의
 - 유토리 세대와 사토리 세대는 같은 시대를 경험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고,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세대의 범위는 유토리 세대가 사토리 세대보다 넓게 분포
 - 단, 사토리 세대 중 후반 세대가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임
- 2010년대에도 90년대 이후의 경기 불황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인 것이 중년 히키코모리 및 8050 문제 등이 있으며,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 90년대에 나타난 니트 및 히키코모리가 점점 고령화되어 중년 히키코모리 및 8050 문제가 나타나게 된 주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로 고령자 간에 개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노노

개호)과 일손이 부족해져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등이 나타나
게 됨

제 4 장

일본의 경제·고용·복지정책

제1절 골태방침

제2절 경제정책

제3절 고용정책

제4절 복지정책

제5절 소결

4

일본의 경제·고용·복지정책 <

제1절 골태방침(骨太対策, 경제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

- 일본정부는 1995년 대장성(현, 재무성)이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이후 재정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실시하였으나 정권의 변화와 석유위기 등 침체된 경기 위기는 회복하지 못함
-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자리를 잡고, 재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집행함(서세옥, 2012)
 - 고이즈미 내각은 재무성에 맡겨져 있던 예산편성권을 총리관저로 이전하였으며, 총리를 의장으로 한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발족
 - 이 회의를 통해 2001년 6월 처음으로 '경제재정 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골태방침)'을 공표(콘도 다이ске, 2018)²³⁾
- 이후 골태방침은 일본의 예산편성 및 세제개혁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잡는 주요 재정운영계획으로 매년 6월 공표
 - 따라서 경제뿐만 아니라 고용과 복지의 모든 영역, 즉 정권에서 추진하려 하는 모든 정책이 총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단, 민주당 정권(2010~2012년)동안 중단되었다가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이래 다시 매년 공표되고 있음

23) 콘도 다이ске (도쿄 리포트)일본 정부의 '2018골태방침'과 인구정책의 향배 2018.8.17. 중앙시사매거진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2615#self>에서 인출 (2018.10.19.)

1. 2001년 주요 내용²⁴⁾

- 일본 정부는 향후 2~3년간 일본경제의 집중적인 조정기간을 잡고 단기적으로는 저성장을 감수하면서 부실채권 정리 등 구조개혁 추진하는 것에 목적을 둠
- 부실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개 개혁 프로그램의 추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책 프로세스를 개혁하고,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담음
- 민영화 규제개혁(민간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위임한다는 원칙하에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보조금을 삭감
 - 의료/복지/교육 등 공적주체가 공급하는 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
- 도전자(Challenger) 지원(열심히 해나가는 사회시스템)
 -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의 의욕을 저해시키지 않는 사회시스템을 구축
 - 독점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정책을 강력히 실시함
 - IT모델지구, IT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IT혁명을 추진
- 보험 기능 강화(국민의 「안심」과 삶의 「안정」)
 - 개인별로 사회보장 부담내용을 알고 평가가 가능한 사회보장개인회계시스템(가칭)을 구축
 - 공적 연금의 경우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구축함과 아울러 사적연금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고령자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보장
 - 의료분야는 의료서비스의 표준화, 정보통신을 활용한 의료정보 공개, 주식 회사방식을 통한 경영형태 다양화 등 의료서비스 효율화 프로그램(가칭) 추진

24) 골태방침 위키피디아 참조(<https://ja.wikipedia.org/wiki/骨太対策>)에서 인출(2018.12.11.)

○ 지적 자산 증대(개인의 선택하는 자유 안에서의 인재육성)

- 인재대국 과학기술 창조립국 실현을 위한 지적자산 증대 관점에서 교육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life science, 정보통신, 환경, 나노 케트로노지, 재료를 4대 전략분야로 중점 육성
- 인재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개인에 대한 보조로 정책 변경

○ 생활개선(유신)프로그램(느긋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정비)

- 다기능 도시 계획의 추진 등으로 직장과 주택을 근접화하도록 함
- 보육소 대기 아동이 없도록 만들고 방과후의 아동을 위한 대책을 정비
- 성별, 연령별 고용차별 철폐,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방안 강구 등

○ 지방자립 활성화(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으로)

- 지방에 대한 관여 축소, 국고보조, 부담금 삭감, 지방교부세제도 재검토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화 도모
- 수도 등 지방 공영기업의 민간영영기법 도입 촉진, 각종 사회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으로 지방의 활성화 도모

○ 재정개혁 프로그램(21세기에 걸맞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

-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시스템 및 예산편성 과정을 쇄신
- 국가와 지방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 투·융자, 국가와 지방간 재정이전, 특수법인 등과의 자금이전 등에 관한 설명책임을 부과하여 투명성 확보

2. 2002년 주요 내용

□ 산업경쟁력이 낮아진 원인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하는 고도성장을 이룬 일본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넣고자, 6가지 전략과 30가지 액션 프로그램을 계획

○ 인간력 전략

- 경제 성장도 사회 안정도 결국은 '사람'에 의존한다는 가치를 가짐
- 능력과 개성을 닦고 사람과 사람의 교류·협력에서 상호 계발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인간력이 느긋하게 발휘되고 활력 넘치는 일본을 재생하자는 취지를 가짐
- 대학을 개혁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며, 학교와 교원의 개성과 경쟁을 통해 기초학력을 유지·향상 시킴.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이 함께 사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능력에 따른 임금·취업 체계를 도입
- 단순한 장수가 아닌 건강수명을 향상시켜 사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 결과의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

○ 기술력 전략

- 나노 기술, IT, 생명 공학, 환경을 비롯한 첨단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강화·보호하고 '세계 제 1 주자'를 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중점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실시하여 기존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과학기술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대학과 기업의 상호작용을 높임
- 국가단위의 프로젝트를 통해 '실용화 단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IT화 추진하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여 지적 재산이 국가적 차원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임함

○ 경영력 전략

-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제조업의 강점을 살리면서 슬립한 경영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자원을 집중
- 창업에 따르는 장애물과 위험을 낮추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를 활발하게 함
- 환경변화와 제조 및 제품의 특성에 따라 기업구조 조정, 해외 생산, 다문화 이주 등 경영 체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창의성, 유연성 의욕이 넘치

는 중소기업의 신사업에 대한 도전과 기업회생을 적극 지원

- 기업 활동의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공급하는 직접적인 금융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혁과 정부 활동의 효율화를 통한 고비용 구조의 시정이 요구됨

○ 산업 발굴 전략

- 풍부한 자연 환경, 의료·개호 서비스, 육아 지원, 거리 풍경과 고품질 주택 등 국민의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요 창조형 생활 산업을 창출
- 기술혁신을 개척하는 21세기 새로운 수요를 발굴함. 고령화·평생 현역시대의 도래, 여성의 사회 진출, 휴가의 장기 연속화 등 일하는 방식, 생활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잠재 수요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와 제품으로 실현하는 생활 산업을 창출
- 지구 온난화 대책 실시 등 환경 산업의 활성화, 관광 산업의 활성화·휴가 장기 연속화, 식품 산업의 활성화, 문화·스포츠·건강 등의 산업화, 성역을 배제한 민영 사업 확대

○ 지역력 전략

- 대도시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지방에서는 개성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잠재적인 경제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혜와 노력의 경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 구조개혁 특구의 도입 등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국가 경쟁력 있는 대도시의 재생, 특색 있는 지방 도시의 재생, 지역이 자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을 활성화

○ 글로벌 전략

- 외국 자본의 진출 산업의 구조 조정, 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열린 시장'을 구축하고, 대내 직접 투자의 증대는 고용창출, 경쟁 촉진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 및 경영 노하우 확산 효과가 있음

○ 세출 주요 분야의 구조개혁

- (사회자본 정비) 국가에서 지방으로, 관에서 민으로 공공투자의 실효성 있는 전략, 기존 프로젝트를 재검토, 공공사업 관계 계획을 다시 검토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사회보장 급여비의 증대와 국민 부담률, 향후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기본방침 건강수명의 증진과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3. 2003년 주요 내용

□ 구조개혁의 기본이념은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의 이념을 세웠으며, 디스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3가지의 선언과 7가지 개혁을 계획

□ 3가지의 선언

- (경제활성화) 민간의 활력을 막는 규제·제도나 정부의 관여를 제거하고 민간 수요를 창조
- (국민의 「안심」의 확보)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미래를 전망할 수 있고, 노인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가질 재정의 확립) 재정의 신임을 확보하고 성과를 중시

□ 7가지 개혁

○ 규제 개혁·구조 개혁 특구

- 의료·복지·교육·농업 등 관의 참여가 강한 서비스 분야의 민간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이용자의 선택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신규 수요와 고용 창출을 가속화

- 지방이나 민간에서 정기적으로 전국 규모의 요청 및 구조 개혁 특구의 제안을 받아 들여 이러한 항목은 '전국' 혹은 '구조 개혁 특구'에서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 개혁 특구에서는 규제의 특례 조치의 효과 등을 평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은 즉시 전국 규모의 규제 개혁에 연결함

○ 자금의 흐름과 금융 산업 재생

- 불량 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간접 금융을 재생시켜 금융 시스템을 강화
- 증권 시장의 구조 개혁과 활성화를 추진하고 직접 금융의 확대·충실을 도모
- 우편 저금·간이 보험, 연금의 자금 조달·운용 및 리스크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계속 검토
-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밝히면서 공공 지출의 규율을 강화
- 정책 금융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다시 검토를 진행
- 공공 부채의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
- 산업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

○ 세제

-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세제 개혁'에 이어 임함
-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세제 개혁을 실시
- '국가와 지방'의 '삼위 일체 개혁'과 세제 개혁을 실시
- 부담에 대한 국민의 납득을 얻을 수 있도록 세금과 부과금의 환경을 정비

○ 고용·인적 자원의 강화

-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 할 필요가 있음
- 고용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연계, 지역의 자주성, 이용자 선택의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민간 사업자에 위탁 등 민간의 최대한의 활용이 중요
- 특히 청소년에 관해서는, 지역의 주체적 노력에 의한 민간 활용에 유의 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

- 국민이 요구하는 안심 실현을 위한 고용 유지 노력과 함께 고용 기회의 확대, 실업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 의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평가와 학교 선택의 자유의 확대 및 교원의 의욕과 능력에 따른 처우 등이 필요
-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개혁의 확실한 추진과 엄격한 성과 평가 등에 의한 경쟁 환경의 정비가 필요

○ 사회 보장 제도 개혁

- 경제와 조화, 그리고 국민 생활의 안심을 확보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 사회의 활력의 근원
- 따라서 활력있는 고령 사회를 구축하는 가운데,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면서 사회 보장 급부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 부담률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
- 연금제도는 현행 제도의 유지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되어 세대 간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게 되어 급부와 부담의 개혁을 실시함. 또한 "평생 현역 사회"나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를 향한 개혁을 실시
- 보험자의 재편·통합 고령자 의료 제도, 진료 보수 체계에 대한 기본 방침의 조기 구체화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증가의 적정화 방안과 공적 보험 급부의 내용 및 범위의 재검토 등의 과제 조기 검토·실시 「향후 경제 재정 운영 및 경제 사회의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2001년 6월 26일 각의 결정. 이하 「기본 방침 2001」)에 포함 된 '의료 서비스 효율화 프로그램 (가칭)'의 조기 완전 실시 등 의료 개혁을 가속
- 연금·의료·간호·생활 보호 등의 사회 보장 서비스를 일체적으로 파악해 제도의 설계를 상호 연관시켜 실시

○ '국가와 지방'의 개혁

- '관에서 민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개념 하에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기초한 자주·자립의 지역 사회로 구성된 지방 분권 형태의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

가 있음

- 따라서 사무 사업 및 국고 보조 부담 사업의 본연의 자세의 과감한 정비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관여를 축소하고 세원 이양 등에 의해 지방세의 충실을 도모함으로써 세입·세출 양면에서 지방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음
-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방이 스스로의 지출을 자신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충당 비율을 늘려 진정한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지방의 책임 하에 자발적으로 선택 폭을 확대
- 동시에 행정의 효율화, 세출 감축·합리화를 비롯한 국가·지방을 통한 재무 행정 개혁을 강력하고 일체적으로 진행시켜 재무 행정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변화해 나가는 등 '효율 목표로 작은 정부'를 실현

○ 예산 편성 과정의 개혁

- 하향식 예산 편성을 더욱 강화하고 세출의 과감한 중점화를 도모
- 정책 목표를 국민에게 알 수 있는 형태로 명확하게 표시 (선언) 목표 달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실행) 목표 달성 상황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평가)는 예산 편성 과정의 확립을 목표
- 2004년도 예산에서 새로운 예산 편성 과정을 시범사업으로 도입

4. 2004년 주요 내용

□ 집중 조정기간의 마무리 해로 버블 붕괴 후의 잔재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집중 조정 기간'에서 '중점 강화 기간'으로 변경하여 디스플레이션에서 탈피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강화를 도모

○ '관에서 민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실시

- 우정민영화의 착실한 실시, 규제 개혁·민간 개방의 적극적 추진, 지역의 진정한 자립

○ 관의 개혁의 강화

- 예산제도 개혁의 본격화, 공공 부채 관리의 충실을 통한 시장 안정, 행정 개혁,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세제 개혁

○ '국민의 개혁' 추진

- 미래의 인구 감소 하에서의 성장 전략의 수립, 기업 등의 촉진과 새로운 기업 법제 금융 시스템의 추가 개혁의 추진

○ '인간력'의 근본적 강화

- '인간력' 강화를 위한 전략 검토,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용 관련 사업의 재편, 교육 현장의 활성화 등

○ 「지속적인 안전·안심」의 확립

- 사회 보장 제도의 종합적인 개혁, 저출산 대책의 충실, 건강·개호예방의 추진, 치안·안전의 확보, 순환형 사회의 구축·지속적인 발전기반 확보

○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점시책

- 지역재생: 지역재생의 적극적인 전개,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추진, 지역의 기간산업 등의 재생·강화
- 고용정책·인재육성 시책의 새로운 전개: 직업 교육의 강화와 「청소년 자립, 도전플랜」의 강화,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 노동 이동의 원활화 등
- 「신산업 창조 전략」의 추진, 시장 환경의 정비 및 발전 기반 강화: 신산업 창조전략 추진, 공정거래를 위한 규칙 강화, 경제협력 추진 대일 직접투자 촉진 IT전략 추진, 과학기술 창조입국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중소기업의 혁신 및 재생

5. 2005년 주요 내용

□ 경제버블에서 벗어난 일본의 경제를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3가지 변화를 추진

○ '자금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 우정국을 민영화하여 관련 법안을 성립시키고, 2002년 정책 금융개혁에 따라 정책 금융의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진 자산 부채관리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개혁을 실시하고, 삼위일체개혁의 실현을 확실하게 추진
 - 지방재정 계획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화 테스트의 본격적인 도입 등 철저한 민간 개방. 예산제도를 개혁하여 성과목표(Plan)-예산의 효율적 집행(Do)-엄격한 평가(Check)-예산 반영(Action)을 실현
- ‘사람과 조직을 바꿔야 한다.’
- 국가·지방의 철저한 행정개혁을 이루며, 공무원의 총 인건비를 절감
-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역동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 재정구조 개혁의 강력한 추진(세출·세입 일체 개혁)
 - 2010년대 초반에 국가·지방을 맞춘 기초 재정 수지 (2005년도 GDP 대비 4% 정도의 적자) 흑자화를 목표로,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이 보조를 맞춰 세출·세입 일체 개혁을 추진
 - 기초적 재정 수지 개선을 위한 중기 대책에 대해 중점 강화 기간 내에 그 결론을 얻음
 - 국민의 안전·안심의 확보
 - 공공시설 및 주택 등의 내진화 등의 대규모 지진 대책, 치산치수 대책을 비롯한 재해 대책 투자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육·해·공의 공공 교통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지속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구축
 - 사회보장 급부비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적정화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 를 목표로 정기적으로 달성현황을 점검함. 구체적으로 시장화 테스트의 실시 등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대폭적인 인력 감축, 외부 민간 감사 등을 실시
- 차세대 육성
 - 「소자화 대책 대강」「아이·육아 지원플랜」등의 후속을 실시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속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여성의 재취업·취업을 위해 「여성 재도전 지원플랜(가칭)」을 실시하고, 교육을 개혁하여 평가에 충실하고 다양성의 확대, 경쟁과 선택의 관점을 중심으로 실시
 - 인간 능력의 강화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민간 교육 훈련기관을 활용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고, 청소년이 일하는 동기를 부여하면서 그 직업적 자립을 촉진
 - 글로벌 전략 강화
 - 경제 외교 국내 구조 개혁, 지역 경영, 국제 분업 등을 통해 세계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전략-일본의 세계전략」을 실시

6. 2006년 주요 내용

- 2006년 기본방침을 「새로운 도전의 10년」을 목표로 장기적 경기침체를 벗어나,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고, 주변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함
- 5년간의 개혁 추진으로, 새로운 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 위에 풍요롭고 안심할 수 있는 일본을 후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
- 성장력·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
-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안전보장에 관한 각각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경제성장이 요구

-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라는 과제는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및 아시아의 활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일본형 성장모델을 구축하여 극복

○ 재정 건전화로의 구조

-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출·세입 통합개혁을 향한 구조
 - 「통합개혁」에서는 미래의 목표치, 선택사항, 진척상황 등을 포함하고 그 전모를 알기 쉽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 때, 후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구조를 가능한 빨리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기본입장
- 재정건전화 계획은 중장기 관점에서 건실한 경제를 전제로 확실히 실행

○ 안전·안심의 확보와 유연하고 다양한 사회의 실현

-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안전·안심에의 높은 관심 및 재도전의 기회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하여 안전·안심의 확보와 유연하고 다양한 사회를 실현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인 개혁, 재도전 지원, 종합적인 저출산대책 및 개인이나 지역의 생활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정비

7. 2007년 주요내용

- 저출산(인구 감소)상황에서 성장을 실현하는 것, 1인당 시간당 생산성을 5년간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
- 그동안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해왔으나, 현재는 제도의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원점부터 검토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
- 새로운 국가이미지로 「아름다운 나라」를 제시하고 자유·규율·지속가능성의 요소를 갖추어 새로운 체계를 구축

○ 성장력 강화

- (성장력에 대한 확대에 있어서 “기초력”을 강조하여 확대) 「Job card 제도(직업능력형성시스템)」의 구축, 모자가정, 생활보호세대, 장애인 등의 취업에 관한 5년간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Project 추진 및 최저임금제도의 충실화
- (서비스 혁신전략에 있어서 “효율”을 강조) 전자상거래 등 공통기반의 정비(2010년까지) 등, IT에 의한 생산성 향상시키고, 「Ubiquitous 특구」(2007년도 중 설치) 등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력 재생기금」(가칭)의 설치를 위한 검토, 지역 밀착형 금융에 관한 감독지침의 개정(2007년도), 제3섹터(지방공기업)에 대한 시장가격에 기초한 적정평가, 「규제집중개혁 Program」(늦어도 연내에 일정 결론), 「서비스산업생산성협의회」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혁 등을 추진
- (성장가능성 확대 전략으로 “창조력”을 강조) 혁신적인 의약품, 의료기기를 창출하고, 세계 최첨단 콘텐츠 유통추진법제를 정비하며, 대학·대학원을 개혁하여 교육비를 절감시키는 노력 실시
- (글로벌화 개혁으로 “개방된 국가”를 강조) WTO DD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공정표에 따라 EPA(FTA) 협상 추진강화, 미국·EU와의 EPA는 장래과제로 검토하고, 가능한 국가·지역부터 추진
 - 「금융·자본시장 경쟁력강화 Plan」(2007년중 수립)을 통해 거래소의 종합적(주식, 채권, 금융선물, 상품선물 등) 취급을 실현하고, 은행·증권 Firewall 규제를 개선, 항공자유화(Asia open sky)를 위해 「Asia Gateway 구상」에 의한 항공자유화 공정표를 수립하고, 하네다 공항의 국제전세기(정기편 포함) 취항 촉진
-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복선형의 “공정한 근로방식”의 실현) 「Work life balance 현장」 및 「근로방식이 바뀌어야 일본이 변화 행동지침」의 제정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활력 없이는 국가 활력도 없다.”를 실시

○ 21세기형 행정 재정 시스템을 구축

-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출·세입 통합개혁을 향한 구조
 - 「기본방침 2006」에 제시된 5년간 세출개혁을 착실하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며 세출전반에 대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국가 단위의 사업과 지방 단위의 모든 사업에서 최대한 세출을 삭감
 - 「새로이 필요한 세출은 원칙적으로 다른 경비의 삭감에 의해 대응」, 「세수의 자연증가는 안정하게 세출 등에 충당하지 않고, 장래 국민부담의 경감에 사용」하는 등 규율 있는 재정운영
 -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의료·개호서비스 질향상·효율화 프로그램」(2008 - 2012년을 기본으로 전략적 지표 및 목표연도를 설정)을 추진하며, 이 프로그램을 기초로 「기본방침 2006」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방안 제시
 - 「기본방침 2006」(2.6조엔 정도)을 상회하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을 목표로 개혁을 구체화
-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개혁 시도) 소자화대책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며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구조로 세제 개혁, 예산제도 개혁, 공무원 제도 개혁, 독립행정법인 개혁, 자산채무 개혁 시장화 테스트, 지방 분권 개혁
- 지속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검토하여 「1인 1일 1kg」의 온실효과 가스 삭감을 목표로 한 국민운동(Summer time 등)을 실시함
 - 모든 자녀가 높은 학력과 규범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재생을 실시
 - 효과적인 소자화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효과적인 재정 투입에 대한 내용을 검토
 - 질 높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보험청을 폐지·분할하고 새로운 공적연금 운영체제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압 대책이나 긴급 상황시 의사를 확보하는 정책방안 등을 추진
 - 치안·방재·에너지 정책 등의 강화로 「세계 제일의 안전국가」를 부활

8. 2008년 주요 내용²⁵⁾

- 일본경제의 과제는 ① 세계에 활약하는 일본경제를 만들기, ② 지구환경과 양립하는 경제를 만들기, ③ 빈틈없는 사회보장제도 만들기, ④ 국민이 주역이 되어 정부를 만드는 것을 목표
- 성장력의 강화
 - 일본의 인재력, 기술력, 자금력, 문화력의 강점을 살려 환경, 안전·안심에 대한 잠재적 니즈를 돌파구로 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을 견인. 또한 모든 인재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 활성화에 의한 지역고용과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성장
- 저탄소 사회 구축
 - 환경·에너지 분야의 발전된 기술, 일본의 '환경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지구환경과 공생하는 저탄소 사회 만들기를 일본내외로 가속화 시킴
- 국민분위의 행정·재정 개혁
 - 이를 위해 지방분권, 국민 중심의 행정, 절약을 실현하는 재정을 구축
-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질 높은 국민생활 구축
 - 사회보장서비스, 공급체제에 대한 낭비, 비효율성을 검토하고 의사 부족에 대한 대응, 인구감소 대책, 장수의료제도의 운용개선의 과제에 대한 필요한 방안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심을 확보, 원유가격의 폭등,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전략적인 자원·에너지 정책 실시

9. 2009년 주요 내용

25) 내각부 홈페이지 참조(<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에서 인출 (2018.12.11.)

- 일본의 경제를 아직 구조적 위기의 상태로 보고 경제의 당면에 있는 바닥 균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
- 수출과 생산으로 일부 긍정적인 현상들이 보이지만, 국내 고용의 악화와 더불어 디플레이션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음
- '경제위기대책' 등에 따라 금융대책, 고용대책을 세우고,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기업·가족·지역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층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 이제 제도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용을 축으로 하는 안심사회를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심」과 「활력(성장력 강화)」을 목표로 사회의 위기에 일체적 대응하고자 함

○ 활력

- 경제위기 대책 등에 기초, 더 이상의 경기하락을 막고, 확실한 경기회복·반전을 실현
 - 성장전략「저탄소혁명」(태양광 발전, 저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교통, 도시혁명), 건강장수(노인복지 강화, 지역의료 강화 등), 매력발휘(농림수산업 잠재력 발휘, IT저력 발휘전략 등)
- 농정개혁
- 아시아·세계경제에의 지속적 공헌(교토 의정서, 신흥국과의 관계강화 등)
- 활력과 독자성 있는 지역만들기(지방분권 개혁추진 등)
-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를 조망, 산업·고용구조를 전환함으로써 지속적 인 성장 기반조성
 - 기반기술개발 등에 의한 중소기업 활성화
 - 연구개발 강화(연구자 최우선 지원제도)
 - 규제·제도개혁(라이프 사이언스분야 등의 규제개혁 검토·지원 등)

○ 안심

-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행정에 대한 신뢰회복·강화
 - 생활안심보험 재구축(사회보장 기능강화, 소자화(少子化)대책)
 - 안전·생활의 확보 등(소비자청 창설, 장애인 지원 등)
- 고용을 축으로 한 생활안심 보장의 재구축 추진
 - 방위·재해·치안(북한 미사일도발 등에 대한 안보대처, 대규모 재해 대책 등)
 - 교육의 재생(공교육의 질 향상 등)

○ 책임

- 경제성장 및 사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 건전화 목표를 수립하고 중장기적 대처 방안을 명확화
 - 행정개혁 지속
 - '작고 따뜻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양(量)적 개혁'과 함께 '질(質)적 개혁'도 추진
 - 새로운 정원 합리화계획 책정(5년간 10%이상)
 - 중앙·지방정부의 Primary Balance를 5년 이내 반감, 10년 이내 흑자화
 - 중앙·지방의 GDP대비 채무 잔고 비율을 2010년 중반까지 안정화, 2020년부터는 축소 목표

10. 2013년 주요 내용

- 90년대 초반 버블붕괴의 큰 고비에서부터 일본경제는 약 20년 동안 대체로 낮은 경제성장에 만족해 왔는데, 이러한 거시경제의 악화는 장기화되어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등 악영향을 미침
- 이에 해결 우선과제는 1) 장기적인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탈출하고, 2) 국민의 한사람으로 구조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3) 경제의 발전과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과 사회보장을 다시 구성해야 함

○ 디플레이션에서 조기 탈피와 재생의 10년을 위한 기본전략

- (대담한 금융정책) 소비자 물가를 전년 대비 상승률 2%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통화는 2년 만에 2배로 확대
- (기동적인 재정정책)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의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
-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성장 전략)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성장 전략을 실행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
- (기업에서의 가계 파급고용과 소득의 증가)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등을 절감하고 원자재 다변화 등으로 가격 협상력을 강화시켜 실질 국민총소득 성장률을 높임
- (경제 살리기와 재정 건전화의 선순환) 「기동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 촉진 세수 등을 증가시켜 재정 건전화에 기여
- ('재생 10년'을 통한 거시경제의 모습과 그림) 중장기적으로 2%이상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10년간(2022년까지) 평균 명목GDP성장률을 3% 높이는 것을 목표

○ 풍부하고 안전·안심생활의 실현

- ('일본 재흥 전략'의 기본설계)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과학기술 혁신 등의 기반 강화, 새로운 성장 분야의 개척(전략 시장 창조 플랜), 세계화 활성화
- (재난의 대처 가속)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 주의를 철저하게 함. 재난대응 예산에 대한 프레임 재검토, 재난 대응 방법 구체화
- (교육 등을 통한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기 위한 기반 강화)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시책(대학의 국제화)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일본문화재 보존·활용
 - 여성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구축, 저출산 위기 돌파, 청소년·고령자 등의 활약 추진 안전망 정비
- (지역 농림 수산업 중소기업 등의 재생) 도시재생·마을 만들기, 지역활성화

등,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 창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지원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기반 확보) 지속가능성을 증시하는 중장기 투자 추진, 지구 환경에 대한 공헌, 국토강인화를 통한 자연재해 대비, 안전하고 안심하는 사회의 실현 등(소비자 행정, 치안·사법·국방 등)
- (강한 경제, 풍요로운 생활을 지탱하는 공공부문 개혁) 행정 개혁 추진, 지방분권 개혁 추진, 공공부문의 민간 참여 촉진, 세계 최고 전자 정부의 실현

○ 경제 살리기와 재정 건전화 양립의 기본개념

- 디플레이션 탈출, 경기 회복, 경제 재생을 실현
-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성장 전략과 재정구조를 구축
- 재정의 질을 세출·세입 양면에서 철저하게 강화
- 사람, 기업, 지역이 성장하는 구조로 개혁을 추진
-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재도전의 구조를 정비
- 지속적 성장과 재정 건전화를 함께 제공하는 세제

11. 2014년 주요 내용

□ 아베 노믹스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과제로 1) 디플레이션 탈피와 일본 경제 재생, 2) 경제 살리기의 진전을 위한 기본 방향, 3) '창조와 가능성의 땅'으로 동 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4) 일본의 미래상에 관한 제도·시스템의 개혁이 주를 이룸

○ 여성의 활약, 교육 재생을 시작하는 인력의 충실 발휘

- 여성의 활약 남녀의 일하는 방식 개혁
- 교육 재생 실행과 스포츠·문화 예술 진흥
- 경력 형성의 실현 등 청소년 등의 활약 촉진
 - 청소년 등의 활약 촉진과 재도전을 지원함. 일생동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육성, 노동 시장 인프라와 인력 부족에의 대응 등

- 저출산 대책
- 건강 장수 사회의 활력
- 혁신의 촉진 등에 의한 민생 주도의 성장 궤도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 구조의 개혁
 - 혁신
 - 기업 지배 구조
 - 개방적인 나라 만들기
 - 자원·에너지
 - 규제 개혁
-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 농림 수산업·중소기업 등의 재생
 - 「새로운 동북아」창조
 - 2020년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도쿄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한 노력
 - 관광·교류 등에 의한 도시 재생, 지방 분권 집계·활성화
 - 농림 수산업·지역의 활력 창조
 -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의 약진
- 안심·안전한 생활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의 기반 확보
 - 전략적 외교의 추진, 안보·국방 등
 - 국토 강인 화 (내셔널 탄력성), 방재·감재 등
 - 생활의 안전·안심 (치안 소비자 행정 등)

12. 2015년 주요 내용

- 본 골태방침에는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흑자화(재정건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제시
- 주요내용으로는 ①현재 일본경제의 과제 및 기본적방향성, ②경제의 선순환 확대 및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③경제·재정일체(一體)개혁, ④2016년 예산

편성을 위한 기본적인 입장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

- 경제선순환 확대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 일본의 잠재력 강화와 미래사회를 위한 개혁, 성장하는 해외시장과의 연계 강화, 혁신·국가시스템 실현, IT·로봇에 의한 산업구조개혁
 - 여성 등 다양한 인재의 활용
 - 지역·인재양성·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
 -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기반 확보
- 주요 분야 개혁기본방침과 중요과제
 - (사회보장) 사회보장체계 및 세제개혁을 추진하여 경제회생과 재정건전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 실시
 - (사회자본정비) 기존시설·시책을 활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스펙효과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중점화된 시책을 추진
 - (문화교육과학기술·외교·안전보장·방위 등) 저출산에 따른 예산 효율화, 민·자도입 촉진, 예산운용의 질적 향상 등을 추진
 - (세입개혁 등) 경제구조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세입증대를 추구, 특히 젊은 세대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기반 재구축

13. 2016년 주요 내용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목표로 명목GDP 600조 엔 경제로 가는 기본 방향을 잡고 쿠마모토 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조기 복구 추진 대응
- 결혼·출산·육아의 희망, 일하는 희망, 배우는 희망의 실현
 - 노동력인구 확보를 위해 '자녀·육아지원', '여성 활약 추진', '개호환경 정비' 등 사회보장정책 추진
- 성장전략의 가속
 -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업무환경 개선/ 성장전략 가속을 위해 인재 육성, 연

구개발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확대

- 개인소비의 환기
 - 임금 인상·가치분소득의 확대·대형세일 도입 등을 통한 개인소비 환기
- 성장과 분배를 연결하는 경제재정시스템 구축
 - 아베노믹스로 인한 세수 증가를 사회보장정책의 재원으로 활용 등
- 안심 안전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기반 확보
- 경제·재정 일체개혁 추진
 - 경제·재정 일체개혁의 착실한 추진
 - 선진·우량 사례의 전제 추진, 국가와 지방의 연계 강화, '가시화'의 철저·확대
 - wise spending 시스템 강화
 - 실효적인 PDCA cycle 구축
 - 각 주요 분야 개혁의 추진

14. 2017년 주요 내용²⁶⁾

- 일본경제 현황은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방안을 중심으로 두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축하고, 인재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시키며, 지방활성화(地方創生)와 소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에 주력함
-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복구 작업과 구마모토 지진대응을 주요골자로 함
 - 일하는 방식 개혁 및 인재투자를 통한 평생 현역사회 실현
 -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여 동일노동 동일 임금, 장시간 노동의 해소, 유연한 근로방식을 위한 환경 정비, 육아·간병 등과 일의 병행, 외국 인력을 유치
 - 격차 고정 방지 위한 인재투자 및 교육의 근본적 강화로 저출산 대책, 아동·

육아대책을 지원

- 성장전략 가속화 등
 - Society 5.0 실현 방안, 생산성 향상 시책, 투자 촉진, 규제개혁, 새로운 유망성장시장 창출 및 확대, 해외 성장시장과의 협력 강화,
- 소비 활성화
 - 가치분소득 확대, 새로운 수요 창출
- 지방창생, 중견·중소기업 미 소규모 사업자 지원
 - 지방창생, 공격적 농림수산업 추진, 중견·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지원, 지역 활성화, 국토강인화(國土強靱化)·방재, 성장력 강화 위한 공공투자 증점화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삶과 경제사회 기반 확보
 - 외교·안보, 치안·소비자 행정, 공조사회 및 공생사회를 위한 노력, 자원·에너지, 지구환경에 대한 기여, 통계 개혁

15. 2018년 주요 내용

- 소비세 증세와 소비 급변동 대책
 - 2019.10월 소비세 증세를 명기하여 소비세 증세 재연기에 대한 논란을 확실히 불식시킴
 - 소비세 증세 전 소비 급증과 증세 후 소비 급감으로 인한 경제 후퇴를 막기 위하여 ①증세 전후에 사업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②증세 후 자동차와 주택구입 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③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교육 실시 등 2019-2020년 본예산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재정건전화 계획
 -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시기를 2025년으로 하고, 중간 검증을 위하여 아래 3

26)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65/list.do)에서 인출 (2018.11.11.)

가지 목표를 마련

- 2021년에 ①기초재정수지를 GDP대비 1.5%로 감축하고, ② 국채 이자 지불비를 포함하는 재정적자를 GDP대비 3%이하로 하며, ③국가채무잔액은 GDP대비 180% 초반으로 축소
- 사회보장이나 기타 일반 세출은 그동안의 세출개혁을 지속하고 지방재정은 일반재원의 총액을 현 수준에서 유지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인재양성 및 생산성 향상
 - 유아 교육·보육의 완전 무상화 조기 실시, 저소득 가구의 국립대학 입학금 면제, 소유자 불명 토지 활용 등 내용을 포함
 -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새로운 전개, 경제구조 혁신 기반 조성, 성장전략 추진 방안 등을 담음
- 일하는 방식 개혁
 - 장시간 근로의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고도전문직 제도의 창설 등을 포함

제2절 경제정책²⁷⁾

1. 1990년대 초중반(버블경제 붕괴기, 1991년경~1997년경)

- 버블경제붕괴 후의 경제정책은 버블경제시기에 상승했던 자산 가격 하락함에 따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역자산 효과가 나타나는 등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중심
- 특히 재무 건전성 악화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업계의 부실채권의 형태로 현저하게 나타남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발생은 이들의 대출행태를 소극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써 경기회복을 더욱 더디게 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대형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위기 및 파산이 이어져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민간 수요의 감소, 기업 도산 증가 등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음

□ 따라서 1992년 이후 경제대책 및 예산편성 등의 재정정책은 사회자본정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됨

- 1994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후퇴에 따라 재정이 악화된 점과 1993년 후반에 경기가 최저점을 경험하여 경기확대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했기에 전년대비 증가율을 억제함
 - 그러나 1995년의 급격한 엔고 현상과 미국경제의 하강에 따라 봄과 가을의 2번에 걸쳐 과거 최대의 공공투자를 포함한 경제정책이 책정됨
 - 또한, 버블경제붕괴후인 1991년부터 1997년 중반까지는 7번의 경제정책이 실시되었으나,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음
- 이 시기의 금융정책은 저금리 정책이 유지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1991년 7월의 기준금리는 6.0%에서 5.5%로 내린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어 1995년 9월 이후 버블경제시기 중 가장 경기가 좋았던 1997년 중반에는 0.5%라는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함
-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를 위하여 각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더욱 촉진시키고, 충당금 운용제도의 개선, 채권 유동화 촉진 등을 시행하는 한편, 1993년 4월에는 민간은행의 부실채권을 민간의 자금으로 사들이는 공동채권 매수기구를 설립함
 - 이 시기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를 주로 민간에게 부실채권을 스스로 삭감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대응들이 이루어짐

□ 이 시기의 주요 경제정책

- 침체된 수요에 대응한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내수 진작을 도모

27) 본 절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5),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家森・近藤(2011)을 참조함.

-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7번에 걸친 경제대책 실시(사업규모 누계: 약 67조엔)

○ 1990년 후반 이후 자산가격 하락에 대응한 금융완화정책 실시

-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하(1991~1995년)

○ 1995년의 엔고에 대한 대응

-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수준인 0.5%로 인하

○ 소비세율을 5%로 인상(2% 인상, 1997년 4월)

2. 1990년대 말(1997년경~2000년경)

□ 1993년 가을에 경기가 바닥을 친 이후, 금융 긴축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고, 1994년부터 1996년에 걸쳐 대규모 감세가 이루어짐

○ 1995년 가을에는 공공투자 등의 확대를 중심으로 당시로서는 과거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이 실시됨

- 이러한 공공투자는 경기회복의 기폭제가 되어 이후 민간수요가 증대되어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 1997년 초에는 1995년부터 실시된 소득세 등의 영구감세와 함께 소비세가 3%에서 5%로 인상이 예정대로 실시되었고, 후반에는 '재정개혁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²⁸⁾이 성립하는 등, 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한 대응이 이루어짐
- 그러나 소비세 인상에 의한 사재기 수요 증가, 아시아 경제 및 통화 위기의 영향, 1997년 후반의 대형 금융기관 주식 파탄 등으로 경기는 축소 국면으로 접어들

□ 1997년 이후부터는 수요가 감소하여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익이 감소하고, 물가

28) 1997년 1월 성립. ①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자의 대 GDP비를 3% 이하로 함, ②2003년까지 특별 공채 의존에서 벗어남, ③2003년의 공채의존도를 1997년보다 낮출 등을 정하였으며, 세출 개혁과 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책을 정한 것임. 1998년 12월에 '재정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성립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었음.

도 하락 기조인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이 기업경영 악화 및 고용 감소를 가져오고, 그 결과로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소위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룸

○ 1997년 이후의 경제정세에 맞추어 2002년까지 9차에 걸친 경제대책이 책정되어 감세, 추경예산편성, 공공사업 등의 조기 집행이 실시됨

□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시스템 불안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행이 원활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경기와 금융시스템을 지탱하고 있었음

○ 또한 1998년에는 금융안정화 2법²⁹⁾에 의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자금 충당 및 공적자금 증대, 1999년에는 주요은행 15개에 대한 공적자금 증대가 이루어짐

- 부실채권 공개 범위는 1992년 이후 순차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1997년에는 전국 은행의 리스크 관리 채권 공개 범위가 확대되어, 미국 SEC 기준과 동일하게 되었음
- 1998년에는 리스크 관리채권의 계상 기준 변경 및 금융재생법에 근거한 부실채권 공개가 대형 은행에서 실시되어 더욱 폭넓은 개념의 부실채권이 공표됨
- 또한, 부실채권 공개의 확충과 함께 1998년 중반 이후, 각 은행에 대하여 금융 감독청, 대장성³⁰⁾ 재무국, 일본은행이 집중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함
- 1999년에는 금융 감독청의 금융검사 매뉴얼이 작성·공표되어 은행 자신의 감시 향상을 도모함
- 이러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1997년 이전과 비교하여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음

○ 이처럼 재정금융정책은 디플레이션 스파이럴 방지를 위한 경기 부양, 금융완

29) 개정에금보험법 및 금융기능 안정화 긴급조치법. 최대 30조 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페이오프 해금(2001년 3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예금을 전액 보호하고, 금융기관 우선주 등을 공적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담고 있음.

30) 현재의 재무성의 전신.

화, 부실채권의 엄격한 심사를 추진하여 정확한 부실채권액 파악 및 부실채권 처리 등이 주된 목표였다고 할 수 있음

□ 이 시기의 주요 경제정책

○ 부실채권처리, 디플레이션 대책

- 금융 감독청의 금융검사 매뉴얼 작성 및 공표(1997년)
- 각 은행에 대한 금융 감독청, 대장성 재무국, 일본 은행에 의한 집중 검사 실시(1998년)
- 주요 은행 21개에 대한 공적자금(약 1조 8천억 엔) 투입에 의한 우선 주 등의 인수에 따른 증자실시(1998년)
- 금융시스템 개혁 4개 법안 성립(1998년)
- 금융재생법, 금융기능 조기진전화법 성립(1998년)
- 주요 은행 15개에 대한 공적자금(약 7조 4600억 엔) 투입에 따른 증자실시(1999년)
- 일본은행의 제로금리 정책 도입(1999년~2000년)

○ 재정구조개혁

- 재정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립(1997년 11월, 1998년 12월 효력 정지)

□ 경제계획

○ 경제사회의 본 모습과 경제신생 정책 방침(1999년)

- (계획의 목적) 다양한 지혜를 가진 사회 형성,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감소사회에 대한 대비, 환경과의 조화

3. 2000년대(2000년경~2008년경)

□ 이 시기 정책의 중점과제로는 ①디플레이션 극복과 부실채권문제 해결, ②규제개혁 및 제도개혁, ③중앙정부 및 지방의 재정개혁, ④관민의 역할분담 개선 등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정비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경제활성화전략,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 등임

□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2002년까지 악화일로를 걸어온 재정상황, 미국 9·11 테러 사건 후의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의 디플레이션 억제 등을 목표로 한 경제대책이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면서도 실시되었음

○ 2002년 이후는 '개혁과 전망(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에서 2010년대 초반 기초재정수지의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함

- 경제대책을 포함한 경제대책 전반에 있어서 예산규모를 억제하는 한편, 규제개혁, 제도개혁 등의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짐

□ 금융정책은 2001년 3월에 디플레이션이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³¹⁾ 동안의 목표를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에 둔 이후 소위 말하는 양적완화정책³²⁾으로 전환함

○ 이것은 이론상 금리 하락에 의한 효과, 은행 대출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외 자산 수요를 높이는 것에 의한 간접적 효과로서의 환율 감가 효과 등이 기대되었기 때문에 실시됨

□ 이 시기의 주요 경제정책

○ 부실채권처리, 디플레이션 대책

-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시행(2001년)
-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형 은행(리소나 은행)에

31)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0% 이상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32)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목표를 이전까지의 4조엔에서 5조엔으로 증액하였음. 목표 실현을 위하여 장기국채 매수액 인상을 단행함. 그 후 당좌예금 잔고목표액은 순차적으로 인상되어 2004년 말에는 30~35조엔 정도임

공적자금 투입(2003년)

○ 페이오프 해금(2005년)

○ 재정구조개혁

- 2010년대 초반의 기초재정수지의 흑자화 목표(2002년 이후의 '개혁과 전망(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

□ 경제계획

- 개혁과 전망('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에 대하여', 2002년, 2003년, 2004년)
- 경제사회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개혁, 부실채권처리의 촉진, 구조개혁(규제 개혁, 재정구조개혁(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디플레이션 극복

4. 2000년대(2008년경~2012년경)

□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한 경제 대책은 '생활대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일 먼저 이루어짐

○ 환율 불안정으로 인해 원자재 구매의 불안정성도 높아짐에 따라 '원재료가격 급등대응 등 긴급보증(이하, 긴급보증제도)'과 '세이프 넷 대출 확충' 정책 시행

- 긴급보증제도는 민간금융기관에서 받은 융자의 변제를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하는 것임(일반보증 8000만엔, 무담보 보증 8000만엔, 보통보증 2억엔 까지)
- 세이프티 넷 대출은 정부 산하 중소기업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 융자제도로써 융자 범위는 종래의 3조엔에서 10조엔으로 증액됨

○ '생활대책'에 있어서 금융자본시장안정대책으로서 은행 등에 부과된 자기자본 비율규제를 국제적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탄력적으로 운용

□ 2008년 12월 11일 일본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재무성의 발표와 함께 위기대응 원활화 업무제도가 발동됨

○ 국제적인 금융질서의 혼란으로 일시적인 기업 상황의 악화 및 자금 융통난이 발생한 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산하 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가 지정금융기관인 상공조합중앙공고와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신용제공을 하여 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제공함

- 일본정책투자은행이 기업에 발행하는 커머셜 페이퍼를 2조엔 정도 구입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융통 지원을 함

○ 2008년 12월 11일 개정 금융기능강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2월 17일 시행됨

- 금융기능강화법에 근거한 자본제공은 2008년 3월말까지 기한이었으나,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2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으며, 공적자금 범위는 종래의 2조엔에서 12조엔으로 대폭 증액하였음

□ 2009년 2월 23일 '도전지원 자본강화 특례제도'를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시행

○ 2008년 4월부터 구 중소기업금융공고에 도입된 신규사업 및 기업재건을 위한 기업에 기한일괄상환형 대출제도로써 당해 사업자가 도산할 경우에 상환 우선순위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가 대출제도

- 이 제도를 확대한 것이 '도전지원 자본강화 특례제도'임

□ 2009년 3월 10일에는 '은행등의 주식 보유 제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2년 3월말까지 한시적 시행)

○ 은행 등 보유주식 취득 기구에 의한 주식 매수가 재개됨

- 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등 보유주식 취득기구가 시중으로부터 차입할 경우의 정부보증 2조엔에서 20조엔으로 증액됨

□ 2009년 3월 10일 '금융원활화를 위한 새로운 대응에 대하여' 발표

- 전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긴급보증부 용자에 있어서 전액 변제보증이 강구되었으며, 특별히 자기자본비율규제상 리스크 웨이트를 10%에서 0%로 하향하는 조치를 취함
- 수익이 악화된 기업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관련된 약식대출채권(covenant)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약식대출채권 변경 및 유예할 경우에도 부실채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함

□ 경제위기대책 발표(2009년 4월 10일)

- 긴급보증규모를 20조엔에서 30조엔으로 확대
 - 그동안 무담보 대출이 8000만엔, 보통보증이 2억엔이었으며 이 보통보증이 담보가 원칙이었으나, 신용도가 높고, 실질적인 보전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협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무담보 대출도 8000만엔을 넘어서 가능해짐
- 세이프티 넷 대출 규모를 10조엔에서 17조엔으로 확대하고 이자를 낮춤

□ 1999년 제정된 '산업협력 재생특별조치법'이 '산업협력 재생 및 산업활동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됨

-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채 및 자금 차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원금의 50%(상한 70%)의 채무보증을 서는 '사업재구축원활화등채무보증'
- 사업의 지속을 위한 자금 차입을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차입 원금의 50%를 상한으로 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사업재생원활화채무보증'
- 급격히 경영이 악화되어 용자가 아닌 출자가 필요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협조용자를 받는 것이 가능, 즉 상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민간의 지정금융기관(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의 출자에 대하여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일부손실보전을 행하는 '출자원활화의 손해담보제도'³³⁾

□ 2010년 4월 '내일의 안심과 성장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수립 시행

- 단, 긴급보증제도의 경우, 종료기한(2010년 3월)보다 앞서서 2010년 2월 15일부터 '경기대책긴급보증'으로 시행
 - 일부 예외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예산은 이전 30조엔에서 6조엔 증가된 36조엔임
- 세이프티 넷 대출은 예산을 4조엔 증액하여 21조 엔으로 하고 이자 조정

□ 이 시기의 경제대책

- '원재료가격급등 대응 등 긴급보증'(2008년 11월)
 - 원유 및 원재료 가격 등 구매가격의 급등을 크게 받을 수 있는 545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상
- '세이프 넷 대출 확충'(2008년 11월)
 -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4억 8천만엔까지, 소규모 기업은 4800만엔까지 대출 지원
- 금융기능강화법 개정(2008년 12월)
 - 일부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 수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경영책임 및 주주책임을 일률적으로 묻지 않는 것으로 함
 - 또한, 계획된 중소기업 대출비율 및 잔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우선 그 이유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업무개선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함
- '도전지원자본강화특례제도' 도입(2009년 2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재무체질 강화와 민간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
- '은행등의 주식 보유 제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9년 3월 10일)

33) 2010년 9월말까지 한시적 조치임.

- ‘금융원활화를 위한 새로운 대응에 대하여’ 발표(2009년 3월 10일)
 - 전년도에 성립된 금융기능강화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금융기관에 촉구하기 위하여 ①공적자본의 배당이자 등을 평시 수준으로 설정, ②경영강화계획에 업무조이익경비율(OHR)의 말기실적이 초기 수준을 넘어도 기계적으로 감독하지 않을 것, ③금융기관 CEO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동법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조치도 포함
- 산업협력재생 및 산업활동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년 6월)
 - ‘사업재구조원활화채무보증’, ‘사업재생원활화채무보증’, ‘출자원활화의 손해담보제도’ 시행
- 경제계획 등
 - 경제위기대책 발표(2009년 4월)
 - ‘내일의 안심과 성장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수립 시행(2010년 2월)

4. 2010년대(2012년경~현재)

- 2010년대의 경제정책은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기 아베내각에서 추진했던 아베노믹스로 대변됨
- 아베내각의 경제정책은 크게 제1기의 경제정책과 제2기의 경제정책으로 나뉘어 지며 각각 ‘3개의 화살’로 대변되는 정책이 존재함
 - 제1기의 경제정책은 아베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전략’으로 구성됨
 - 제2기의 경제정책은 소위 ‘1억총활약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캐치프레이즈로 2015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희망을 가져오는 강한 경제’, ‘꿈을 이루는 육아정책’,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보장’으로 구성됨

1) 제1기의 경제정책³⁴⁾

- 제1기 경제정책의 ‘대담한 금융정책’은 기업·가계에 만연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인식을 불식시키고, 일본은행은 경제·물가정세를 감안하여 2%의 물가안정목표를 실현함
- 일본은행은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이념으로 금융정책을 운영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책무임
 - 물가는 단기적으로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에 지속가능한 물가의 안정 실현을 목표로 함
 - 일본은행은 앞으로 일본경제의 경쟁력과 성장력 강화를 위해 폭넓은 주체들의 대응에 발맞추어 지속가능한 물가 안정과 정합적인 물가상승률이 높아져갈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일본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를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 상승률로 2%로 함
 - 일본은행은 상기 물가안정 목표 하에 금융원활화를 추진하고, 이를 가능하면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정책 효과의 파급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 측면에서의 불균형 축적을 포함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지 확인해 나감
- 정부는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하여 기동적인 거시경제정책운용에 노력하며, 일본경제재생본부 하에서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 이노베이션 기반 강화, 대담한 규제·제도 개혁, 세제 활용 등 단호한 정책을 총동원하여, 경제구조 개혁을 도모하는 등 일본경제의 경쟁력과 성장력 강화를 위한 대응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

34) 내각부 홈페이지 참조(<https://www5.cao.go.jp/keizai1/abenomics/abenomics.html>)에서 인출 (2018.12.5.)

- 또한, 일본은행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신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대응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함
-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금융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운영의 상황, 물가안정 목표에 맞춰 물가 상황과 앞으로의 예상, 고용정책을 포함한 경제·재정상황, 경제구조개혁 대응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함
- ‘기동적인 재정정책’은 디플레이션 극복을 보다 원활하게하기 위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며, 지속적인 성장에 공헌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성장전략과 연계함
- 1.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2013년 1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복구 가속, 방재 강화
 - 현재까지의 체제와 대처를 강화하여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복구함
 - 노후화한 인프라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산업·생활 기반의 강화를 도모
- 기동적인 경제재정운영
 - 가능한 조기에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여 디플레이션 예상을 불식
 - 지속적 성장에 공헌하는 분야 및 일본을 지탱하는 잠재성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그 중에 특히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것 및 수요창출효과가 높은 정책은 우선시함
 - 공공투자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사업, 성장 및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점화
 - 정부와 일본은행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명확한 물가목표 하에 일본은행이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대함
 - 환율시장의 동향은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적절하게 대응
- 성장을 위한 전략 시행

-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가’, ‘개인의 가능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고용과 소득이 확대되는 국가’, ‘무역입국’과 ‘산업투자입국’의 투톱으로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입국’을 목표로 함
- 민간투자 및 이노베이션 촉진,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지원, 신시장 개척과 고용 창출 확대, 인재육성 및 청년고용확대, 재취업(창업 등)이 가능한 환경 정비
- 잠재력이 높은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대담한 규제개혁·제도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 정비
- 2.(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 2013년 12월 5일)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사재기수요와 그의 따른 반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연도 전반부터 수요를 발생시키는 정책에 중점을 둠
 - 일시적인 반작용 완화뿐만 아니라, 성장궤도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의 성장력을 상승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비 및 설비투자 유도 등 민간 수요 및 이노베이션 유발효과가 높은 정책을 중점화함
- 3.(지방의 선순환 확대를 위한 긴급경제대책, 2014년 12월 27일)
 - 경제의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확실하게 하고, 지방에 아베노믹스 효과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하여 ①지역의 실정을 배려하며 소비를 유도, ②고용창출 등 지방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통해 지방의 활성화를 앞당김, ③재해복구 등 긴급대응과 복구를 가속화함
- 4.(미래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 2016년 8월 2일)
 - 내수를 진작하고,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개혁을 추진함
 - 본 대책은 수요 진작에 멈추지 않고, 민간 수요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중심으로 함

□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전략’은 민간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과 투자에 의한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과 보수라는 결과를 민간에 충분히 전달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³⁵⁾

○ ‘일본재흥전략」- JAPAN is BACK -’(2013년 6월 14일)은 세 개의 화살 중 세 번째 화살로서 앞서 언급했던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과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임

- 이 전략은 성장을 위한 대응으로써 ‘일본산업재흥플랜’, ‘전략시장창조플랜’, ‘국제전개전략’의 실행 전략을 내세우며, ‘일본산업재흥플랜’은 긴급구조개혁 프로그램 및 고용제도 개혁 및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혁신이 포함됨
- ‘전략시장창조플랜’은 국민의 건강수명 증진과 깨끗한 에너지 수급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의 경제적 자원화로 구성되며, ‘국제전략전개’는 통상 및 해외시장개척, 성장을 지탱하는 자금 및 인재 개발과 관련됨

○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 - 미래에 대한 도전 -’이 2014년 6월 24일 각의 결정됨

- 본 개정에서는 전년도 성장전략에서의 과제였던 노동시장개혁, 농업 생산성확대, 의료·개호분야의 성장산업화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춘 해결 방향성을 제시함
- 또한, 2014년 1월 1일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아베 총리가 언급한 법인세 개혁, 국가전략특구의 규제 돌파, 여성인력 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담겨 있음

○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 - 미래 투자·생산성 혁명 -’이 2015년 6월 30일 각의결정됨

- 디스플레이션 탈출을 향한 움직임을 명확히 하고, 미래 발전의 초석을 재구축함

- 아베노믹스는 디스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무엇보다도 수요부족 해소에 중점을 둔 ‘제1스테이지’에서 인구감소 하에 공급제약을 넘어서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제2스테이지’에 돌입함

- 아베노믹스의 ‘제2스테이지’에서는 설비 및 기술, 인재 등에 대한 ‘미래투자에 따른 생산성혁명 실현’과 활력 있는 일본경제를 회복하는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을 두 축으로 추진함

○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6 -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해 -’가 2016년 6월 2일 각의결정됨

- 경제가 조금씩 선순환하고 있고, 이러한 선순환을 지속시켜 경제의 성장노선으로 삼아 ‘전후 최대 명목 GDP 600조엔’ 달성 목표
- 앞으로 새로운 ‘유망성장시장’의 전략적 창출, ‘인구감소에 따른 공급 제약 및 일손부족을 극복하는 ‘생산성 혁명’, ‘새로운 산업구조를 떠받치는 ‘인재강화’를 개혁의 발판으로 삼도록 함
- 600조엔을 향한 ‘관민전략 프로젝트 10’은 새로운 유망성장시장 창출, 로컬 아베노믹스 심화, 국내소비 마인드 환기로 구성됨

○ ‘미래투자전략」-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개혁 -’가 2017년 6월 9일 각의 결정됨

- 소사이어티 5.0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의료·개호 및 자동주행의 ‘전략분야’와 이노베이션 성과를 실증하는 규제인 ‘샌드박스’ 등 ‘병렬과제’로 대응하는 투 트랙 접근 방법으로 선구적 대응을 함
- 소사이어티 5.0을 향한 전략분야는 건강수명 증진, 이동혁명 실현, 서플라이 체인의 차세대화, 개척한 인프라 및 마을만들기, FinTech로 구성
- 병렬과제는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철저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제도 정비, 교육·인재 강화, 이노베이션·벤처를 창출하는 선순환 시스템으로 구성

○ ‘미래투자전략 2018」- 「Society 5.0」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의 변혁 -’이 2018년 6월 15일 각의결정됨

- 기본적 개념은 디지털 신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와 일본의 위치를

35) 일본재흥전략 및 미래투자전략에 대한 내용은 총리관저 홈페이지에서 인출.(2019.2.4.)
(www.kantei.go.jp/jp/headline/seicho_senryaku2013_old.html)

- 연간 10만 명을 초과하는 개호 관련 이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호체제 정비와 개호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 개호와 일의 양립을 통해 개호를 하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른바 '개호 이직 제도'의 실현을 목표로 함
- 또한 고령자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취업 기회의 확보를 도모하고, 장애인, 난치병 환자, 암 환자 등이 각각의 희망과 능력, 장애 및 질병의 특성 등에 따라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함
- 2017년에는 개호 체제의 정비뿐만 아니라 개호 직원 등의 처우에 대해서도, 경험 등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는 구조를 만들어 매월 평균 1만 엔 상당의 개선을 도모
- 또한 이러한 시책에 따른 지방 부담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방 재정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일억플랜에 따라 '명목 GDP600 조엔'을 위한 경제 정책의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그 성장의 결실을 활용하여 '희망 출산율 1.8'과 '개호 이직 제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이 더욱 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면서 모두가 보람을 가지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 목표임

□ 일억플랜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최대 난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과 청년층 등의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의 선택을 확산시키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의 실현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함

○ 또한, 일과 육아·개호 등의 가정생활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의 개선하고, 생애 현역 사회 실현을 위한 고령자의 취업 촉진을 명시함

- 이러한 대응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도 이바지하며, 일억플랜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꿰뚫는 횡단적 과제라고 명시하고 있음

○ 2016 년 9 월에 설치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입장·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논의함

- 동일 노동-동일 임금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 임금 인상과 노동 생산성의 향상
-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 등 장시간 노동의 시정
- 고용 흡수력이 높은 산업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인재 육성, 격차를 고정화시키는 교육 문제의 해결
- 재택근무, 부업·겸업 등 유연한 근무 형태
- 일하는 방식에 중립적인 사회보장 제도·세제 등 여성·청년층이 활약하기 쉬운 환경 정비
- 고령자의 취업 촉진
- 질병의 치료, 그리고 육아·개호와 일의 양립
- 외국 인재의 수용 문제

□ 이 시기의 경제정책 및 대책 등

○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2013년 1월 11일)

- 대담한 경제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의 '세 개의 화살'을 지금까지의 차원과 다르게 일체적이고 강력하게 시행하여 '경제재생', '복구', '위기관리'를 실현하는 정책 패키지 "제1탄"
- 장기화되고 있는 엔고·디플레이션, 고용 및 소득 감소, 세대간 격차 등의 확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만, 위축되고 있는 경제를 부흥시키고 지속적인 이노베이션과 신사업이 생겨나 고용과 소득이 확대되는 강한 경제로 전환하는 대책임
- 경기 하강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정책금융, 세제 등도 동원하여 일본경제재생본부 및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사령탑으로 하여 각 부처의 벽을 넘어 스피디하게 정책을 시행해 나감

○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2013년 12월 5일)

- 본 대책은 2013년 10월 1일에 결정된 '경제정책 패키지'의 일부
- '경제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1조엔 규모의 세제 조치 등을 담아 5조엔 규모의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재생을 도모함
- 지방의 선순환 확대를 위한 긴급경제대책(2014년 12월 27일)
 - 아베내각은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 온 결과 어느 정도 경기의 선순환이 보임
 - 그러나 최근 개인소비 등이 악화되고 또한 인구감소·고령화 및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 중장기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지방에서는 경제의 선순환 실현이 늦어지는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지방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일억총활약사회 실현'을 발표(2015년 9월)
 - 제2기의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1기 아베노믹스의 경제정책에 더하여 저출산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이 추가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미래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2016년 8월 2일)
 - 고용·소득환경도 크게 개선되는 등, 명확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50%의 효과만이 보이고 있음
 -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탈출속도를 최대한으로 하여 성장궤도에 올라서는 것이 중요
- '일본재흥전략' - JAPAN is BACK -(2013년 6월 14일)
 - 성장을 위한 대응으로써 '일본산업재흥플랜', '전략시장창조플랜', '국제전개전략'의 3개 실행 전략을 내세움
-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 - 미래에 대한 도전 -(2014년 6월 24일)
 - 일본의 경제력 회복, 여성인력 활용 및 일하는 방식 개혁, 새로운 성장엔진과 지역을 지탱하는 산업 육성, 지역활성화와 중견·중소기업 등 혁신

- 2013년 전략의 3개 실행 전략이 포함됨
-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 - 미래 투자·생산성 혁명 -(2015년 6월 30일)
 - 미래투자에 의한 생산성혁명으로서 기업의 매출 증대 노력, 신시대에 대한 도전, 개인의 잠재력 향상을 도모
 -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으로서 중견·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노력 강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농림수산업 및 의료·개호, 관광산업을 기간산업화하고, 지자체의 민간과의 협력 강화가 강조됨
-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6 -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해 -(2016년 6월 2일)
 - 600조엔을 향한 '관민전략 프로젝트 10'으로써 새로운 유망성장시장 창출, 로컬 아베노믹스 심화, 국내소비 마인드 환기로 구성
- '「미래투자전략 2017」 -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개혁 -(2017년 6월 9일)
 - 전년도의 일본재흥전략에서 미래투자전략으로 전환됨
 - 소사이어티 5.0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건강수명 증진, 이동혁명 실현, 서플라이 체인의 차세대화, 개척한 인프라 및 마을만들기, FinTech의 '전략분야'
 -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철저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제도 정비, 교육·인재 강화, 이노베이션·벤처를 창출하는 선순환 시스템의 '병렬과제'로 대응
- '「미래투자전략 2018」 - 「Society 5.0」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의 변혁 -(2018년 6월 15일)
 -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데이터와 인재 경쟁전 및 데이터 패권주의로 대표되는 세계 정세에 일본이 어떤 강점으로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
 -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인 'Society 5.0'을 실현하고,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대폭 상향하여 국민소득, 생활의 질, 국제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킴

제3절 고용정책³⁶⁾

1. 1990년대 초중반(버블경제 붕괴기, 1991년경~1997년경)

□ 주식·토지 등 자산 시장에 있어서 버블붕괴국면이 되어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도 1992년 가을까지 유효구인배율은 1을 넘는 수준이었음

○ 이 시기의 유효구인배율은 감소 추세에 있었고, 노동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향이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책 방향성으로서 머지않아 닥칠 본격적인 노동공급제약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함

- 구체적으로는 노동 비용 억제 및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동력 확보 대책, 고령화 대응, 젊은이들의 이직과 전직 증가에 대한 대응 등이 추진됨

○ 그 후 경기가 정체기에 진입하여 경기가 최저에 이르렀던 1995년에는 완전 실업률이 처음으로 3% 정도가 되어, 그 후에도 증가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1991년에 버블시기의 최고치였던 1.4배가 된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93년부터 1997년 간 0.6~0.7배 수준으로 떨어짐

- 이와 같이 버블 붕괴기는 급격하게 고용정세가 악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산업별 취업자는 1993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경향이 현저했고, 제 2차 산업 전체로도 감소함

-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는 일관되게 증가하였는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산업에서 취업자를 흡수하는 구조가 됨

□ 이 시기의 정책대응은 운송·정보통신기술 진보 및 글로벌 경제화 진전에 따른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등 기업의 국제화와 노동자에 필요한 기능·기술의 변화, 고령

화에 따른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 서비스 등의 실버 서비스가 증가되는 것,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동공급의 증가가 둔화되는 것 등을 기본인식으로 함

○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시되는 방향성으로서 '고용 창출과 실업 없는 노동 이동의 실현',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가능성을 추구하는 환경 정비' 등을 들 수 있음

- 구체적인 정책상의 대응으로서 전자는 창업희망자 및 신설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신규사업개발 등에 따른 고용창출 지원 등이고, 후자는 노동자 개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이 있음

□ 이 시기의 고용정책

○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지원

- 중소기업 노동력 확보법 제정(1992년)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등에 의한 인재확보 지원

○ 노동비용 억제 및 효율화 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단축(종합적인 경제정책, 긴급경제정책: 1993년)

○ 중고령 사무직 고용 안정(종합적인 경제대책: 1993년)

- 사무직 직무분석과 교육훈련방법 개발, 커리어 카운슬러 등의 시범사업 추진

○ 국제화 진전에 따른 경제변동 대응 확대, 노동 조건 향상

- 특정 불황업종 관련 노동자 고용 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1995년)

- 불황업종대책 대상에 국제화 진전 등에 따른 경제변동 영향 등을 받는 업종에도 확대

○ 노동자가 원활하게 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확충

- 고령자 등 고용안정법 개정(1994년)

- 60세 정년제의 의무화, 고령자와 관련된 노동자파견사업 특례 도입(대상사업은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 항만운송사무, 건설사무, 경비사무, 제조업무

36) 본 절에서 90년대~2000년대 중반까지는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5),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17)를 참조하였음.

이외)

- 고용보험법 개정(1994년), 고령자 고용지속급여, 육아휴직급여 창설 등
- 육아휴직법 개정(1995년), 개호휴직제도 창설

○ 고부가가치 분야, 신 분야 창조를 담당할 인재 육성(급격한 엔고·경제대책, 경제대책: 1995년)

- 사업주의 훈련 수요에 맞춘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의 설정, 사업주 단체에 의한 훈련 실시 지원

○ 취업 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 노동자파견법 개정(1996년), 규제완화검토위원회 등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파견노동 대상업무 확대(적용대상사무를 11업무에서 26업무로 확대) 및 파견 노동자의 취업조건 등의 확보·정비 등

□ 고용대책기본계획

○ 제8차 고용대책기본계획(1995년)

- 경제사회 변혁기의 비용 안정 확보, 가능성을 주체적으로 추구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2. 1990년대 말(1997년경~2000년경)

□ 1997년은 중반부터 경기 감속 경향 속에서 주식이 하락하고, 이와 함께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등, 이전까지의 경기회복 움직임에서 180도 반전하여 혹독한 경제 정세로 변함

○ 이러한 와중에 기업의 도산건수 및 부채 총액도 전년까지와 비요할 때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 3.4%였던 완전 실업률이 1998년에는 4%로 증가하였고, 그 후 1999년에는 4.7%, 2001년은 5%, 2002년에는 과거 최대치인 5.4%까지 치솟음

□ 2002년 초반부터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 2003년 이후에는

완전 실업률이 감소 경향으로 접어들었고, 2004년에는 4년 만에 4%대(4.7%)로 감소함

○ 완전실업자 수도 1995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1997년 까지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발생 이후의 1999, 2000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약 300만 명, 2002년에는 약 350만 명이었음

-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이유로서는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제2차 산업의 취업자 감소가 제3차 산업의 증가보다 적었던 것을 꼽을 수 있음

□ 고용정세가 매우 악화된 이 시기에는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도 더욱 확대됨

○ 또한, 어려운 경제 정세 및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반영한 장기지속고용 변화, 글로벌 경쟁의 심화 및 경기 변동 진폭의 확대·장기화는 동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감소시킴

- 종래의 노동투입량 조정을 중심으로 한 고용 조정에 더하여 총 인건비를 조정하는 임금 조정이 주축이 되어, 보다 탄력적으로 고용조정이 가능하도록 고용 시스템 변화가 예상되었음

○ 이러한 구조변화예상을 반영하여, 정책의 방향성으로는 종래의 '고용 안정', '실업 없는 고용이동' 중심에서 '고용창출', 원활한 노동이동', '기업을 통한 지원에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전환이 이루어짐

- 구체적으로 버블경제 붕괴기(제8차 고용대책기본계획)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고용 창출·안정', '개개인의 취업능력(employability) 향상과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 추진' 등이 있음

- 나아가 개인의 개성·능력과 경제 활력이 양립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의 필요성, 또한 이러한 일하는 방식이 필요할 때마다 선택 가능하게 준비되어 누구라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시장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됨

□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적절한 경제운영에 의한 경제성장과 이러한 배경에서 신규사업전개 등에 의한 고용창출 지원', '성장분야에 있어서 고용창출을 위한 환경정비 및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에 임시 고용·취업기회 창출', '관민이 일체가 되어 노동력 수급조정 기능을 강화함

○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정보제공기능을 강화', '카운셀링·직장체험기회 확대 등 노동력 수급조정 기능 강화', '학교교육을 포함한 청년 고용대책', '직업능력 상담·평가기능 보완'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됨

□ 이 시기의 고용대책

○ 창업, 신규사업전개 등에 의한 신규고용창출 지원

- 벤처 기업 등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지원(1998년, 종합경제대책)
- 총량으로서의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신규고용창출 대책, 신분야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신규성장 15분야(의료·복지, 정보통신, 환경, 주택 등)의 원활한 노동 이동을 위한 지원 실시(1998년, 긴급경제대책)
- 신규창업 벤처 기업 소개 강화, 신규·성장분야에서의 비자발적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지원, 긴급고용창출 특별기금 활용 등(1999년, 긴급고용대책)
- 지역 특성을 살린 성장분야 및 지역 산업 등 선도적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에 의한 고용창출 및 안정(중소기업 고용창출 특별 장려금, 1999년, 경제신생대책)
- 중소기업 창업지원(인재개발, 인사관리, 직업능력개발 등)에 의한 고용기회의 창출, 중소기업의 기반강화에 의한 고용기회 확대 및 안정, '신규·성장분야 인재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인재확보, 원활한 노동이동 촉진,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2000년, 미스매칭 해소를 중점으로 하는 긴급고용대책)

○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의한 임시 고용, 취업기회 창출

- 지방정부에 의한 임시·긴급 고용취업기회 확보, NPO 활용 등(긴급지역고

용특별교부금, 1999년, 긴급고용대책)

○ 노동자 개인의 취업능력개발 지원, 취업지속지원

- 고용보험법 개정(1998년), 교육훈련급여제도, 개호휴직급여 창설

○ 조기 재취업 촉진, 다양한 일하는 방식 대응, 고용보험급여 중점화

- 고용보험법 개정(2000년), 도산·해고 등에 의한 중고령 실업자 등에 대한 급여 중점화 등

○ 관민이 일체가 되어 노동력 수급조정 기능강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 등

- 경제단체와 연계한 구인정보의 네트워크화, 공공직업안정소의 구직자 자기 검색단말기 도입(1998년, 긴급경제대책)
- 직업안정법 개정(1999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취업업무를 네거티브 리스트화(건설·항만운송업무는 적용제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수료제도 개선(구직자로부터 수수료 징수는 1999년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됨)
- 노동자 파견법 개정(1999년), 적용대상업무의 네거티브 리스트화(항만운송 업무, 건설업무, 경비업무, 의료관련업무, 제조업무는 적용제외)

○ 고령자의 계속고용 확보, 정년 연장

- 고령자 등 고용안정법 개정(2000년), 65세까지 계속고용확보 노력 의무화 등 65세까지 고용 안정 확보

○ 구인연령제한 완화

- 구인연령완화에 대한 지도·계몽(2000년, 미스매칭 해소를 중점으로 하는 긴급고용대책)
- 대규모 리스트럭처링 영향을 받은 지역의 고용창출대책, 대규모 리스트럭처링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은 지역 또는 리스트럭처링 실시 기업의 하청 등의 지정사업소에서 실직한 노동자 고용을 지원(특정지역·하청기업 실업자 고용창출 장려금, 1999년 경제신생대책)

○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직장정착 추진, 일하려는 의욕이 불충분한 청년, 무직

자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시

-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에 대한 조기 재취업 지원, 능력개발지원사업 실시, 학생직업센터 등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적성 및 희망직업을 바탕으로 한 구인확보, 면접 연습, 민간직업훈련기관 등 훈련 무료 제공 등(1999년, 긴급고용대책)
- 취업하지 못한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및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채용 후 직업능력 개발 지원(2000년, 미스매치 해소를 중점으로 한 긴급고용대책)

□ 고용대책 기본계획 등

○ 제9차 고용대책 기본계획(1999년)

-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고용 창출·안정, 사람들의 의욕과 능력을 살리는 사회 실현

3. 2000년대(2000년경~2008년경)

□ 2001년까지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부실채권 처리가 가속화 되었으나 2002년 초반까지는 경기가 계속 후퇴하였음

○ 그 후 경기는 회복국면이라고 할 수 없으나 2003년 이후는 해외경제 회복에 따라 경기가 회복기조에 들어섰음

-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정세도 2002년에 실업률(5.4%), 실업자수(359만 명)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개선되어 갔으며, 2004년에는 실업률이 4%대(4.7%)로 감소하여, 특히 취업자 수는 1997년 이래 7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임
- 2001년 4월에 들어선 코이즈미 정권은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부실채권처리를 내세웠고, 채권처리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고용정세에 대한 대응도 추진됨

- 또한, 1997년 이후의 정책 방향성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었고, 업종에 따른 대책부터 개별 기업별 대책, 지역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거나 실업자의 속성에 맞게 다양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집약적인 것부터 개별 상황에 맞는 정책이 추진됨

- 또한, 장기에 걸쳐 경기가 위축된 상태에 있다는 점과 청년들의 취업의식 변화로 인하여 청년 실업률 수준이 높고, 소위 말하는 프리터 및 니트 등의 무직자가 증가하는 청년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정부 전체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됨

□ 이 시기의 고용정책

○ 창업, 신규사업 등에 의한 신규고용창출지원

- 고령자 창업과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지원(2001년, 종합고용대책)
- 지역의 서비스 분야 신설법인인 3인 이상 상시 고용한 경우의 지원(지역고용사업특별장려금, 2002년, 개혁가속프로그램)

○ 조기재취업 촉진, 다양한 일하는 방식 대응, 고용보험급여 중점화

- 고용보험법 개정(2003년): 기본수당과 재취직시 임금 역전 현상 해소, 통상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의 소정급여일수 일원화, 도산 등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자 등 재취직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년층의 소정급여일수 개선 등

○ 관민이 일체가 되어 노동력수급 조정기능 강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 등

- 관민이 연계하여 구인정보를 인터넷에 제공(2001년, 종합고용대책)
- 각종 고용 지원은 민간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한 고용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등 민간직업소개와의 연계에 따른 재취업 촉진 등(2001년, 종합고용대책)
- 민간의 취업지원회사를 활용하여 재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2001년, 종합고용대책)
- 직업안정법 등의 개정(2003년)
- 노동자 파견법의 개정(2003년)

- 카운슬링·직장체험 기회제공 강화 등 노동력 수급조정 기능 강화
 - 각 도도부현의 커리어 형성 지원 코너 및 헬로워크 등에 커리어 카운슬러를 배치(2001년, 종합고용대책)
 - 공공직업안정소에 전임의 조기재취업지원(취직지원 네비게이터)를 배치하여 개개인별 빈틈없는 취업지원 실시(2002년)
 - 고령자의 계속고용 확보, 정년 연장
 - 고령자 등 고용안정법 개정(2003년): 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과 연동한 정년 연령의 단계적 연장 등
 - 구인연령제한 완화
 - 개정 고용대책법에 의한 모집·채용의 연령제한 완화노력 의무화(2001년 10월 시행)
 - 업종별 대책에서 개별 기업별 상황에 따른 지원으로 전환
 - 고용정세에 따른 원활한 재취직 촉진 및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지원을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환(2001년, 개정 고용대책법, 개정고용보험법, 특정불황업종 고용안정법 폐지)
 - 지역의 자주성, 창의성을 살린 지역 사정에 맞는 지역고용개발 촉진
 - 지역고용개발촉진법 개정(2001년)
 - 부실채권처리 가속화
 -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직장 정착 추진, 일하는 의욕이 불충분한 청년, 실업자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시
- 고용대책 기본계획 등
- 고용정책연구회보고(2002년)
 -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정책 전개
 - 고용정책연구회보고(2005년)

- 인구감소하의 고용·노동정책 과제

4. 2000년대(2008년경~2012년경)

- 2008년 9월의 금융위기 이후의 고용대책 특징은 첫째, 19990년대 말부터 고용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유동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또 다시 고용조정지원금 등의 고용유지정책에 되돌아간 점, 둘째,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외의 자(일본적인 고용 범위 밖의 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인재육성지원사업·구직자지원제도에 따라 새롭게 보장되는 점임
- 이 시기의 고용정세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고용조정이 넓혀져 고용조정지원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금액이 급증함
- 정부도 상기 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함
 - 2008년 말에는 생산량감소 요건을 전년 동기비 10% 감소에서 직전 3개월비 5% 감소로 완화함
 - 2009년에는 1년의 지급한도일수를 철폐하고 민주당 정권하에서도 계속적인 완화가 이루어짐³⁷⁾
 - 이후 2011년의 '엔고의 종합대응책'에 이르기까지 수급요건의 완화, 수급 대상자의 단기노동자, 단기간 노동자 확대 등이 이루어짐
 - 민주당 정권의 주요 정책이었던 사업분류에서 잡카드 제도 및 미지불임금의 대불제도 등이 철폐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조정지원금은 유지됨
- 2008년에 일어난 '파견계약해지'는 사원 기숙사 등에서 퇴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직과 동시에 주거도 상실하여 생활의 기반이 사라지는 이들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됨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경제위기대책'에서는 '긴급인재

37) 민주당 정권에서는 경제재정자문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 하토야마, 칸 내각은 국가전략실, 노다 내각에서는 국가전략회의에서 경제운영 기본방침이 심의됨.

육성지원사업(기금훈련 등) 등 첫 번째 세이프티 넷으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신규졸업자, 비정규직, 급여기한을 넘긴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지원(두 번째 세이프티 넷)이 이루어져 마지막 세이프티 넷(생활 보호) 이전에 직업훈련 등을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을 목표로 함

- 긴급인재 육성지원사업은 2011년 10월부터 영구적 조치로 구직자 지원제도로 시행됨

□ 2006년 9월부터 '인구감소 하의 고용대책 검토'에 대해서 노동정책심의회 고용대책기본문제 부회에서 심의가 시작되어 동년 12월 고용대책기본계획이 종료됨

○ 이를 대신하여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매년도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고용정책의 실시에 관한 방침'(지방방침)을 책정하고,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생노동대신에 매년도 '고용정책 실시에 관한 지침'(전국지침)을 책정함

- 도도부현과 중앙 정부와의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방과 일체가 되어 고용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먼저 지방의 방침을 책정하도록 함
- 이것은 고용대책법이 아닌 고용대책법 시행규칙 13조에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시행규칙 제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생노동대신은 고용대책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언급하는 사항을 강구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공표하도록 함

- 이와 함께 기본방침의 근거가 되는 법 제4조에 언급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수정하여,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자의 취업촉진 및 지역고용대책을 추가함

□ 이러한 배경에서 2008년 2월에 '고용정책기본방침'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인구감소의 도래, 글로벌화 및 기술혁명 등이 가져오는 변화를 이겨내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의 '고용·생활 안정' 확보를 목표로 함

○ (안정성 확보) 노동자 생활 안정 및 기술축적 등의 관점으로부터 고용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동자가 스스로 직업적 커리어를 개발 및 향상시키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등의 직업 커리어 형성 지원 및 외부노동시장 정비 등을 행하여 직업적 커리어 발전과 안정을 확보함

○ (다양성 존중) 성별, 연령,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생애에 걸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인생의 각 단계에 있어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는 구체적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별, 연령, 장애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의욕과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전원참가형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함

○ (공정성 확보) 일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된 상황에서 일하는 방식에 중립적인 제도 하에 활기찬 경제사회에 알맞은 공정한 일하는 방식이 확보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단시간 정사원 제도, 텔레워크, 남성의 육아 참가 지원·촉진, 파트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와의 차별 없는 대우, 유기계약 노동자 처우의 개선, 노동 계약법의 충분한 홍보, 개별 노동관계 분쟁의 자주적 해결 촉진 등이 언급됨

□ 청년고용정책

○ (청년자립학교사업)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합숙형태로 집단생활을 하며 3개월 정도 생활훈련·노동체험을 통하여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능력을 습득하고, 근로관 양성을 도모하며, 일하는 의욕을 고취시킴
- 실시주체는 민간사업자·NPO 등이며 숙식에 대한 비용은 개인부담, 운영비는 대상자수에 따라 국가에서 보조함

- 2007년에는 지자체의 협력을 얻으며 전국 30개소에서 실시되어 수료자수가 2005~2007년 1,368명, 졸업후 6개월 경과 후 취업률 59.7%였으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후 '사업분류'로 2009년도에 폐지됨

○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영국의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인 코넥션즈(Connexions)에서 참고한 사업으로 니트 등의 청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시정촌)이 주체가 되어 지역 전문기관(복지, 의료 등)이 연계하여 2006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됨

- 2011년에는 전국 120개소가 설치되어 국가의 사업위탁을 받으며 청년들이 놓인 상황에 맞춰 전문적인 상담 및 직업의식계발 프로그램 실시,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각 전문기관(복지, 의료 등)으로 이끌어감

□ 고령자고용대책

- 2012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이 개정
 - 2013년부터 후생연금 보수 비례부분의 단계적 인상을 시작으로 연금의 제도개정이 고령자 고용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 2012년 개정에서는 2004년 개정에서 만들어진 노사협정에 의한 고용계속 대상자의 평가가 폐지되어 연령에 상관없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예외 없이 의무화됨

□ 이 시기의 고용정책

- 청년자립학교사업(2005년),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2006년)
- '고용정책의 실시에 관한 방침'(지방방침)(2006년 12월)
- '고용정책의 실시에 관한 방침'(전국방침)
- 긴급인재 육성지원사업(기금훈련등, 2009년 4월)
-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2012년)
 - 고령자계속고용 의무화(65세 상한)

□ 고용정책기본방침 등

- 고용정책기본방침(2008년)
 - 안정성 확보, 다양성 존중, 공정성 확보가 기본적 구상임

5. 2010년대(2012년경~현재)

□ 2012년의 경기가 약간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연말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며,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사회보장 안정을 위한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예정된 상태에서 경기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2014년 이례적으로 노사에 임금인상을 요청함

- 2012년 이후, 완전 실업률의 감소 등 고용정세는 개선됨을 넘어 일손부족기조가 되어, 고용대책으로서는 여성, 청년의 취업촉진 등의 전원참가형(全員参加型) 사회를 지향
 - 또한,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쇠퇴부문에서 성장부문으로의 인재이동이 촉진되는 상황에서 고용정책은 '과도한 「고용유지형」에서 실업 없는 「노동이동추진형」으로' 전환이 이루어짐

□ 2012년 11월에는 '고용정책기본방침'이 개정됨

- 이번의 고용정책기본방침에는 경제활동인구감소, 일손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실업 없는 노동이동을 위한 일체적 지원' 등 외부노동시장의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노동시장의 과제와 방향성으로는 '기업과 노동자를 연결하는 「외부노동시장」과, 기업 내에서 노동자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내부노동시장」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완적으로 기능하며 기업의 노동수요를 만족시키는 인재를 배치하고 있는' 것임
 - 기업 내부의 인재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것과 안정적인 고용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앞으로 중요시해야 할 것임
 - 산업구조조정 및 경영노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막대한 외부적 쇼크의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공적지원은 인적자본의 분산 방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내부노동시장의 장점을 명기함
- 고용정책의 기본개념은 '외부노동시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촉진, 적

절한 능력평가제도 정비에 따른 능력의 가시화와, 민간 인재 비즈니스, 지자체, 공공직업안정소 등의 연계에 의한 미스매치 기능을 최대화하는 「노동시장 인프라」정비를 도모함'과 외부노동시장을 활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환경정비를 지적함

- 2014년의 고용보험법 개정에서는 2009년 개정에서 마련된 특정이유이직자의 급여일수 확충조치와 개별연장급여(재취업이 곤란한 경우에 연령 및 지역을 고려하여 60일 연장), 상용취업지원수당의 지급대상자 추가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됨
- 2016년 개정에서는 2015년 12월 고용보험부회에서 '현재의 고용정세가 차근차근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보면, 실업 등의 급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4년 말 적립금 잔고는 6조 2,586억엔이므로, 만일 기본 고용보험료율을 12/1000으로 하고, 내년도부터 탄력조항을 발동하여 8/1000으로 인하한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하면 평균적인 고용정세를 전제로 하여 지속적인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될 것으로 보임'이라는 결과를 도출함
 - 2016년 4월부터 법정보험료율은 1.4%에서 1.2%로 인하되었으나, 탄력조항 발동에 의하여 0.8%까지 인하됨

□ 청년고용대책(일본재흥전략 및 개정에 공표)

- 청년고용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년의 고용·육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추진'으로 '취업준비 단계부터 구직활동단계, 취업후 커리어형성에 이르기까지의 청년고용대책이 사회전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구인조건 및 청년의 채용·정착 상황 등의 정보를 적절히 공표함
 - '청년응원 기업선언'사업 강화를 도모하고, 우량 중소기업의 정보를 공표하고 채용을 지원함
 - 기업에 의한 고용관리개선 노력 촉진
 - 청년을 1회성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기업 등에 대한 대응책 강화
 - 청년 헬로워크, 지역 청년서포트 스테이션 등의 프리터·니트의 취업지원을

보완하고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게 지원

- 직업교육·직업훈련기회 보완 등에 따른 커리어 향상 촉진
- 청소년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안 마련(근로청소년 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 2015년 3월)
 - (청소년고용정보제공) 과거 3년간의 이직자수 및 평균근속연수, 남녀별 채용수, 육아휴직, 유급휴가, 소정의 노동시간 실적 등의 항목을 사업주가 선택하여 정보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함
 - 니트 대책으로 상담기회 제공,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지역 청년서포트 스테이션)의 정비 등이 규정됨
- 2015년 6월의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 - 미래에 대한 투자·생산성 혁명'의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발표된 '미래를 지탱하는 인재력 강화(고용·교육정책) 패키지'(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에 근거하여 '기업의 인재육성 등의 대처에 대한 정보제공 촉진' 및 '직업의식·실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개혁' 등 추진

□ 고령자고용대책

- 이전까지는 65세 이상이 되어 취업하게 되면 고용보험의 일반피보험자가 아닌 고령계속피보험자로 되어 실업을 한 경우에는 기본수당이 아닌 일시금인 고령구직자급여금이 지급되었으나, 65세까지 계속 고용이 의무화되면서 제도설계의 변경이 요구됨
 - 2015년 재흥전략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고용이 한층 더 촉진되도록 기업의 인센티브 및 고용보험의 적용에 필요한 검토를 추진'하도록 했고, 일역총활약국민회의에서 '고령자가 안심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업, NPO 등 창업을 지원하며, 고용보험의 적용연령의 변경을 검토함
 - 2015년 당시 64세 이상의 고령자는 고용보험료가 면제되었는데, 2016년의 개정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새로 고용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대상

으로 하고 64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면제조치를 2020년 4월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함

□ 이 시기의 고용정책

○ 고용보험법 개정(2014년)

- 개별연장급여 및 상용취업지원수당의 지급대상자 추가 연장(2016년 말)
- 재취업수당 인상(기본수당일액에 지급잔여일수의 40%를 곱한 값이 상한으로, 이직시임금과 재취업임금과의 차액의 6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고용보험법 개정(2016)

- 법정보험료를 인하 및 탄력조항발동으로 추가 인하(1.4%→1.2%→0.8%)
- 지급잔여일수가 1/3 이상일 경우는 급여율이 50%에서 60%로, 2/3 이상일 경우는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 청소년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안 마련(근로청소년 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 2015년 3월)

□ 고용정책기본방침 등

○ 고용정책기본방침 개정(2012년 11월)

○ 「일본재흥전략」(2013년 6월)

○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 - 미래의 도전 -(2014년 6월)

○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 - 미래에 대한 투자·생산성 혁명 -(2015년 6월)

제4절 복지정책

1. 사회보장제도의 개요³⁸⁾

□ 90년대부터의 복지정책은 '1.57' 쇼크로 시작되는 저출산과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고령화로 인하여 이데 대한 사회보장 개혁이 시작되었음

□ 사회보장 구조개혁

○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핵가족화의 진행, 경제기조의 변화, 재정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성숙한 사회·경제에 알맞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사회보장 구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 경제와 조화를 도모하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수료에 적절히 대응
-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재택 서비스를 중시하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구축
- 공사의 적절한 역할배분을 명확히 하며,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에 의하여 민간 활력의 도입 촉진

□ 복지 3플랜 책정 및 추진

○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 증대 및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복지 각 분야의 연계를 도모하고, 제도의 종합적인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골드플랜, 엔젤플랜, 장애인 플랜의 복지 3플랜을 책정하여, 서비스 기반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등 보건·의료·복지정책을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추진함

38) 中央法規(2017) 「社会保障入門2017」을 정리 및 보완함

□ 개호보험제도 창설

- 개호문제는 국민의 노후 생활의 최대 불안요인이지만, 앞으로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개호기간의 장기화 및 핵가족화의 진전, 개호하는 이들의 고령화 등에 따라 가족 개호 기능 감소 등이 큰 문제가 됨
 - 그래서 2000년에 노인보건과 노인복지로 나뉘어 있던 개호에 관한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 관계를 명확하게 사회보험방식으로 사회전체에서 개호를 지탱하는 개호보험제도를 창설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의료·복지에 걸친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개호보험제도의 창설은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분리하고, 의료는 치료라는 목적에 알맞은 제도로서 의료제공체제를 포함한 종합적 및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을 실시하는 전제로 만든 것으로 사회보장구조개혁의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 개호보험제도는 2005년 6월에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창설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2011년 6월에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정기 순회·상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및 복합형 서비스 등을 창설한 '개호 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수립
 - 이후, 2014년 6월에 재택의료·개로연계 추진 등의 지역지원사업의 보완과 함께 예방급여(방문개호·외래개호)를 지역지원사업으로 이행하고, 다양성을 도모한 '지역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법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어 더욱 양질의 개호 서비스 확보를 위한 제도로 변화됨

□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 수립

- 국민전체보험을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이 2006년 6월에 공포되었음.

- 그리고 노인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의하여 법률명을 '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의료비 적정화 계획제도의 도입 및 특정 검진·보건지도 실시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함
-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가 수립되었을 당시, 고령자 의료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기에 여러 논의를 거쳐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의 보고서에서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는 창설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현재 충분히 정책되어 있다'고 평가함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사회보장제도개혁 프로그램법)에서는 '의료에 관한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고령자 의료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을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변경 검토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이 규정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함

□ 자민당·공민당 연립정권이었던 2008년에 설치된 '사회보험 국민회의' 및 2009년의 '안심사회 실현회의'에서 자녀·육아지원, 의료·개호 등의 서비스 개혁, 연금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여 민주당 정권 하의 사회보장·세금 일체개혁이 추진됨

□ 2011년 6월에 정부·여당 사회보장개혁 검토본부는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을 정리한 '사회보장·세금 일체개혁안'이 2012년 1월에 발표된 이후, 2월 17일에 '사회보장·세금 일체개혁 대강'이 각의 결정되었고, 3월 30일에 대강에서 정한 사회보장개혁의 각 항목의 스케줄 등이 제시됨

○ 2012년의 통상 국회에서는 대강에서 정한 사회보장개혁의 실현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고, 특히 자녀·육아지원 관련과 연금관련 법안은 세제개혁 관련법안과 함께 중의원·참의원의 양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 가결·성립됨

○ 또한, 중위원에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였고,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이 의원 입법에서 제출되어 관련법안과 함께 통과됨

-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은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를 설치하는 것 등에 따른 개혁을 종합적 및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정함

○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총 20회 개최 후 2013년 8월 6일에 보고서가 정리됨

-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사회보장제도개혁 프로그램법)이 통과됨
- 이러한 배경에서 2014년 통상국회에서는 의료법·개호보험법 등의 개정법안, 난치병·소아만성 특정질병대책 법안,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등의 개정 법안, 고용보험법의 개정법안이 가결됨
- 2015년 통상국회에서는 의료보험제도 개혁법안이 가결됨

2. 저출산 대책³⁹⁾

□ 일본이 저출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0년 '1.57 쇼크' 이후부터이고, 이 '1.57 쇼크'는 1.58이었던 1966년의 합계출산율보다 작아지게 된 충격이며⁴⁰⁾,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1994년 12월 앞으로 10년 간의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정책을 정한 '앞으로의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하여'가 책정됨⁴¹⁾

○ 엔젤플랜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의 양적확충과 영유아(0~2세) 보육, 연장보육 등의 다양한 보육의 확충, 지역 육아지원센터 정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사업'이 책정되어, 1999년을 목표로 정비

39)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일반적으로 '소자화 대책(少子化対策)'이라고 하는데, 본 장에서는 법령 등의 제도를 언급할 때는 일본에서 쓰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内閣府 (2018)을 참조하였음. 그리고 일본 저출산 대책의 흐름에 대한 그림을 부록에 수록하였음.

40) 합계출산율이 1.58이었던 1966년은 6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백말 떠었는데, 이때에 낳은 딸은 성격이 사납고 남편을 빨리 죽게 한다는 미신이 유행하여 사람들이 출산을 억제시킨 결과 1.58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1989년은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57이 되었고

41) 별칭으로 엔젤플랜이라고도 함.

가 추진됨

□ 1999년 12월 '소자화대책추진기본방침'(소자화대책추진관계 각료회의결정)과 이 방침에 기초한 중점정책의 구체적 시행계획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소자화대책의 구체적 실시계획에 대하여'가 책정됨⁴²⁾

○ 신 엔젤플랜은 이전 엔젤플랜과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5년 동안의 계획임

- 최종연도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 항목에는 지금까지의 보육관계만이 아닌 고용, 모자보건, 상담, 교육 등의 사업도 폭 넓게 포함됨

□ 가정 및 지역의 육아 능력 감소에 대응하여 차세대를 담당할 아이들을 육성하는 가정을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관점에서 2003년 7월 지자체 및 기업에게 앞으로의 10년 동안 집중적 및 계획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책정됨

○ 이것은 지자체 및 사업주가 차세대 육성 지원을 위하여 각각 행동계획을 책정하여 실시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률은 2014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한이 10년 더 연장됨

□ 2003년 7월 의원입법이 이루어져 소자화사회에서 강구되어야 할 기본원리를 명확히 하고, 소자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이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됨

○ 이 법에 근거하여 내각부에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하고 전 각료로 구성된 소자화사회대책회의가 설치됨

- 또한, 이 법은 소자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지침으로서의 대강 책정을 정부에 의무화하였음

42) 별칭으로 신 엔젤플랜이라고도 함.

- 2004년 6월,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소자화사회대책대강'(이하, 대강이라 함)이 소자화사회대책회의를 거쳐 각의 결정됨
- 이 대강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긴급 과제로 하여, 소자화의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서 안심과 기쁨을 가지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을 기본적 이념으로 하고, '3개 시점', '4개의 중점과제', '28개의 구체적 행동'을 제시하였음
- 2004년 12월, 대강에 포함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자화사회대책대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계획에 대하여(자녀·육아플랜)'를 소자화사회대책회의에서 결정함
- 자녀·육아플랜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기업과 함께 계획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항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강구하는 구체적 정책내용과 목표를 제시함
- 2005년은 1899년 인구동태통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출생수가 사망수를 밑돌았고, 출생아수는 106만 명, 합계출산율은 1.26으로 모두 사상 최저를 기록함
- 저출산의 속도가 그동안의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확충, 강화,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소자화사회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소자화대책에 대하여'를 책정함
- '새로운 소자화대책에 대하여'에서는 '가족의 날'·'가족 주간' 제정 등에 따른 가족·지역의 인연 복원 및 사회전체의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추진함
 - 또한, 부모의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관점에

- 서 아이의 성장에 따른 육아지원 수요가 변화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임신·출산에서부터 고교·대학교에 이르는 육아지원책을 발표
- '일본 장래인구추계(2006년 12월 추계)'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고 추계된 것과 사회보장심의회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논의 정리를 바탕으로 2007년 12월 소자화사회대책회의에서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이하, 중점전략)을 발표함
- 중점전략에서는 취업과 출산·양육의 양자택일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라이프밸런스)의 실현'이 필요
 - 또한, 사회적 기반이 되는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 구축'('부모의 취업과 자녀 육아 양립'과 '가정에서의 육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은 2007년 12월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라이프밸런스) 현장' 및 '일과 생활의 조화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이 노사정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일과 생활의 조화추진관민회의에서 결정됨
 - 또한, 중점전략을 바탕으로 2008년 2월에 정부는 희망하는 모든 이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사회전체가 대처하기 위하여 보육소 등의 대기아동해소 등의 보육정책을 양적·질적으로 보완 및 강화하고 추진하기 위한 '신 대기아동제료작전'이 발표됨
- '새로운 소자화사회대책 대강안의 작성방식에 대하여'(2008년 12월, 소자화사회대책회의결정)가 결정된 후, 2009년 1월 내각부에는 '제로부터 생각하는 소자화대책 프로젝트 팀'을 발족하여 소자화대책 담당대신 주관으로 총 10회의 회의 및 지방에서의 간담회, 대학생과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6월

에 제언(‘모두의 소자화대책’)을 발표함

- 그 후 2009년 10월에 발족한 내각부의 소자화대책 담당 정부 3역(대신, 부대신, 대신정무관)으로 구성된 ‘자녀·육아 비전(가칭) 검토 워킹팀’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전문가, 사업자, 육아 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의견청취 및 국민의 의견모집 등이 이루어져, 2010년 1월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대강을 각의 결정함
- 이 대강에는 자녀·육아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의 3가지 중요한 자세로서 ‘1. 생명과 육아 중시’, ‘어려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 ‘생활 유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로 하는 사회를 향한 정책 4기둥’, ‘12가지 주요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추진함

□ 2010년 1월 소자화사회대책대강(‘자녀·육아비전’)의 각의결정에 맞추어 소자화사회대책회의의 아래 ‘자녀·육아 신시스템 검토회의’가 발족하여 새로운 육아지원 제도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 2012년 3월에는 ‘자녀·육아 신시스템에 관한 기본제도’를 소자화사회대책회의에서 결정됨

-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장·세금 일체개혁 관련 법안으로 자녀·육아 지원법 등 3법안을 2012년 통상국회(180회 국회)에 제출함
- 사회보장·세제 일체개혁에서는 사회보장에 필요한 비용의 주된 재원이 되는 소비세(정부부문)를 종래의 고령자를 위한 3개 항목(기초연금, 노인의료, 개호)에서 소자화대책을 포함한 사회보장 4개 항목(연금, 의료, 개호, 소자화대책)으로 확대함
- 국회에서 수정을 거쳐 통과된 자녀·육아 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정부는 자녀·육아 지원 신제도의 시행을 위해 준비하여, 2014년에는 소비세 인상(5%→8%)의 재원을 활용하여 대기아동이 많은 시정촌 등에 ‘보육긴급확보사업’이 이루어짐

□ 도시부를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아동 해소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2013년~2017년말까지 약 40만 명분의 보육 정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기아동해소가속화플랜’을 새롭게 책정함

- 또한, 2015년부터 자녀·육아지원 신제도의 시행 전에 대기아동해소에 의 목적으로 대처하는 지자체를 지원함
 - 그 결과 대기아동해소를 위한 ‘긴급집중대응기간’이었던 2013년과 2014년에 약 22만 명분의 보육 공급의 확대를 달성함
- 앞으로 여성의 취업률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 보육 공급을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여 대기아동 해소하고자 함

□ 2013년 3월부터 내각부특명담당대신(소자화대책) 아래에 ‘소자화위기돌파 태스크포스’가 발족하여, 5월 28일에는 ‘「소자화위기돌파」를 위한 제언’이 발표됨

- 이 안을 바탕으로 6월에 소자화사회대책회의에서 ‘소자화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이하, 긴급대책)을 결정함
 - 긴급대책에는 지금까지 소자화대책에서 대응해온 ‘육아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혁’을 한층 강화하고, ‘결혼·임신·출산지원’을 새로운 대책의 축으로 삼고, 결혼·임신·출산·육아의 ‘끊임없는 지원’의 종합적 정책의 보완 및 강화를 목표로 함
- 또한, 긴급대책의 내용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 탈 디플레이션·경제재생 -’(2013년 6월 14일 각의결정) 및 ‘일본재흥전략 - JAPAN is BACK -’(2013년 6월 14일 각의결정)에 포함되어, 국가적으로 소자화대책에 대응하고자 함
- 그 이외에 긴급대책을 착실히 실시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내각부특명담당대신(소자화대책) 하에 ‘소자화위기돌파 태스크포스(제2기)’(이하, 태스크포스(제2기))가 발족됨

- 긴급대책 및 태스크포스(2기) 정책 추진 팀의 '소자화위기돌파를 위한 긴급제언'(2013년 11월)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의 끊임없는 지원의 중요성이 포함된 것, 그리고 전국 지사회의 강한 요구 등이 반영되어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2013년 12월 5일 각의결정)에서 '지역 소자화대책 강화'가 포함되어, 2013년 추경예산에 '지역소자화대책 강화교부금'이 창설됨(30.1억 엔)
- 태스크포스(제2기)가 2014년 5월에 발표한 제언의 주된 내용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4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선순환확대에-'(2014년 6월 24일 각의결정)에 포함되어 정부 전체의 방침이 됨
- 인구감소·소자고령화는 경제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2014년 1월 경제재정자문회의 하에 '선택하는 미래' 위원회가 설치되어, 인구, 경제, 지역사회의 과제에 일체적인 대처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져 5월 중간보고, 11월에 최종발표가 이루어짐
- 보육소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뒤에도 안전·안심되는 방과 후에 있을 곳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함
 - 이것은 소위 '초1의 벽'을 타파하기 위하여 아동이 방과후를 안전하고 안심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더불어 차세대를 담당할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아동이 방과 후에 다양한 체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방과 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이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2014년 7월에 '방과 후 아동 종합 플랜'을 책정함
 - 이 플랜은 2019년까지 방과 후 아동 클럽이 약 30만 명분을 새로 정비하

는 것과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 후 아동 클럽 및 방과 후 아동교실을 일체적 또는 연계 실시

- 그 중 일체형 방과 후 아동 클럽 및 방과 후 아동 교실은 1만개소 이상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구감소·초고령화라는 거대한 과제에 대해 1) '도쿄일극집중' 완화, 2)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 희망 실현, 3)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과제 해결이라는 3개 시점을 기본으로 하여 매력 넘치는 지방을 창생 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2014년 9월 3일 발족한 제2차 아베개조내각은 지방창생담당대신을 신설함과 동시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발족함
 - 또한, 11월에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이 통과되고, 12월 27일에는 일본의 인구·경제 중장기 전망을 제시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 비전'과, 앞으로 5년간의 목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구체적 정책을 정리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각의결정함
 - 이러한 배경에서 지자체는 지방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이 책정됨
 - 2017년 6월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7'의 각의 결정과 12월에 종합전략의 개정이 이루어짐

□ 새로운 소자화사회대책대강의 책정과 추진

- 새로운 '소자화사회대책대강'의 책정을 위하여 2014년 11월에 내각부특명담당대신(소자화대책) 아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소자화사회대책 책정을 위한 검토회'를 발족하여 검토를 추진함
 - 검토회는 2015년 3월에 제언을 정리하였고, 정부는 이 제언을 반영하여 소자화사회대책회의를 거쳐 3월 20일에 새로운 '소자화사회대책대강'을 각의결정함

- 새로운 소자화사회대책대강은 이전의 소자화대책의 틀을 넘어 새로운 결혼 지원이 추가되어, 육아지원책을 한층 더 보완하고, 젊은세대의 결혼·출산 희망을 실현하고, 다둥이 세대에 대한 배려, 남녀의 일하는 방식 개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응 강화의 5개 중점과제를 정함
 - 또한, 중점과제에 더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상세한 소자화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새로운 소자화사회대책대강의 책정으로 2015년 6월에 내각부특명담당대신(소자화대책) 아래 소자화사회대책대강이 정한 중점과제에 관한 대치를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실행을 위한 전문가 회의 ‘소자화사회대책대강의 구체화를 위한 결혼·육아지원 중점 대치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고 검토가 이루어짐
 - 검토회는 8월 제언을 발표하고 이것을 반영하여 지역의 결혼에 대한 대응 지원과 소자화대책이 사회전체에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됨
- 2012년에 수립된 자녀·육아 관련 3법에 근거한 ‘자녀·육아지원 신제도’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2015년 4월의 ‘자녀·육아지원 신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내각부에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소자화대책)을 본부장으로 하고, 소자화대책 및 자녀·육아지원의 기획입안·종합조정, 그리고 ‘소자화사회대책대강’의 추진 및 자녀·육아지원 신제도의 시행을 위한 ‘자녀·육아본부’를 설치함
- 2016년 통상국회에서 자녀·육아지원의 제공체제 보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소 내 보육업무목적으로 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창설하고, 일반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거출금의 비율 상한을 인상하는 등의 ‘자녀·육아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짐(4월)

- 2015년 10월부터 ‘꿈을 엮는 육아지원’ 등의 ‘신 세 개의 화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플랜 책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1억총활약국민회의’가 개최됨
- 2016년 5월에는 ‘일본 1억총활약 플랜(안)’이 발표되었고, 6월 2일에 각 의결정됨
 - 이 플랜에서는 경제성장의 장애가 되는 저출산·고령화에 정면으로 대처하여 ‘희망출산율 1.8’을 실현하고, 청년들의 고용안정·처우개선, 다양한 보육서비스 보완,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제약 극복 등의 대응책을 내세우며 2016년부터 2025년의 10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함
- 결혼지원은 2016년 10월부터 내각부특명담당대신(소자화대책) 아래 ‘결혼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환경정비를 위한 기업·단체 등의 대치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기업·단체·대학 등의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2016년 12월에 발표된 제언에서는 환경정비에 있어서 먼저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양립지원 및 다양한 교류 기회 제공, 결혼으로 연결되는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기업 등에서 자주적으로 대처한 사례 및 지자체와 연계한 자주적 대응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 지원의 바람직한 모습, 특정 가치관 및 인생관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유의점으로 제시함
- ‘일본 1억총활약 플랜’에서 1억총활약사회를 위한 최대 도전과제로 설정된 일하는 방식개혁은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행계획 책정 등과 관련된 심의를 위하여, 2016년 9월부터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개최함
- 시간외 노동의 상한규제 등 장시간 노동의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의 비정규 고용의 처우개선 등을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져 2017년 3월에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이 발표됨

□ 25세부터 44세의 여성 취업률 증가 및 보육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 6월에 '육아안심플랜'을 공표하고 2018년부터 2022년말까지 여성 취업률 80%에도 대응할 수 있는 32만 분의 보육 정원을 정비

○ 2017년 12월에 각의결정된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에서는 예정보다 이른 2020년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함

□ 저출산·고령화라는 최대 난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8일 '인재 양성 혁명'과 '생산성 혁명'을 필두로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를 각의결정함

○ '인재 양성 혁명'은 유아교육 무상화, 대기아동 해소, 고등교육 무상화 등 2조 엔 규모의 정책을 포함하여, 육아세대, 아이들에게 많은 정책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전세대형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함

○ 또한,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재원확보는 2019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10% 인상에 따라 이를 활용하고, 자녀·육아에 대한 배분을 0.3 조엔 증액하는 것으로 함

3. 지방창생 전략

□ 최근 일본 행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인구감소문제와 수도권집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이른바 「마을, 사람, 일자리의 創(창)生(생)종합전략」(이하에서는 지방창생전략이라 칭함)임

○ 사실 제2차 아베내각(2012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9월 3일까지) 출범 직후만 해도 지방의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음

- 아베정권의 궤도 수정 전환기가 된 것은 일본 생산성본부의 '일본창성 회의·인구감소문제 검토 분과회'에 의해 "소멸 자치단체 리스트"및 제언 "스톱 저출산·지방활력전략"이 공표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임

○ 분과회가 공개한 목록은 20~39세의 젊은 여성 인구를 그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지표로 판단하고 그 장래 추계를 지자체별로 시산

- 일본에서도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 자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일본의 총 인구 (2013년 기준)는 1억 2730만 명이지만,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이 추세라면 2060년에는 인구가 약 30퍼센트나 감소한 8,674만 명이 됨

- 그러나 생산성본부의 분과회는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 될 것을 전제로 다시 추계작업을 하였으며, 그 결과, 2040년이 되면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조사 대상인 약 1800개의 시정촌 중에서, 젊은 여성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지역은 896개로 현재의 절반 수준 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

□ 2014년 5월 8일에 소멸 리스트가 공개된 이후 아베 내각의 반응은 매우 빨랐다고 할 수 있음

○ 아베총리는 6월 14일에 지방창생본부의 설치 방침을 표명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50년 후 인구 1억 명대로 유지"라는 수치 목표를 세웠음

- 정치권 차원에서 구체적인 인구목표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문회의격인 "선택하는 미래" 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13년에 1.43이었던 합계 출산율을 2030년에 2.07로 끌어 올려 2060년에는 인구가 1억 545만 명 정도가 되도록 제언함

- 아베 내각은 지방창생담당 대신을 신설하여 그 자리에 실제 의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자민당 간사장을 임명하였으며, 신설된 '마을·사

람·일자리 창생 본부'(이하"지방 창생 본부"라 칭한다)는 각 부처를 횡단하여 지역진흥과 인구감소문제의 대책을 담당하는 중요조직이 됨

- 즉 아베정권의 지방창생전략은 안보 법제의 정비와 동시에 메인 테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처럼 마치 소멸리스트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정부가 지방의 인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2015년 4월로 예정된 통일지방선거를 대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음

- 지금까지 아베 내각은 디스플레이션 대책으로 공공사업 추진에는 적극적이었으나 분권 개혁을 포함한 지방에 대한 정책과 배려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아베 전략의 전체적인 완성 측면에서도 지방창생전략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제2차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은 국가전략특구 구상에 볼 수 있듯이 수도권, 관서권 등 대도시권을 중시하고 편향되었던 경향이 있었음
- 그런데 전략특구 구상은 성장의 기폭제로서의 효과를 완전히 발휘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이외에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한 도쿄 집중 가속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었음
- 그러던 중에 "소멸 자치단체 리스트"는 정권에게는 오히려 기회이기도 했으며, 제2차 아베 내각의 경제, 내정 운영의 기축이었던 "대도시·성장·구조개혁 중시 노선"에 대해 중앙 관청이 인구 감소 문제를 발판으로 반격에 나섰다고 볼 수도 있음
- 아베 총리는 지방창생이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여러 곳에서 발언하고 나섰으며 2014년 11월에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고, 동년 12월에는 정부 내에 새로운 조직으로서 지방창생본부를 만들어, 정부는 명실상부하게 지방 창생을 위한 대처를 시작하게 되었음
- "일본정부는 "50년 후 1억 명 정도의 꾸준한 인구구조를 유지한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 전략을 세웠고, 이러한 청사진을 근거로 지방 측은 도도부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비전을 정리하였음

□ 지방창생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은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과 선순환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즉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과 더불어, 그 선순환을 지탱하는 지역에 활력을 되찾게 해줌

- ① 일자리의 창생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임금, 안정된 고용형태, 보람 있는 일자리라고 하는 '고용의 질'을 중시하는 것
- ② 사람의 창생이라는 것은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방에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지방에의 이주·정착을 촉진함과 더불어, 안심하고 결혼·출산·육아를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 ③ 지역의 창생이라는 것은 지방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산간 지역 등 지방 도시, 대도시 등의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제를 해결하는 것

○ 이를 위해서 ① 자립성 ② 장래성 ③ 지역성 ④ 직접성 ⑤ 결과 중시라고 하는 5대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

4. 고령화 대책⁴³⁾

□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해 왔으며, 이에 1986년 '장수 사회대책대강'을 결정하여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모색하였고(정기룡, 2016), 이후 10년이 지난 1995년 11월 8일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수립되었고, 다음 해인 2016년 고령사회대책대강이 책정됨

43) 내각부 고령사회대책 홈페이지(<https://www8.cao.go.jp/kourei/index.html>)에서 참조(2019.1.15.인출)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전 생애에 있어서 안심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바람직한 고령사회의 모습을 명확히 하고, 고령사회대책의 기본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고령사회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고령사회대책대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6년에 책정되어 2001년 책정된 이후 약 12년 동안 개정이 없었고, 이후 2013년에 세 번째, 2018년에 네 번째 개정이 이루어짐

□ 고령화 대응을 위한 또 다른 정책은 소위 골드 플랜이라고 하는 ‘고령자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으로 1989년 12월 책정됨

- 골드 플랜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1990년 6월에 이루어져, 재택복지 서비스의 위치를 명확히 함
 - 1993년부터 노인 홈에 입소결정권을 도도부현으로부터 정촌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모든 시정촌 및 도도부현에서 노인보건복지계획을 책정하도록 함

□ 1993년에 전국 지자체에 책정된 지방 노인보건복지계획은 골드 플랜에서 제시한 고령자보건복지 서비스 정보보다 더 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골드 플랜이 대폭 수정되어 1994년 12월에 ‘신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이하, 신 골드 플랜)이 책정되어 개호 서비스 기반의 정비와 착실히 추진됨

□ 1999년 12월에는 신 골드 플랜이 종료와 개호보험 도입이 맞물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써 ‘앞으로 5개년 간의 고령자보건복지정책의 방향(골드 플랜21)’을 책정함

- 골드 플랜21에서는 개호보험법에 근거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에 따른 고령자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기본적 목표’를 제시하였고, 그 실현을 위한 ‘기본적 정책’을 내세우며, 개호 서비스 기반 정비와 생활지원 대책 등을 주축으로 실시됨

- 골드 플랜은 개호보험제도의 시작으로 인하여 골드 플랜21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본 소절에서는 고령화대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사회대책에 대하여 살펴 보려 함

가. 1996년 고령사회대책대강

□ 기본적인 개념

- 고령사회대책은 법 제2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회가 구축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음
 -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취업 기타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확보되는 공정하고 활력 있는 사회
 -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으로 존중 받으며 지역 사회가 자립과 연계의 정신에 입각하여 형성되는 사회
 -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충실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

□ 분야별 기본 개념

- (고령자의 자립, 참여 및 선택의 중시) 고령자의 다양성을 배려하며 고령자가 안심하고 자립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고령자가 각자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일원으로서 각종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 정비
 - 또한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고령자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의 활용을 도모하고, 기초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보장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배려
-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정책의 체계적인 전개) 고령 사회 대책이 국민의 영유

아기부터 고령기까지의 생애 각 단계에 걸쳐 개인의 자립과 가족의 건전한 역할을 기초로 하여 각각의 수요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각 정책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등 체계적인 전개 도모

- (지역의 자주성 존중) 지역의 고령화 상황과 도시 혹은 농산어촌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기존 시설을 활용
 - 그 외에 마을 만들기 관점에서 지역의 자주성이 발휘되고 정책의 효과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정비
-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 민간부문을 포함한 사회적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면서 각 정책을 더욱 증점화, 효율화하여 고령 사회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
 - 이로 인하여 미래 국민들의 부담이 증대되는 것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세대간의 부담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확보함
- (관계 행정 기관의 연계) 고령사회대책의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 정책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재고
 - 또한, 정책 상호간 충분한 정비를 도모하여 관계 행정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도모
- (의료·복지, 정보 통신 등에 관한 과학 기술의 활용) 고령 사회에서 의료·복지, 정보 통신 등에 관한 과학 기술의 성과가 고령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및 활용의 양 측면에서 조건 정비
 - 또한, 고령사회대책 추진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독창적인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과 경제 구조 개혁의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 달성을 도모
 -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증시한 사회 자본 정비를 실시해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

□ 분야별 정책

- 취업·소득
 - (고령자의 고용·취업 기회 확보) 65세까지의 계속 고용 추진

- 다양한 형태의 고용·취업 기회 확보
- (근로자 생애 전반에 걸친 능력 발휘) 장기간의 직업 생활을 통한 능력 개발
- 여유 있는 직업 생활 실현 등
- 고용·취업에서의 여성 능력 발휘
- 직업 생활과 가정생활과의 양립 지원 대책 추진
- 다양한 근무 형태의 환경 정비
- (공적 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자조 노력으로 고령기 소득 확보에 지원) 기업 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 고령화 등에 대응한 퇴직 연금 제도의 개선
- 고령기에 대비한 자산 형성 등의 촉진

○ 건강·복지

- (건강 관리의 종합적 추진) 생애에 걸친 건강 관리 추진
- 건강 관리 시설의 정비 등
-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확충) 지역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제 정비
- 주택 서비스 확충
- 시설 서비스 확충
-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의 자립 지원 정책의 종합적 실시
- 노인성 치매에 관한 종합적 정책 실시
- (개호 기반 정비를 위한 지원 시책의 종합적 실시) 고령자 개호 종사자 양성·확보 대책 추진
- 복지용구 보급 촉진
-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 제공 체제의 종합적 정비
- (서비스 관련 비용) 의료 관련 비용
- 사회 연대를 통한 개호 비용 확보
- (민간 사업자들을 통한 서비스 활용)

- (육아 지원 정책의 종합적 추진)

○ 학습·사회 참여

- (평생 학습 기회 형성) 평생 학습의 추진 체제와 기반 정비
-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보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 근로자의 학습활동 지원
- (사회 참여 활동 촉진)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활동 촉진
- 자원봉사 활동의 기반 정비

○ 생활환경

- (안정되고 여유 있는 거주 생활 확보) 양질의 주택 공급 촉진
- 다양한 거주 형태에 대한 대응
- 자립과 개호를 고려한 주택 정비
- (고령자를 배려한 마을 만들기)
- (교통사고,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 고령자 보호)
-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환경 조성)

○ 조사 연구 등의 추진

- (각종 조사 연구 추진) 고령자 특유의 질병에 관한 조사 연구 등
- 복지 용구 등의 개발 연구
- 고령자의 안전하고 쓰기 쉬운 생활용품 등의 연구
- 정보 통신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 개발
- (조사 연구 등의 기반 정비) 연구 추진 체제 등의 정비
- 인재 양성 등

나. 2001년 고령사회대책대강

□ 기본적인 개념은 1996년 대강의 내용을 유지

□ 분야별 기본적 개념

○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노년기의 자립지원) 고령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자립된 생활을 보내도록 지원함

○ (연령만으로 고령자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제도 및 관행 등의 개선) 연령만으로 고령자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령자의 취업 및 그 외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

- 예를 들어, 취업에서의 연령 제한 및 제도, 관행에 대해 개선

○ (세대간의 연대강화) 고령자와 젊은 세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 간의 관계 및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도모

○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촉진)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버 인재 센터 및 NPO 등의 활동기반 정비 및 지역과 연관된 창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정비

□ 분야별 정책

○ 취업·소득

- (고령자의 고용·취업 기회 확보) 지식, 경험을 활용하여 65세까지의 고용 확보
- 중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및 촉진
- 다양한 형태에 따른 고용·취업기회 확보
- 창업 지원
-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근로자의 생애를 통한 능력 발휘) 근로자의 직업생활 전 기간에 걸친 능력

개발

- 여유 있는 직업생활 실현
- 고용·취업에서의 여성 능력 개발
- 직업생활과 가정생활과의 양립지원대책 추진
- 다양한 근무형태 환경 정비
-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 확립
-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선택에 중립적인 공적연금제도 구축
- 공적연금제도 일원화 추진
- (자조 노력에 의한 노년기 소득 확보 지원) 기업연금제도 등의 정비
- 퇴직연금제도 개선
- 노년기에 대비한 자산형성 등의 촉진

○ 건강·복지

- (건강 관리의 종합적 추진) 생애에 걸친 건강 관리 추진
- 건강 관리 시설의 정비 등
- 개호예방 추진
- (개호보험제도의 점진적인 실시) 필요한 개호 서비스 확보
- 개호 서비스의 질 향상
- 치매 고령자 지원대책 추진
- (고령자 의료제도 개혁) 대상 연령·공적 부담 재검토
- 환자부담 재검토
- 총의료비 적정 증가율 검토
- 새로운 고령자 의료제도 창설
- 의료제공체제 개혁
- (육아 지원 정책의 종합적 추진)

○ 학습·사회 참여

- (평생 학습 기회 형성) 평생 학습의 추진 체제와 기반 정비
-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보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 근로자의 학습활동 지원
- (사회 참여 활동 촉진)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활동 촉진
- NPO 등 활동기반 정비

○ 생활환경

- (안정되고 여유 있는 거주 생활 확보) 양질의 주택 공급 촉진
- 다양한 거주 형태에 대한 대응
- 자립과 개호를 고려한 주택 정비
- (유니버설 디자인에 근거한 마을 만들기 종합적 추진) 고령자를 배려한 마을 만들기의 종합적 추진
- 공공교통기관의 배리어 프리화, 보행공간 구축, 도로 교통 환경 정비
- 건설·공공시설 등 개선
- 복지정책과의 연계
- (교통 사고,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 고령자 보호) 교통안전 확보
- 범죄, 인권침해, 악질적인 상행위로부터 보호
- 방재정책 추진
-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 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
- 활력 있는 농산어촌 형성

○ 조사 연구 등의 추진

- (각종 조사 연구 추진) 고령자 특유의 질병에 관한 조사 연구 등
- 복지 용구 등의 개발 연구
- 고령자의 안전하고 쓰기 쉬운 생활용품 등의 연구
- 정보 통신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 개발

- (조사 연구 등의 기반 정비) 연구 추진 체제 등의 정비
- 인재 양성 등

다. 2013년 고령사회대책대강

□ 기본적인 개념은 1996년, 2001년 대강의 내용을 유지

□ 분야별 기본적 개념

- ('고령자'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 개혁) 고령자의 건강과 경제적인 상황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실태와의 괴리를 없애고,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을 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저해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혁을 도모할 필요
 - 즉, 위하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령자상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바꾸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사람에 대하여는 도움을 주는 측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민의 인식 개혁을 도모
- (노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 사회 보장 제도의 설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자립을 지탱하고,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정비한다는 사회 보장의 원점으로 돌아가 그 본원적 기능의 복원과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공조(共助)·공조(公助)의 최적의 균형에 유의하고, 자립을 가족, 국민 상호 지원 구조를 통하여 지원함
-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의 활용)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활약하고자 하는 의욕을 살려 연령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유연한 노동 방식이 가능한 환경 정비를 도모
- (지역력의 강화와 안정적인 지역사회의 실현) 지역과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역 커뮤니티의 재구축을 도모할 필요
 - 가운데 핵가족화 등 세대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정 내에서 개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개호를 담당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결속력 구축을 도모

- (안전하고 안심되는 생활 환경의 실현) 일상의 장보기, 병원의 통원 등 고령자가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배리어프리 등을 원활히 추진
- (청년기부터의 '인생 90년 시대'에 대한 준비와 세대 순환의 실현) 고령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려면 젊은 시절부터의 건강 관리, 건강 유지에 대한 대책과 평생 학습, 자기 계발 대책이 중요
 - 고령기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관점에서는 취업기에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 등의 스톡을 적정하게 형성하여 은퇴 후에는 그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마지막까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제 설계가 가능한 대책을 도모

□ 분야별 정책

- 취업·연금 등의 분야에 관한 기본 정책
 - (전원 참가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고령자의 고용·취업 대책의 추진)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
 - 다양한 형태에 의한 고용·취업 기회 확보
 - 고령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촉진
 - 창업 지원
 - 지식, 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의 고용 확보
 -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능력의 발휘) 근로자의 직업 생활 전기간을 통한 능력의 개발
 - 여유 있는 직업 생활의 실현 등
 - 직업 생활과 가정 생활과의 양립 지원 대책의 추진
 - 다양한 근무 형태의 환경 정비
 - (공적 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적 연금 제도의

확립

- 저연금·무연금 문제への 대응
- 노동 방식이나 라이프 코스의 선택에 중립적인 연금 제도의 구축
- 연금 기록 문제への 대응·업무 운영의 효율화
- (자조 노력에 의한 고령기의 소득 확보에 대한 지원) 기업연금제도 등의 정비
- 퇴직금제도의 개선
- 고령기를 대비한 자산 형성 등의 촉진

○ 건강·개호·의료 등의 분야와 관련된 기본 정책

- (건강을 위한 종합적 추진) 전 생애에 걸친 건강 유지의 추진
- 건강 증진 시설의 정비 등
- 개호 예방의 추진
- (개호보험 제도의 점진적 실시)
- (개호 서비스의 충실) 필요한 개호 서비스의 확보
- 개호 서비스의 질 향상
- 치매 고령자 지원 시책의 추진
- (고령자 의료제도의 개혁) 고령자 의료제도의 재검토
- 지역에서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재택 의료 개호의 제공
- (주민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지원 구조 구축의 촉진) 지역 내 상호 도움에 의한 생활 지원의 추진
- 지역 복지 계획의 책정 지원

○ 사회 참가·학습 등의 분야와 관련된 기본 정책

- (사회참가 활동의 촉진) 고령자의 사회참가 활동의 촉진
- '새로운 공공' 일꾼의 활동 환경 정비
- (학습 활동의 촉진) 학습 기회의 체계적인 제공과 기반 정비
-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

- 사회에서의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

- 근로자의 학습 활동 지원

○ 생활환경 등의 분야와 관련된 기본 정책

- (풍요롭고 안정된 주거 생활의 확보) 차세대로 계승 가능한 양질의 주택 공급 촉진
- 순환형 주택 시장의 실현
-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
- (유니버설 디자인에 근거한 도시 정비의 종합적 추진) 고령자를 배려한 도시 정비의 종합적 추진
- 공공교통기관의 배리어 프리화, 보행공간 구축, 도로 교통 환경 정비
- 건축물·공공시설 등 개선
- (교통 사고,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 고령자 보호) 교통안전 확보
- 범죄, 인권침해, 악질적인 상행위로부터 보호
- 방재정책 추진
-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 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
- 활기찬 농어촌의 재생

○ 고령사회에 대응한 시장의 활성화와 조사 연구 추진을 위한 기본 정책

- (고령자용 시장의 개척과 활성화) 의료·개호·건강 관련 산업의 강화
- 불안의 해소, 생애를 즐기기 위한 의료·개호 서비스의 기반 강화
- 지역에서 고령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의 실현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의 추진과 기반 정비) 의료 이노베이션의 추진
- 고령자 특유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 등
- 고령자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의료·재활훈련·개호 관련 기기 등에 관한 연구 개발

- 정보 통신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 개발
- 고령사회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
- 전세대가 참가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시책
 - (전원 참가형 사회의 추진) 청년 고용 대책의 추진
 - 고용·취업에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 추진
 -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의 추진
 - 아동·육아 지원 정책의 종합적 추진

라. 2018년 고령사회대책대강

□ 기본적인 개념은 이전 세 번에 걸쳐 발표된 대강의 내용을 유지

□ 분야별 기본적 개념

- 연령에 의해서 획일화가 될 수 있는 점을 재검토하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희망에 따라 의욕·능력을 살려 활약할 수 있는 에이지리스(ageless) 사회를 지향
 -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인식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연령 구분으로 사람들의 생애 단계를 획일화하는 인식을 재검토
- 지역의 생활 기반을 정비하여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고령기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
 -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고령기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능한 사회를 실현
- 기술 혁신 성과가 가능한 새로운 고령사회대책을 지향
 - 고령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저해하는 문제(신체·인지 능력, 각종 구조 등)에 대하여 신기술이 새로운 시점에

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여 기존의 발상을 넘어선 환경 정비와 신기술의 활용을 추진

□ 분야별 정책

○ 취업·소득

-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의 정비) 다양한 형태에 의한 취업 기회·근무 형태의 확보
- 고령자 등의 재취업 지원·촉진
- 노년기의 창업 지원
- 지식, 경험을 활용한 고령기의 고용 확보
- 근로자의 직업 생활 전기간을 통한 능력의 개발
- 여유 있는 직업 생활의 실현 등
- (공적 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적 연금 제도의 운영
- 노년기 직업 생활의 다양성에 대응한 연금 제도의 구축
- 근무 방식에 중립적인 연금 제도의 구축
- (자산 형성 등의 지원) 자산 형성 등의 축진을 위한 환경 정비
- 자산의 유효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

○ 건강·복지

- (건강 증진의 종합적 추진) 전생애에 걸친 건강 증진의 추진
- 개호 예방의 추진
- (지속 가능한 개호보험 제도의 운영)
- (개호 서비스의 충실(개호 이직 제로의 실현) 필요한 개호 서비스의 확보
- 개호 서비스의 질 향상
- 지역 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재택 의료·개호의 제공
- 개호와 일의 양립 지원

- (지속 가능한 고령자 의료제도의 운영)
- (치매 고령자 지원 정책의 추진)
- (삶의 최종 단계에서의 의료의 올바른 형태)
- (주민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상호 연대 구조 정비의 촉진)

○ 학습·사회 참가

- (학습 활동의 촉진)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
- 사회에서의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
- 사회 보장 등에 대한 이해 촉진
- ICT 이해력의 향상
- 라이프 스테이지에 대응한 소비자 교육 대책의 촉진
- (사회 참가 활동의 촉진) 다세대에 의한 사회 참가 활동의 촉진
- 시민과 NPO등 담당자의 활동 환경 정비

○ 생활·환경

- (풍요롭고 안정된 주거 생활의 확보) 차세대에 계승 가능한 양질의 주택 공급 촉진
- 순환형 주택 시장의 실현
-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
- (고령사회에 적절한 도시 정비의 종합적 추진) 다세대를 배려한 도시 정비·지역 조성의 종합적 추진
- 공공 교통기관 등 이동 공간의 배리어프리화
- 건축물·공공 시설 등의 배리어프리화
- 활기찬 농산어촌의 재생
- (교통 안전의 확보와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의 보호) 교통 안전의 확보
- 범죄, 인권침해, 악질 상술 등으로부터의 보호
- 방재 정책의 추진

-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 촉진)

○ 연구 개발·국제사회에의 공헌 등

- (선진 기술의 활용 및 고령자를 위한 시장의 활성화)
- (연구 개발 등의 추진과 기반 정비) 고령자 특유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 등
- 의료·재활훈련·개호 관련 기기 등에 관한 연구 개발
- 정보 통신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 개발
- 고령사회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 분석
- 데이터 등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 정비
- (제외국과의 지견 및 과제 공유) 일본의 지견을 국제사회에 전개
- 국제사회에서의 과제 공유 및 연계 강화

○ 모든 세대의 활약 추진

제5절 소결

1. 경제정책

□ 골태방침은 일본의 예산편성 및 세제개혁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잡는 주요 재정 운영계획으로 매년 6월 공표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고용과 복지의 모든 영역, 즉 정권에서 추진하려 하는 모든 정책이 총 망라

□ 일본의 경제정책은 1990년대 초반 버블이 붕괴되어 침체하는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됨

○ 특히 자산 가격 상승으로 초래되었던 버블이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됨

○ 또한 경기 후퇴가 장기간에 걸친 나타남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어 재정개혁을

동시에 추진

-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으며,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함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 압박이 강해졌으며,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
 - 2008년 이전까지 경기회복 국면에 있었으나,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일본 경제는 다시 침체하기 시작함
 - 특히 이 시기에는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즉 생활대책이 주를 이루게 됨
- 2010년대의 경제정책은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기 아베내각에서 추진했던 아베노믹스로 대변됨
 - 아베내각의 경제정책은 크게 제1기의 경제정책과 제2기의 경제정책으로 나뉘어 지며 각각 '3개의 화살'로 대변되는 정책이 존재함
- 제1기의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전략'으로 구성됨
 - '대담한 금융정책'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2%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는 것
 - '기동적인 재정정책'은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것으로서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유효수요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전략과 연계하기 위한 정책
 -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전략'은 '일본재흥전략'으로 대변되며, 지속적인 민간수요 창출을 통하여 경제를 건설히 하며, 투자 생산성 향상과 함께 고용과 보수라는 결과를 민간에 충분히 전달되게 하기 위한 전략
-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제2기 아베노믹스는 '1억총활약사회'를 구상하며, '희망

을 가져오는 강한 경제', '꿈을 이루는 육아정책',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 '희망을 가져오는 강한 경제'는 개인 소비 증대와 명목 GDP 600조 엔 달성을 목표로 함
- '꿈을 이루는 육아 지원'은 대기 아동 해소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구축 등을 통하여 희망 출산율 1.8 실현
-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보장'은 개호로 인한 이직을 완화하고, 고령자 및 장애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실현

2. 고용정책

- 1990년대 초반 버블 경제가 붕괴 후, 고용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음
 - 1991년의 유효구인배율은 1.4배로 버블시기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1993~1997년에는 0.6~0.7배 수준
 -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 기술 변화,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배경으로 고용창출·실업감소, 노동자 능력 개발 지원
-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는 경기 후퇴 및 주식 하락 등, 서서히 회복 국면에 있던 일본 경제를 다시 쇠퇴의 늪으로 빠뜨렸고, 완전실업자 수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탄력적으로 고용을 조절할 수 있는 고용 시스템으로 변화해 감
 - 이와 더불어 이전까지의 지원이 주로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전환
 -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방식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됨

- 2000년대 초반 이후 경기가 회복기조에 들어섰고, 고용 관련 지표도 개선되었으나, 장기에 걸친 경기 위축과 청년들의 취업의식 변화로 인하여 프리터 및 니트의 증가와 같은 청년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2005년, 일본 인구의 자연 증가가 음(-)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경험한 일본 정부는 2006년 9월부터 '인구감소 하의 고용대책 검토'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정책기본방침'이 제정됨
 - 이것은 본격적인 인구감소의 도래, 글로벌화 및 기술혁명 등이 가져오는 변화를 이겨내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고용·생활 안정' 확보를 목표로 함
 - '고용정책기본방침'은 '안정성 확보', '다양성 존중', '공정성 확보'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 2000대 이후부터 대두된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고용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됨
 - 청년자립학교사업,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 등 노동시장에 진입을 주저하는 청년(프리터 및 니트 등)들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추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고용조정지원금 등의 대상자 자격이 점점 완화된고, 지급된 금액이 증가함
 - 또한, 기업 수익률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계약직 노동자, 특히 파견계약직의 계약 연장 해지가 일시에 증가하여 '파견계약해지' 문제가 일어나고, 이들을 위한 정책(긴급인재육성지원사업 등)이 시행됨
- 그동안 만성적인 경기 침체,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해 왔으나, 2012년 이후 완전 실업률의 감소 등 고용정세는 개선됨을 넘어 일손부족기조가 되어 그 이전과의 상황과 180도 달라짐
 - 부족한 노동공급을 위한 고용대책으로서는 여성, 청년의 취업촉진 및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였고, 2012년 '고용정책기본방침'이 개정됨

- 이번 기본방침에서는 경제활동인구감소, 일손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중점이 됨

3. 복지정책

가. 저출산 대책

- 일본은 1990년 '1.57 쇼크' 이후부터이며, 엔젤플랜을 시작으로 신엔젤 플랜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대책이 추진됨(1995~2004년)
 -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이 제정되어 내각부에 소자화사회대책회의가 설치되었고, 2004년 6월 '소자화사회대책대강'이 수립됨
- 소자화사회대책대강에 근거하여 구체적 시행계획을 책정한 것이 '자녀·육아 플랜'임(2005~2009년)
 - 2005년부터 '자녀·육아 플랜'을 추진하였으나, 예상보다 저출산 진행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확충, 강화,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새로운 소자화대책에 대하여'를 책정
 -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고 장래인구추계가 발표되었고, 사회보장심의회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특별부회'의 논의를 통하여 2007년 12월,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을 발표
 -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라이프밸런스) 현장' 및 '일과 생활의 조화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 결정
 - 2008년 2월, 대기아동해소 등의 보육정책을 양적·질적으로 보완 및 강화하고 추진하기 위한 '신 대기아동제로작전'이 발표
-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에는 5년에 한 번씩 대강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 1월, '자녀·육아 비전'이 각의 결정됨

- 이와 함께 ‘자녀·육아 신시스템 검토회의’가 발족하여 새로운 육아지원 제도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 2012년 3월에는 ‘자녀·육아 신시스템에 관한 기본제도’를 소자화사회대책회의에서 결정
- 도시부를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아동 해소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대기아동해소가속화플랜’을 새롭게 책정
- 2013년부터의 저출산 대책은 내각부특명담당대신(소자화대책)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6월 ‘소자화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을 제정하여 골태 방침 및 성장전략과 함께 추진됨
- 인구급감·초고령화라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도쿄일극집중’ 완화,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 희망 실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과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창생담당대신을 신설함과 동시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발족(2014년 9월)
- 2015년 3월, 새로운 ‘소자화사회대책대강’이 책정
 - 이번 대강에서는 소자화대책의 틀을 넘어 새로운 결혼 지원이 추가되어, 육아지원책을 한층 더 보완하고, 젊은세대의 결혼·출산 희망을 실현하고, 다둥이 세대에 대한 배려, 남녀의 일하는 방식 개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응 강화의 5개 중점과제 수립
 - 유치원과 보육소 통합을 위한 ‘자녀·육아지원 신제도’는 2015년 4월 1일 시행되었고, 이를 통괄하는 ‘자녀·육아 본부’를 내각부에 설치
- 2016년 6월, ‘일본 1억총활약 플랜’이 발표되어,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여 ‘희망출산율 1.8’을 실현하고, 청년들의 고용안정·처우개선, 다양한 보육서비스 보완,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제약 극복 등 10년간의 로드맵 제시

- 1억플랜에서 최대 도전과제로 설정된 일하는 방식개혁은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개최
 - 본 회의에서는 시간외 노동의 상한규제 등 장시간 노동의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의 비정규 고용의 처우개선 등에 관련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이 발표됨(2017년 3월)
- 저출산·고령화라는 최대 난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인재 양성 혁명’과 ‘생산성 혁명’을 필두로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2017년 12월) 발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당초 아베내각은 지방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지방문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던 때에 지방 소멸 리스트가 공개됨(2014년 5월)
- 이후 아베 내각의 반응은 매우 빨라서, 6월 14일에 지방창생본부의 설치 방침을 표명
 - 2014년 11월에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고, 12월에는 새로운 조직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본부’ 설치
- 지방창생전략은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생과 선순환을 확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
 - 즉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이것이 지역에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는 것

나. 고령화 대책

-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1986년에 발표된 ‘장수사회대책대강’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고령사회대책대강’으로 이어짐
- 이와 유사한 시기에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이 1989년 책정됨

- 이는 골드 플랜이라고 하며 주로 고령자 케어(개호)에 대한 정책을 담고 있음
- 이후 1994년에 신 골드 플랜, 1999년에 골드 플랜21이 발표되었으나, 2000년 4월부터 시작된 개호보험 이후 새로운 개정은 없었음

□ ‘고령사회대책대강’은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2001년, 2013년, 2018년 개정이 이루어짐

- 이 대강의 이념은 고령자의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충실한 생활이 가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취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사회 구축하는 것
- 개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으나 대체로 취업·소득, 건강·복지, 학습·사회 참여, 생활환경, 조사 연구 분야에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제 5 장

일본의 경기부양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

제1절 디플레이션과 금융 정책

제2절 고령자고용정책과 공적연금제도와의 관계

제3절 소결

5

일본의 경기부양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

- 제4장에서는 일본의 정책을 경제, 고용, 복지 정책으로 분류하여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을 살펴봤음
-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정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버블 경제가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 고용 불안정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음
 - 특히, 2000대 초반부터는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 하락을 동반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이 강력하게 실시됨
- 한편,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경기 부양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에 따라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고,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매입 등에 따라 재정 불균형이 심화됨⁴⁴⁾
 - 또한,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심화와 함께 사회보장지출,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연금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수급 및 은퇴연령 조정, 정년 이후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됨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는 일본의 경기 침체 시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이루어졌던 정책과 인구변화에 따른 재정불균형에 대비하여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려 함
- 즉,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디플레이션에 대응한 금융 정책, 고령자의 연금과 고용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함

44) 물론 양적완화에 따른 국채 매입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제1절 디플레이션과 금융 정책

1. 금융정책의 흐름

-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지속적인 경기 후퇴와 물가 하락을 경험해 온 일본 경제는 이를 타파하고자 다양한 금융 정책을 시행함
- 1990년대에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 3월의 금리가 0.02~0.03%의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에 돌입
 - 제로 금리의 목적은 시간축 효과(policy duration effect)를 의도하는 것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장기적으로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는 신호(signal)를 보내는 것
 -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 당국(모리 총리)은 제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던 반면, 금융 당국은 제로 금리 정책이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조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식이 뿌리 깊었음
- 일본 정부는 2000년 이후 미국의 IT 버블과 맞물려 '일본의 기업수익이 개선되고,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등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국면'에 있다고 판단하여 2000년 8월 제로 금리 정책을 폐기
- 2001년 3월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의 정의를 '물가 하락이 2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 정의하였고, 당시 재무상이던 아소 타로는 '일본경제는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라고 표명하며,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함
-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임
 - 이전까지의 디플레이션의 정의는 1999년의 경제기획청이 물가 레포트에서 언급한 '물가하락을 동반한 경기후퇴'였으며, 이러한 정의는 매우 모호하여 경제 주체들의 디플레이션 판단에 매우 혼란을 주는 단점이 있었음
- 기존 금융정책이 금리를 조정하여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과는 다르게 양적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직접 민간 자산 및 국채를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

- 단, 일본의 경우, 민간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가 컸고, 실제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저하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산매입보다는 당좌예금잔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곽영훈, 2010)

- 즉, 양적완화정책의 목표는 제로 금리 정책에서 시행했던 무담보 콜 금리에서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
- 또한, 일본은행은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0% 이상이 될 때까지 양적완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 표명
-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전통적인 금융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비전통적 금융정책' 또는 '이차원(異次元) 완화'라 명명함

○ 이후, 2006년 7월 '일본 경제는 내주와 외주, 기업부분과 가계부분의 균형이 잡힌 형태로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발표하며 제로 금리 정책을 폐지(日本銀行, 2006)

□ 2008년 말의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사의 부도로부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본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다시 경기 쇠퇴 국면에 진입

○ 2009년 11월 일본 정부는 다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고 선언(内閣府, 2009a)

○ 2010년 10월, 일본은행은 '포괄적 금융완화' 정책 실시

- (실시배경) 일본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해외 경기 불황 및 엔고에 따른 기업 측면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면 개선 움직임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日本銀行, 2010)
- 정책목표는 이전의 당좌예금에서 다시 무담보 콜 금리(1일물)로 변경되었고, 금리 목표를 0~0.1% 선에서 억제
- '중장기 물가안정 이해'에 근거하여⁴⁵⁾,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될 때까지 실질금리를 0%로 하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표명

- (자산매입기금 창설) 장기국채, CP, 회사채, 지수 연동형 상장 투자신탁(ETF), 부동산 투자신탁(J-REIT) 등 다양한 금융자산 매입과 고정 금리 방식·공통 담보 자금 공급 오퍼레이션을 시행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기금 창설을 검토

□ 2013년 4월, 일본 은행은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 정책 실시하였으며, 이것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黒田, 2016)

○ (첫 번째) 일본은행이 2% 물가안정 목표 조기 실현을 강력하게 언급하여(commitment), 경제 주체들에게 만연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불식시키고 예상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것

○ (두 번째)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하여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채권 수익률 곡선(yield curve) 전체에 걸쳐 명목금리 인하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즉, 실질금리를 단기만이 아닌 장기에서도 대폭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완화효과를 가져오는 것

○ 정책목표는 다시 일본은행 당좌예금으로 변경되었고, 장기국채, ETF, J-RIET의 매입이 확대되었음

- 2010년 10월 '포괄적 금융완화'에서 언급된 '자산매입기금 창설'은 폐지

○ 2014년 10월, 당좌예금목표 수정 등 보완된 정책 발표

□ 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with a negative interest rate)' 정책 실시(日本銀行, 2016a)

○ (실시 배경) 일본 경기는 기업부분·가계부분 모두 소득에서 지출까지 긍정적인 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고, 완만하게 회복을 지속하고 있으며, 물가 기조는 착실히 상승하고 있음

45)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 이하의 플러스 영역에 있고,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 위원 대부분이 1% 정도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 (금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0.1% 금리를 적용하며,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더욱 금리를 인하
 - 구체적으로는 일본은행 당좌예금을 3단계로 분할하여, 각각의 계층에 대응하는 플러스 금리,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
- (양) 금융시장 조절방침
 - 다음 금융정책결정회합까지 금융시장 조절방침은 80조엔에 상당하는 페이스로 증가되도록 조절
- (질) 자산매입방침
 - 장기국채는 보유 잔액이 연간 약 80조엔에 상당하는 페이스로 증가하도록 매입하나, 수익률 곡선 전체가 금리 저하를 촉진시키는 관점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며, 매입 평균 잔존기간은 7~12년 정도로 함
 - ETF 및 J-REIT는 보유 잔액이 각각 연간 약 3조엔, 연간 약 900억 엔 매입
 - CP 등, 회사채는 각각 약 2.2조엔, 약 3.2조엔의 잔액을 유지
- 2016년 9월, '장단기 금리 목표를 도입한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 실시(日本銀行, 2016b)
 - (실시 배경) 2016년 1월 시행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였고(실질금리 인하), 지속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2% 물가상승'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
 - 장단기 금리 조절(yield curve control)
 - (금융시장 조절방침) 단기금리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잔액에 -0.1% 금리를 적용하고, 장기금리는 국채 10년물이 0% 정도에서 안정되도록 국채를 매입하나 평균잔존기간은 폐지
 - 장단기 금리 조절을 위한 새로운 오퍼레이션 도입
 - 일본은행이 지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국채 매입, 고정금리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현재 1년)

- 자산매입방침
 - ETF 및 J-REIT는 보유 잔액이 각각 연간 약 6조엔, 연간 약 900억 엔 매입
 - CP 등, 회사채는 각각 약 2.2조엔, 약 3.2조엔의 잔액을 유지
- inflation-overshooting commitment
 -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는 수익률 곡선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나,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를 넘을 때까지, 확대를 지속
 - 이 방침이 지속되면 약 1년 후 잔고가 명목 GDP 대비 100%(약 500조엔)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현재 일본은 약 80%, 미국 및 유럽은 약 20%)

2. 디플레이션에 대응한 금융정책의 효과에 관한 논의

- 2016년 1월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양적·질적 금융완화'의 경우, 9명의 위원 중 찬성이 5명, 반대가 4명으로 찬반이 매우 극명하게 갈린 상태에서 실시됨(日本銀行, 2016a)
 - (반대 의견) 양적·질적 금융완화의 보완 조치 도입 직후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자산 매입의 한계라고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 이외에 복잡한 구조가 혼란을 초래할 것
 - 지금보다 더 낮은 수익률 곡선은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
 -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당좌예금 보유잔액 증가의 페이스를 낮추는 것과 함께 실시해야할 것
 -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장기국채매입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위기시의 대응책으로만 타당함
- 2013년 3월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한 쿠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는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대담한 금융정책'을 담당하였음

- 그는 2017년 11월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의 강연에서 2013년 이후에 금융 정책 실시에 의하여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기업수익, 노동 시장에서의 완전고용상태 등 최근의 경제 상태는 1990년대 말 이후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黒田, 2017)
 - 만일 금융정책을 공격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日本銀行, 2016c)
- 일본의 민간 경제 연구소의 평가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고, 실물 경제(총수요와 총공급, 물가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보이고 있으나, 내수에 대한 파급이 아직 불충분하다고 평가(みずほ総合研究所, 2017)
 - 반면, 다른 연구소는 일본 경제가 지속적인 물가 하락과 과도한 엔고 현상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가 가능(三井住友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株式会社, 2018)
- 한편, 다른 민간 경제 연구소에서는 일본은행이 목표로 삼고 있는 2%의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본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낮출 것은 제언하고 있음(日本総研, 2018)
 -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가 실시된 이후, 2014년 여름 이후 원유가 하락과 소비세율 인상 후의 수요 감소, 그리고 2015년 여름 이후 신흥 국가(BRICS 등)들의 경기 침체와 이러한 충격(shock)을 받은 금융시장의 불안정화 등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률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日本銀行, 2016c)
 - 그러나 '양적·질적 금융완화'의 파급효과의 경로는 ①2%의 물가 상승률 목표 실현을 강하게 약속하여 실제 대규모의 완화를 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물가에 대한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예상 물가 상승률 증가), ②대량의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금리를 낮추는 것(명목금리 인하)의 2가지임
 -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물가 기대를 감안한 금리(실질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이것이 경기를 자극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기제를 상정하고 있음

- 최근 쿠로다 총재는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하는 것은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음(日本經濟新聞, 2019a)
 - 또한,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이유는 충분한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앞으로 임금상승과 함께 물가도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즉, 이전부터 표명해 온 것처럼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변화시킬 개연성은 적어보이며, 당분간 이를 목표로 강력한 금융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임

제2절 고령자고용정책과 공적연금제도와의 관계

- 1990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
 - 60세 정년을 규정하고, 정년 도달 후에도 계속고용 추진에 대하여 노력의무규정 신설
- 1994년, 후생연금보험법 등의 일부 개정
 - 노령후생연금의 정액급여부분에서 남성은 2001년부터, 여성은 2006년부터 3년마다 1세씩 12년에 걸쳐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 石井・黒澤(2009)에 의하면, 정액급여부분의 지급개시연령 상향은 60~61세의 후생연금 수급자격자의 상용직 취업률을 4~9%p 증가시키고, 비취업률을 3~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단, 파트타임 취업률 및 실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1994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1998년 4월 시행)
 - 60세 정년제가 경제 전반으로 전파되었다고 인식한 이후 60세 미만 정년제 폐지(60세 정년의 의무화)
- 1995년, 고용보험의 고령자고용 계속급여금 제도 신설

- 고령자고용 계속급여는 60세 이전과 비교하여 임금이 75% 미만으로 감소한 상태에서도 일을 계속하고 있는 지급되는 급여
 - 단,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일반 피보험자에 지급
 - 급여의 목적은 고령자의 취업의욕 유지 및 고취, 65세까지의 고용계속 지원 및 촉진
- 이 급여금 제도의 실효성에 있어서 찬반양론이 존재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노사 간에 넓게 인식되어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촉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과 연금을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에서 계속 유지됨

□ 2000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

- 1990년 개정에서 신설된 정년 후의 계속고용 노력 의무를 더욱 확대하는 형태로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 후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65세까지 안정된 고용확보조치’가 강구됨
 - 이것은 사업주의 노력의무로서 규정되었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에 관한 노동대신이 개별 지시하는 제도 폐지

□ 2000년, 연금제도개혁 관련법안 성립

- 노령후생연금의 보수 비례부분이 남성은 2013년부터 여성은 2018년부터 3년마다 1세씩 12년에 걸쳐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 또한,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재직노령연금제도⁴⁶⁾의 연령을 65세 이상까지 적용하도록 함
 - 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늘림에 따라 취업을 하여 소득 감소분을 보완하려는 수요가 증대하였으며, 본 개정을 계기로 65세까지의 계속고용 노력 의무를 법적의무로 하는 검토가 시작됨

46) 취업을 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 및 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4월 시행)

- 지금까지 노력 의무였던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고, ①정년 연령을 65세로 상향, ②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도 도입, ③정년 규정 폐지 중 하나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
 - 그러나 경영진의 반대가 강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노사가 협의하여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⁴⁷⁾
 - 예를 들어, 노사 간의 협정으로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기준을 도입한 경우, 그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반면, 기업 측은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고령자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계속고용률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⁴⁸⁾
 - 따라서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가 의무화되었어도, 취업소득이 낮게 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지는 고령자가 생길 가능성 잔존
 - 山田 (2015a)의 연구에서는 정액급여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이 64세로 상향된 2010년 전후에 63세 남성의 취업확률이 5%p 증가하였고⁴⁹⁾, 특히 저소득층에서 연금 감소분, 즉 정액급여부분의 지급개시연령 상향 분을 계속고용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었음(단, 중간 소득계층의 소득은 감소)
 - 2009년의 데이터로 분석한 浜田 (2012a)에 따르면, 후생연금이 없으면 수입이 생계비보다 적어져, 순저축을 해약해도 마련할 수 없는 고령자가 60대 전반에서 15% 정도, 60대 후반에서 50%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고령자고용확보조치가 확대되면 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함

47) 사업주가 노사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협의되지 않은 경우, 계속고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시행 후 일정 기간 인정되었음.

48) 山田 (2007) 는 60세의 임금을 1% 인상하면, 계속고용 희망률은 4~6% 하락한다고 분석함.

49) 山本 (2008) 의 연구에서도, 55세 시점에서의 고용 노동자였던 60~62세의 취업률이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의무화에 따라 12~14% 증가했다고 분석함. 또한, 近藤 (2014) 의 연구에서도 2006년 시행대상이었던 1946~50년생으로 60세 전후에 퇴직하는 경향이 남성 전체에서 2~6% 감소, 실업이 감소, 임시·일용직 등의 불안정 고용 또한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2004년, 국민연금법 등 일부 개정

- 급여수준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구조(매크로 경제 슬라이드) 도입하였고, 재직 노령연금제도 폐지
 - 노령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고령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앞으로 수급개시연령을 65세 이후로 연기하는 경우, 수급 연기로 인하여 받지 못한 금액을 연금액에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급연기제도 도입⁵⁰⁾
- 재직노령연금제도에는 취업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음(山田, 2012)
 - 山田 (2015b)는 2009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직노령연금에 의한 지급정기조정을 받지 않은 연령층(60~62세)에서는 분석결과에 있어서 약간의 유의할 점이 있으나, 취업억제효과는 확인되지 않음
 - 浜田 (2012b)는 재직노령연금제도에는 취업억제효과와 소득분배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면, 65세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격차가 보다 커질 수도 있으므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높인다고 해서 바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감액되는 65세 이후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 2012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2013년 4월 시행)

- 2004년 개정으로 창설된 노사협정에 의한 계속고용대상자 선정이 폐지되고, 연령에 의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예외 없이 의무화(경과조치 포함)
 - 또한, 계속고용제도 대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무위반 기업에 대한 공표 규정 도입

- 2013년부터 노령후생연금 보수비례부분의 단계적 인상 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연금 제도 개정이 고령자 고용정책의 큰 영향을 주었음
 -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금 지급개시연령과 노동공급과의 관련이 점점 밀접하게 되었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긴 시간의 노동이 필요하게 됨
- 山田 (2017)의 분석에서는 2013년 노령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지급개시연령 상향 및 계속고용제도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는 구조의 폐지는 대상이 되는 1953년생의 60세 때 취업률을 정규직 남성에서 7~10% 증가시키는 반면, 실업률 상승은 없었음(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 때문)
 - 또한, 해당 코호트의 60세의 경우, 본인 소득액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비례부분의 지급개시연령 상향에 의해 받지 못하게 된 연금소득을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소득(연금 조기 수급) 등에서 보전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함

□ 2012년, 국민연금법 등 일부 개정

- 납부한 보험료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고, 장래 무연금자 발생을 억제하려는 관점에서 소비세를 10%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2015년 10월부터 노령기초연금 등 수급자격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⁵¹⁾

□ 2016년, 고용보험법 등 일부 개정(2017년 1월 시행)

-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고, 64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조치를 2020년 4월부터 폐지
- 고용보험제도에는 1984년 개정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는 은퇴자가 대부분이었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단시간 근로 형태가 대부분이었던 현실을 고려

50) 재직노령연금제도와와의 조정을 위하여, 연기에 의한 증액 금액은 당초 지급개시연령에서 수급하게 되면 재직노령연금제도에서 지급정지가 되지 않은 연금 상당분이 됨.

51) 소비세 증가분을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소비세율 인상이 2017년 4월로 연기되었음에도,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무연금 문제는 긴급한 문제입니다. 연금수급자격기간 단축이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까'라고 하였고, 2019년으로 재연기는 하지 않는 을 피력하였음.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2016년 11월, 2017년 10월 지급되는 9월분부터 실시한 연금수급자격단축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됨.

하여,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새롭게 고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아닌 고령계속 피보험자로 하여, 실업한 경우에는 기본수당이 아닌 일시급인 고령구직자급여가 지급되도록 제도설계가 되었음

- 그러나,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화 등에 따른 고령자 고용의 진전과 전원참가형 사회의 요청 등의 환경변화에 의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제3절 소결

□ 일본의 금융정책은 이전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비전통적·이차원적인 것으로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리고, 동시에 국채를 매입하여 장기적인 금리를 하향하려는 노력을 시도해 왔음

- 특히 아베정권 수립과 함께 매우 공격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부 및 민간에서도 이러한 금융정책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음

- 단지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판단 요인 중 하나인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있으나, 일본 은행은 물가 상승률 2% 유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기조가 변경될 여지는 없어 보임

□ 일본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저출산·고령화 및 단카이 세대의 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65세까지의 계속 고용'이 고령자 고용정책의 큰 과제로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음

- 또한, 노령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정액급여부분에서는 남성의 경우 2001~2013년, 보수비례부분에서는 2013~2025년, 여성은 둘 다 남성보다 5년 뒤로 설정

- 실제로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을 촉진하는 형태로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반이 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이 여러 번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정책과제는 정년 후의 고용확보와 은퇴 후의 연금수급과의 관계, 즉 고용과 연금 사이에 소득 공백 기간을 메우는 것임

□ 고령자 고용정책과 공적연금제도 개정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령자고용확보조치 및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상향은 대상이 되는 고령 남성의 취업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지급연령 상향에 따른 연금 감소분을 계속고용에 따른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결과를 보여줌

- 근로소득이 노후의 소득원 및 빈곤예방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에서는 일본이 해왔던 고용과 연금과의 관계에 대한 제도 개정은 참고가 될 것임

제 6 장 결론

제1절 최근 경기회복 국면에 대한 내각부의 견해

제2절 최근 일본 경제·고용 상태에 대한 일본 전문가 자문

제3절 결론

제1절 최근 경기회복 국면에 대한 내각부의 견해⁵²⁾

□ 노동시장관련 지표의 개선에 대한 견해

- 인구 감소·고령화가 잠재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고 있어 유효구인배율 및 실업률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음
 - 단, 최근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 영향이 대부분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취업확률의 증가와 이직확률의 감소로 특히 제조업의 이직확률이 안정되고 있는 것과 함께 고용흡수력이 큰 서비스업에서의 입직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여성 및 고령자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총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단시간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당분간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가 일정 정도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해도, 젊은 층의 전직을 촉진시켜 노동자의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유능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제2절 최근 일본 경제·고용 상태에 대한 일본 전문가 자문

□ 출장목적

- 일본의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 정책 대응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공동연구진과의 세미나 개최

□ 출장기간

- 2018.12.11.(화)~2018.12.15.(토) (4박 5일)

□ 출장지역

- 일본 도쿄

□ 일정

| 일자 | 국가/지역 | 방문기관/면담자 |
|----------------|-------|---|
| 2018.12.11.(화) | 일본 도쿄 | 오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Suga Keita 박사 |
| 2018.12.12.(수) | 일본 도쿄 | 오전: 게이오대학/Tsuya Noriko 교수 오후: 도쿄통신대/Masuda Masanobu 교수 |
| 2018.12.13.(목) | 일본 도쿄 | 오전: 도쿄 대학/Genda Yuji 교수 오후: 오비린 대학/배지혜 교수 |
| 2018.12.14.(금) | 일본 도쿄 | 오전: 주쿄대학/Matsuda Shikeki 교수 오후: 테이코 대학/Yukawa Shiho 교수, Watanabe Yuichi 박사 |

52) 内閣府 (2017) 「日本経済2016-2017」

□ 일본의 인구 및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Keita Suga 박사; 게이오 대학, Tsuya Noriko 교수) 합계출산율이 1.4에서 안정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만혼화 및 만산화⁵³⁾ 속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그러나 아직 선부른 예단은 할 수 없으며 앞으로 2~3년의 동향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도쿄통신대학, Masanobu Masuda 교수)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201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이전까지는 보육정책이 곧 저출산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즉, 실제 인구가 감소한 이후부터 저출산 대책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한 것
 - 정책이라는 것은 소관 법령, 예산, 인력의 3가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법령만이 준비되어 있고,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여 정책이 더디게 시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주쿄대학, Matsuda Shigeki 교수, 오비린 대학, 배지혜 교수) 쿄슈·중국 지방의 합계출산율이 타지역보다 높은 것이 출산율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임
 - 그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고용 상황이 좋은 것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구축임
 - 또한 지역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은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고용상황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Keita Suga 박사) 최근 일본의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인구구조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현재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주쿄대학, Matsuda Shigeki 교수) 청년 채용이 늘어나는 이유

- 경기가 좋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으며, 경기가 좋아진 이유는 정부의 경제 정책(금리 및 기업투자)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의 연령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베이비붐(단카이) 세대가 대량 은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도쿄대학, Genda Yuji 교수) 청년 채용이 늘어난 것은 청년 니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이 이유라고 보임
 - 특히 서포트 스테이션의 성과가 매우 높아진 것이 니트 비율을 감소시킨 주된 이유로 생각됨
- (도쿄통신대학, Masanobu Masuda 교수; 도쿄대학, Genda Yuji 교수) 2012년 12월 이후의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고령자고용 안정법의 개정으로 65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고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임
 - 경제활동인구가 2012년 12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아베노믹스 시작과 법령 개정과의 착시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아베노믹스의 자체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됨

제3절 결론

□ 인구구조와 경제지표

- 최근 일본의 합계출산율의 안정적인 추이는 출산을 연기하는 추세가 완화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출생아수의 감소율도 한국보다 완만한 편이었음
- 2012년 12월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유효구인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GDP 성장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임
 - 즉, 경제성장율에 비하여 유효구인배율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 유효구인배율은 전 연령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20대 초반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는 의료·복지업의 유효구인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53) 출산을 늦게하는 현상을 지칭함.

- 인구 구조적으로 볼 때,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아베노믹스의 시작 시점(2012.12)과 거의 동시에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때, 아베노믹스의 긍정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제2장 및 제5장, 그리고 전문가 자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일본의 경황인구 증가는 주로 고령자의 취업증가로 인한 것이며, 본 보고서의 분석과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은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동 정년을 연장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이미 1990년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에서 정년을 60세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65세까지의 계속 고용을 유도해 왔으며, 2012년 65세까지 계속고용이 의무화되는 과정을 거쳐 왔음
 - 일본의 경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3년 초반부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많은 일본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임
- 최근 일본의 경기 회복은 고용 측면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인구 구조에 의한 변화, 즉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보이게 된 것이라기보다 고령자 고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용구조측면에서의 변화(특히 의료·복지 일자리 확대),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의해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더욱 크다고 생각해볼 수 있음
 - 물론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제로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고령자의 고용 증가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1990년대는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버블이 붕괴되어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률이 증가하여 경기 부양 정책을 고심하던 시기였음
 - 그런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년연장과 연금수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 실제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서서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준비가 없었다면 현재보다 일손부족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됨
- 일본의 인구감소가 2008년, 우리나라는 최근의 장래 인구 추계에 의하면 2029년으로 추계되고 있음(통계청, 2019)⁵⁴⁾
 - 일본의 일손부족이 최근이라고 하면, 이러한 현상은 인구감소가 일어난 지 약 10년 후로 볼 수 있고,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우리나라는 2039년 전후로 일손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청년 고용 부진과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가 상충될 수도 있는 가능성과 함께 고령자 정년 연장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될 수도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인구 감소⁵⁵⁾ 및 일손부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일본 경제는 언제 디플레이션 극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디플레이션 극복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은 소비자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GDP 갭, 단위 노동 비용(ULC) 지표로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2017년 3/4분기에는 상기 4개의 지표가 25년 만에 모두 양(+)으로 전환되

54) 저위 가정으로 추계 시 인구 감소는 2020년으로 앞당겨지고, 고위 추계 가정 시 2036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

55)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2017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추계되고 있음(통계청, 2019)

어,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감 상승(齋藤, 2018)

○ 그러나 '디플레이션 극복 선언'에 필요한 임금상승률이 일본은행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みずほ総合研究所, 2017)

□ 2013년 12월, 내각부의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는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는 언급이 사라진 이후, 현재(2019년 4월)에 이르고 있음

○ 2018년 평균 물가 상승률은 0.8%로 지난 10년간 1%를 넘지 못하고 있음(日本經濟新聞, 2019b)

- 실물 경기는 디플레이션에서 약간 벗어날 정도로 회복 국면에 있으나, 아직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0%에 달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9월부터 실시한 '장단기 금리 목표를 도입한 양적·질적 금융완화'에서는 물가상승률이 2.0%를 넘어서도 강력하게 금융정책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극복이라는 판단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 일본의 경제·고용정책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경기가 침체됨에 따른 경제부흥 정책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짐

○ 2000년대 초 수립된 코이즈미 내각은 무엇보다 버블경제기에 발생한 막대한 부실채권을 해소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었고, 2000년대 중반에 부실채권을 정리함

- 코이즈미 내각은 시장경제를 신봉하였으며,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굵직굵직한 정부 산하 기업 및 단체들을 민영화하는데 주력함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정민영화로서, 이 정책을 걸고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총선을 한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함

○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발생한 금융 위기는 일본 경제를 다시 한 번 곤두박질치게 만들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에 몰두하게 됨

- 이 시기에는 주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생활대책에 중점을 두어 가계 및 기업의 파산 및 도산을 막는 것에 주력하였음

○ 이후 2010년대초 아베 내각이 수립되어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고, 경제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와 같이 일본 경제가 긴 시간 동안 침체를 거듭해오게 된 원인이 된 것은 버블 경제 붕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버블 경제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함⁵⁶⁾

○ 버블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 중요함

- 당시 연방준비위원회의 버냉키 등은 버블을 금융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생적인 요인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 그러나 예를 들어, 저금리가 유지된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유발되는 유포리아 타입의 자산가격 상승 같은 경우, 펀더멘털과 관계가 없는 외생적인 버블로 생각하면 매우 비논리적이 됨
- 따라서 버블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이것이 펀더멘털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수정되어야 함

○ 버블현상이 가져오는 금융위기의 규제·감독의 포인트는 경제적인 붐이 일어났을 때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포괄적이고(comprehensive), 상황에 맞게(contingent),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적(cost effective)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

- (포괄적) 금융 관련 업무들이 규제대상 외로 이행되어 가는 것을 막는 길은 처음부터 복원 가능한 범위에서 폭 넓게 금융기관을 규제해야 함
- (상황에 맞는) 규제는 필요한 상황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해야 하나, 그것이 그 이외의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움직이는 일이 없어야 함
- (비용 대비 효과적) 필요하지 않은 때에 금융기관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56) 岩田一政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2011)에서 참조함.

그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다른 (위법적인) 길을 찾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버블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버블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 만일 투자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 내에 있다면 반드시 지금이 버블인 것을 인식하지만,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 이익이 되고, 버블이 붕괴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내색하지 않음
 - 즉, 시장 내에 있는 이들은 버블을 붕괴시키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주체가 감시해야 하고, 이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버블 방지대책에 있어서 금융정책은 기본적으로 효과가 없음
 - 그 이유는 초기 단계에서 고금리라 하면 버블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일단 버블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해도 늦게 되는 상황이 발생
 - 예를 들어, 1920년대의 대공황 때의 버블은 마지막에 금리가 많이 인상되었으나 결국 버블이 붕괴되고 말았으며, 일본의 경우도 금리만으로 효과가 없었음
 - 금리가 효과가 없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증가하면, 그 만큼의 보수(return)를 생각해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버블이 시작된 후에 금리를 인상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따라서 금리보다 총량규제 쪽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버블은 결국 양의 문제, 즉, 자본 또는 돈을 어느 정도까지 동원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을 줄이면, 일본의 부동산 총량규제에도 나타난 것처럼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됨
-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20년이라고 할 정도로 장기적인 침체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에 치우친 나머지,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
 - 즉, 글로벌화, 기술혁신,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감소 문제 등의 급격한 구조적인 변화를 지난 20여 년간 경험해 오면서 경기가

순환(침체)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일본의 경기침체에 대한 정책 대응이 늦은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정책 대응이 늦은 이유는 그 만큼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임
 - 즉 당시의 국채의 잔액이 은행 총 예금의 절반 정도였으며, 부실채권문제 또한 은행의 총 예금보다 작았기 때문
 - 그리고 당시 버블이 붕괴한 이후에도 1% 내외로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대담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곽영훈(2010). 양적완화정책과 국제유동성의 흐름, 하나 금융정보 제156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김찬우·김미옥·신형익·임정기·남혜승·김병년·조여진(2008).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 가톨릭대학교.
- 서세옥(2012). 일본재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예산정책연구. 1(2), 203-235.
- 조성호·스카 케이타·와타나베 유이치·시카타 마사토·김유경·김지민(2017).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 家森信善·近藤万峰 (2011). 「グローバル金融危機に対する日本政府および日本銀行の政策対応とその効果の検証, 会計検査研究 43.
- 石井加代子·黒澤昌子 (2009). 「年金制度改正が男性高齢者の労働供給行動に与える影響の分析」『日本労働研究雑誌』, No.589.
- 岩田一政·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2011) 「バブルデフレ期の日本経済と経済政策~我々は何を学んだのか~」,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 黒田東彦 (2016). 「デフレからの脱却に向けて: 理論と実践—慶応義塾大学における講演—」, 日本銀行.
- 厚生労働省 (2007). 「住居喪失不安定就労者等の実態に関する調査報告書」.
- _____ (2016). 「平成28年度国民生活基礎調査」.
- _____ (2017). 「平成29年度労働経済白書」.
- _____ (2017). 「平成29年版高齢社会白書」.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7). 「第15回出生動向基本調査(独身者ならびに夫婦調査) 報告書」.
- _____ (2019). 「人口統計資料集」.
- 近藤絢子 (2014) 「高齢者雇用安定法の影響分析」岩本康志·神取道宏·塩路悦朗·照山博司編『現代経済学の潮流2014』東洋経済新報社.
- 斎藤麻菜 (2018). 「デフレ脱却宣言って?」, 第一生命経済研レポート2018.01.
- 阪本節郎·原田曜平 (2015). 「日本初! たった1冊で誰とでもうまく付き合える世代論の教科

書」, 東洋経済新報社.

東洋経済. (2018). 「『ビジネスパーソンを襲う「孤独」という病』, 東洋経済新報社.

中央法規. (2017). 「社会保障入門2017」.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2011) 「バブルデフレ期の日本経済と経済政策」, 小峰隆夫 (編) 第1巻「日本経済の記録-第2次石油危機への対応からバブル崩壊まで-」.

内閣府 (2009a). 「月例経済報告」, 内閣府.

_____ (2009b). 「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 (ひきこもりに関する実態調査)」.

_____ (2017). 「日本経済2016-2017」.

_____ (2018). 「平成29年度 少子化の状況及び少子化への対応施策の概況」.

日本経済新聞 (2019a). 「黒田日銀総裁「物価2%目標」為替レートの安定に資する」, 2019.4.10.

日本銀行 (2006). 「金融市場調節方針の変更について」, 日本銀行.

_____ (2010). 「『包括的な金融緩和政策』の実施について」, 日本銀行.

_____ (2016a). 「『マイナス金利付き量的・質的金融緩和』の導入」, 日本銀行.

_____ (2016b). 「金融緩和強化のための新しい枠組み: 「超短金利操作付き量的・質的金融緩和」, 日本銀行.

_____ (2016c). 「目で見る金融緩和の「統括的な検証」と「長短金利操作付き量的・質的金融緩和」, 日本銀行.

日本総研 (2018). 「アベノミックス3期目に望まれる経済政策-旧3本の矢は平時向けに再設計が必要-」, 日本総研.

_____ (2019b). 「物価, 18年度は0.8%上昇・1%割れ10年連続」, 2019.4.19.

_____ (2017). 「『量的・質的金融緩和』と経済理論—スイス・チューリッヒ大学における講演—」.

みずほ総合研究所 (2017). 「アベノミックス5年と今後の政策課題-長期政権で引き続き目指す日本経済の「真の夜明け」-」, みずほ総合研究所.

三井住友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株式会社 (2018). 「日銀の非伝統的金融政策を振り返る」, 三井住友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株式会社.

原田曜平 (2013). 「さとり世代-盗んだバイクで走り出さない若者たち」, 角川書店.

浜田浩児 (2012a). 「高齢者雇用確保措置の生計維持効果-年金支給開始年齢の引上げに関連して」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編『高齢者雇用の現状と課題』JILPT 第2期プロジェクト研究シリーズNo.1.

_____ (2012b). 「在職老齢年金と高齢者の就業, 所得分配」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編『高齢

- 者雇用の現状と課題』JILPT 第2期プロジェクト研究シリーズ No.1.
- 深澤真紀. (2007). 「平成男子図鑑 リスベクト男子としらふ男子」, 日経BP社.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5). 「戦後雇用制度の概観と1990年代以降の政策の転換」, JILPT 資料シリーズ No.5.
- _____ (2017). 「日本の雇用システムと法政策の歴史的変遷 - バブル崩壊以降の労働政策の変遷」, JILPT 資料シリーズ No.183.
- 山田篤裕 (2007). 「高齢者の継続雇用義務への企業の対応 - 賃金・年収水準調整を中心に」,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編『労働政策研究報告書』No.83.
- _____ (2012). 「雇用と年金の接続 - 在職高齢年金の就業抑制効果と老齢厚生年金受給資格者の基礎年金繰上げ受給要因に関する分析」, 『三田学会雑誌』第104巻4号.
- _____ (2015a). 「特別支給の老齢厚生年金定額部分の支給開始年齢の引上げ (2010年) と改正高齢者雇用安定法による雇用と年金の接続の変化」, 『三田学会雑誌』第107巻4号.
- _____ (2015b). 「高齢者雇用と年金の接続 - 雇用政策および年金制度改革の影響評価」, 西村淳編『雇用の変容と公的年金 - 法学と経済学のコラボレーション研究』, 東洋経済新報社.
- _____ (2017). 「年金支給開始年齢引上げに伴う就業率上昇と所得の空白」,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編『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高齢者雇用』, JILPT 第3期プロジェクト研究シリーズ No.2.
- 山本勲 (2008). 「高齢者雇用安定法改正の効果分析 - 60歳代前半の雇用動向」, 樋口美雄・瀬古美喜編『日本の家計行動のダイナミズム [IV] 制度政策の変更と就業行動』, 慶応義塾大学出版会.

홈페이지 및 URL

法務省「在留外国人統計」(법무성 「재류외국인통계」)
 (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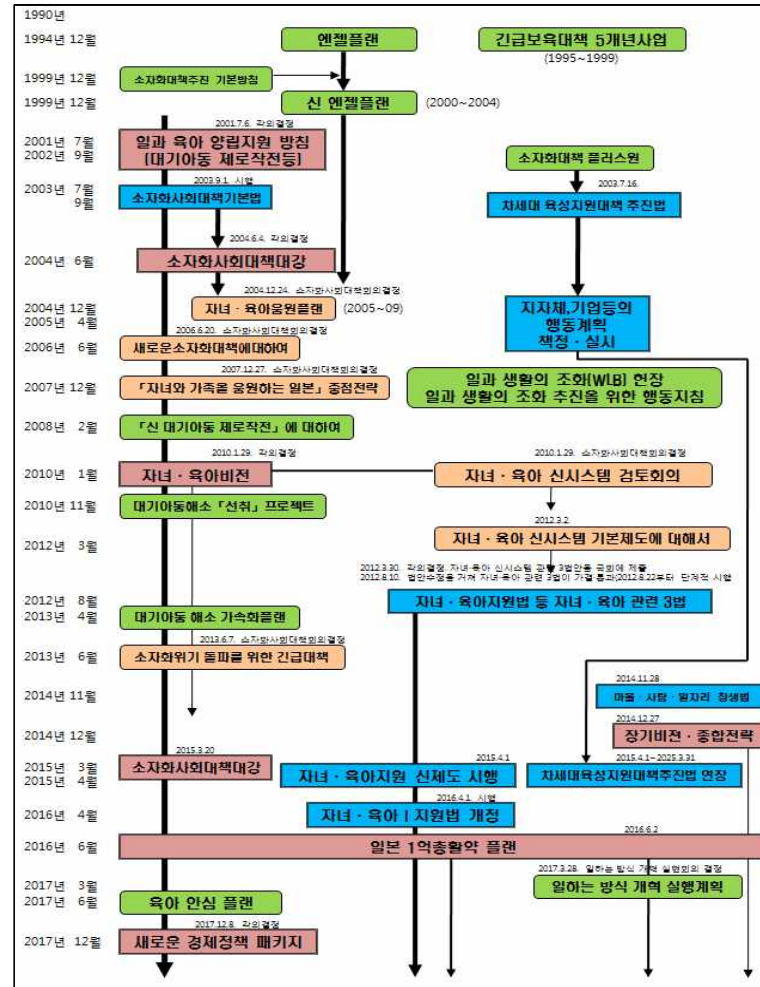
厚生労働省「「外国人雇用状況」の届出状況まとめ (平成30年10月末現在)」(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상황 정리, 2018년 10월 말 현재)
 (https://www.mhlw.go.jp/stf/newpage_03337.html)

内閣府ホームページ(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5.cao.go.jp/keizai1/abenomics/abenomics.html
 https://www8.cao.go.jp/kourei/index.html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
 https://ja.wikipedia.org/wiki/骨太対策(골태방침 위키피디아)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65/list.do(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総理官邸ホームページ(총리관저 홈페이지)
www.kantei.go.jp/jp/headline/seicho_senryaku2013_old.html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2615#self(콘도 다이ске (도쿄 리포트)일본 정부의 '2018골태방침' 과 인구정책의 향배 2018.8.17. 중앙시사매거진)

부록

[부록 그림 1] 일본의 저출산 대책 흐름



자료: 内閣府 (2018)